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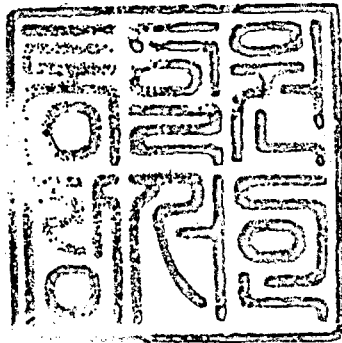
統一獨逸과 韓半島

연구책임자 : 양 성 철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박 성 조

(독일 자유베를린대 교수)



統 一 院

책을 내면서

본 연구는 통일원이 「남북한 교류협력대책기발」 사업의 일환으로 양성철, 박성조 두 교수께 위촉한 특수과제 용역의 결과보고입니다.

본 연구는 독일통일과정을 경제·통화·사회통합단계 → 정치적 병합단계 → 총선단계로 세분화하여 각 단계별 통합추이와 문제점, 여론동향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중심으로 독일통일이 남북한 통일에 주는 시사점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연구는 집필당시(10월초)의 시간적 한계로 인해 독일통일의 전과정을 연구의 대상으로 포괄하지 못하고 동서독 정치병합이 이루어진 10월 3일까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독일통일과정에서 제기된 국내외적 문제점과 난관을 극복하고 끝내 통독을 실현하는 서독정부의 통일전략의 실천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동서독 통합 과정에 관한 1차자료 및 여론조사 등을 광범위하게 활용함으로써 통독과정에 나타난 각 정당, 단체간 논쟁의 추이, 계급·계층별 여론동향 및 동·서독인 상호간의 Mirror Image와 통일의식의 변화과정을 생생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분단민족사를 극복하고 통일민족사를 열어가자는 동서독정부와 국민의 용기와 슬기를 배울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국가간 통합이라는 추상적인 명제나 논리로서가 아니라 독일민족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로서 통독과정을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글은 통독과정의 구체적이고 생경한 분석·정리에 기초하여 이를 남북관계의 현실에 재조명함으로써 남북한 통일을 대비한 우리의 정책과제와 대책마련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책자가 통독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의 증진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연구 및 정책수립시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아울러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반드시 통일원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1990. 12

통 일 정 책 실

목 차

☒ 책을 내면서	
☒ 저자서문	7
☒ 요약문	9
제1부 동서독 통일실현 과정의 점검	23
1. 동독의 무혈혁명	23
(1) 혁명의 성격	23
(2) 무혈혁명의 운전자	25
(3) 「우리는 국민이다, 폭력은 아니다.」 (Wir sind das Volk, Keine Gewalt)	28
(4) 호네커 공산독재 퇴거와 크렌쯔 과도정권 등장	31
(5) 평 가	34
2. 동서독 통일의 제1단계	37
(1) 독일민족의 재회 : 독일민족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37
(2) 동독 민주주의의 첫 실험 : 원탁회의	41
(3) 동독 공산당의 말로	45
(4) 모드로 정권의 등장과 동서독의 접근	46
(5) 경제 • 통화통합구상의 대두	67

(6) 동서독인의 '통일의식' 비교	70
3. 동독에서 첫 민주주의 선거 :	
서독정당 영향하의 동독정당	76
(1) 선거전 : 「우리는 민주주의 아기들」	76
(2) 동독 민주정부의 출발	78
4. 동독에 있어서 40년간 사회경제체제의 유산	81
(1) 40년간 사회경제체제의 유산	81
(2) 통일비용	82
(3) 통일이나, 병합이나	83
(4) 동독개발은 서독기업인에게 일대 도전	87
(5) 통화통합으로 가는길 : 1 : 1과 1 : 2	93
5. 제1차 통합조약과 정당간의 논쟁	99
(1) 경제·통화·사회통합	99
(2) 경제·통화·사회통합의 내용	102
(3) 경제·통화·사회통합 이후의 '통계'	104
(4) 경제·통화·사회통합 이후의 평가	106
6. 경제·통화·사회통합 이후의 상황	111
(1) 동독의 상황	111
(2) 서독인의 투자	121
(3) 협력형태	126
(4) 신탁회사	128
(5) 상공회의소 설치	132
(6) Cocom규제 자유화	133

(7) 통합 두달 이후	133
7. 동서독 통일의 제2단계	150
(1) 내적측면	150
(2) 외적측면	167
제2부 남북한 통일정책에 주는 시사점	173
1. 본질적 차원	174
(1) 상대적 불변요인	174
(2) 상대적 가변요인	186
2. 기술적 차원	205
(1) 동서독 통합과정의 시사점	205
(2) 통일에 따르는 문제	219

저 자 서 문

본 연구서의 목적은 독일 통일의 현장에서 직접 관찰한 것과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문헌자료 및 여론 등을 추려 보면서 독일 통일의 흐름이 한반도 통일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고찰해 보는 것이다.

연구의 대상은 독일 통일의 내적 차원을 중심으로 했다. 왜냐하면 첫째, 통일 과정에서 양국가가 어떻게 수렴하는가가 근본적인 통일조건이기 때문이다. 외부로부터의 관찰은 제한되어 통일의 내적 측면을 상세히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히들 「독일 민족의 특성」이라는 문화적 요소에 기인시키는 선입견이 많기 때문에 통일의 내적 측면을 반사시켜 보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둘째, 통일의 외적 측면은 통일과정에서 예상외로 용이하게 해결됐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관하여 비교적 잘 알고 있다. 많은 국제매스콤은 통일의 외적 측면을 잘 기술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 알려진 외적 차원을 일방적으로 강조함으로써 흔히 제기되는 독일통일에 관하여 오해가 많다. 그 전형적인 예가 「통일수상」이라고 칭해지는 「콜」수상이 국내에서는 다른 차원에서 평가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동독인에게 통일과정에서 약속한 바를 지키지 못하는 정치가(일부 사람은 권력만 유지하려는 정치사기꾼)로 간주되고 있다.

다시 말한다면 독일 통일에 관한 일반적인 견해는 「내적측면」은 더욱 착잡했으며 앞으로는 더욱 그러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 한반도 통일은 앞으로 어떠한 측면에서 보아야 할까? 한반도 통일 또한 「내적측면」이 보다 훨씬 어려울 것 같다. 우선 「남한」에서의 다양한 의사의 민주주의적 수렴, 이를 토대로 「남북한의 수렴」은 지금까지 통용되어 온 「조국통일」이라는 추상적 구호만으로써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과는 달리 「내적」, 「외적」 측면이 어떠한 메카니즘에 의하여 해결될 것인가가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9월 8일 남북한 총리회담은 끝났다. 양독 총리회담이 있는 것이 꼭 20년 전이다. 20년이후 독일 「통일」이 가능해졌다. 한반도 통일은 언제 가능할지? 속단하는 것은 점성학의 기교일 것이다. 그러나 독일 경험은 우리에게 시행착오를 범하는 결정과 행위의 위험도를 낮추어 줄 수 있다고 본다.

지금 내용은 이 보고서는 시간의 제한을 받아 독일 제2차 통화통합이 가조인되는 시점까지만을 다루었다. 앞으로 있을 동독의 서독에로의 병합(10월 3일), 동독의 연방주선거(10월 14일), 통일독일의 첫 총선거(12월 2일), 이를 토대로 한 통일 독일정부의 발족, 나아가 통일 과정의 「내적, 외적측면」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다.

1990. 10

양 성 철, 박 성 조

요 약 문

10월 3일은 독일에서 새로 제정된 국경일이다. 이날 동독이 서독에 병합됨으로써 (Beitritt) 그간 분단된 독일이 「통일」되는 날이다. 12월 2일 통일된 독일에서 처음으로 총선을 치루고 나면 독일은 정식으로 통일된 합법정부를 이룩하게 된다.

작년 11월 9일 동서독의 장벽이 무너지고 난 이후 불과 일년이 채 지나기 전에 독일통일은 가능하게 됐다. 본인은 베를린의 「벽」이 생길 때와 무너질 때를 목격했다. 벽이 생길 때는 유학생으로서, 무너질 때는 이 곳 대학 교수로서 즉, 냉전이 비동할 때 해소될 때 이를 둘러싼 현실적, 정책적 변수에 대한 토론을 체험하고 있다.

독일 통일은 유럽, 나아가서는 세계정치, 경제, 학문, 과학, 기술 분야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분단의 운명을 같이 나누고 있는 우리에게 독일 통일이 당연히 그 누구보다도 선망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독일통일이 물론 우리 한반도 통일의 「서문」이 될 수 없으나 실험할 수 없는 「우리 통일의 미래」에 관하여 「역사적 이론」으로서 우리의 「실천이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우선 통일 개념정리가 필요하다. 종전에 쓰여지던 독일(재)통일 (Widervereinigung)이라는 말이 그냥 통일(Einigung)로 바뀌어졌다. 통일은 2차 대전 전상태로 원상복귀하는 의미로서 현재 외국주권속에 들어있는 「독일영토」(예를들면 폴랜드의 오더나이세강 동부지방)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현재 「동·서독」이 가지고 있는 「영토」위에서 양

국이 통합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종전에는 「독일통일」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았다. 오히려 「동·서독」의 「접근(接近)」이라는 말을 썼다. 「접근」이라는 말은 「냉전」 속에서 쓰여진 「통일」의 무가치성을 폭로하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가 공존하는 입장에서 기능주의적 수렴을 말한 것이다.

독일통일 의미의 두가지 Connotation은 지금까지 독일통일 진로 설정에 있어서 독일 국내의사 결정과정중 정당간, 사회단체간, 학자간에 논쟁을 동반해 왔으므로 이것은 우발적인 뜻이 아니다. 즉, 독일 통일에 뒷받침되는 요소로서 독일통일은 현존하는 유럽체제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과 또한 끊임없는 노력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이미 50년대 아데나워수상이 「불·독 화해」를 바탕으로 하는 60년대 북대서양 동맹체제를 우선하던 시대에도 동구, 동독접근은 우발적이 아니었다. 70년대초 브란트의 동방정책(Ostpolitik)의 성공도 서구진영 속의 「독일의 통일에 관한 이해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아데나워의 서방정책이 없었더라면 절대 불가능했을 것이다. 즉, 동서접근은 40년에 걸친 노력의 결실이다.

더욱이나 우리나라의 분단역사와 독일을 비교할 때 역시 「강자가 강자를 돕는다」는 괴이한 Common sense가 상기된다.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나라였으며 우리나라는 일본제국체제에서 바로 냉전체제로 옮겨 갔다. 독일은 현대전쟁을 수 차례 주도적으로 경영한 나라인만큼 흔히들 「전쟁의욕」을 「게르만 민족성」의 특징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럼 이러한 「전쟁」을 선호한다는 게르만 민족이 통일의 필요성을 어떻게 동서구 강대국, 인접국가로 하여금 납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을까?

첫째, 독일통일의 엔진은 서독의 성공적인 민주주의 실현이다. 독일은 20년대 바이마르공화국의 단명한 민주주의가 히틀러 독재로 넘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 이후 전후 서독은 미·영·불 서구 민주 국가의 정치문화를 습득하여 독일 역사상 가장 길고 안정된 서구 민주주의를 향유하고 있다. 나아가서 공동결정권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적 노사관계를 운영하는 일등 산업민주주의 국가로서 등장했다. 그들은 「강한 노조활동은 생산성을 저조하게 한다」는 선입관을 반증했다. 금속노조가 가장 강하다고 한 독일 자동차공업은 두말할 것 없이 서구에서 가장 강하다.

둘째, 독일통일의 엔진은 서독의 경제력이다. 서독은 전후 EC와 북대서양 동맹속에서 경제적으로 「제2위, 3위」에 놓여 있는 국가로서 「경제 중심주의」를 국가목적으로 했다. 「경제 대국, 정치소국」이라는 것을 독일인은 거시적 차원에서의 구호로 했다. 서독은 전후 미국의 막대한 원조와 자기 자신들의 끊임없는 근면성, 창의성을 발휘하며 시장경제체제에 사회주의적 색채를 가미해 가는 진화적인 「사회적 시장경제체제」(Soziale Marktwirtschaft)를 채택했으며 독일인의 Mentality속에 뿌리 박혀 있는 국가(deus ex machina)를 무력화, 그러나 효율화시키는데 성공했다. 이것이 바로 「라인강 기적」의 뒷받침이 됐다. 「과거청산」(Vergangenheitsbewältigung)은 단순히 「히틀러 정권때 개개인의 행위에 대한 반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차원에서 전쟁없는 「유럽통합」실현에 직접 공헌하는 것이었다. 프랑스 Elite(Schuman, Monnet등)들이 주장한 「유럽구상」 「EC」구상에 서독은 프랑스를 동반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우방국, 재정지원국이 되었다. 그 힘은 서독이 가지고 있는 인접국가와의 국제분업이다. 독일의 가장 중요한 경제파트너는 프랑스를 위시한 EC

가맹국이다.

서독은 그간 세계무역에서 제일위에 올라와 있으며, 가장 안정된 생산성이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동반하는 과학기술은 유럽에서 절대적인 우위에 있으며, 동구권, 서구권의 교차점에 놓여 있다. 서독이 동구무역에서 가장 우위에 와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세제, 독일통일의 엔진은 서독 사회·문화단체들의 활약이다. 서독에서는 50-60년대 말까지 다윈주의의 뿌리가 박혀있지 않았다고 흔히들 말했다. 70년대에 들어오면 2차대전이후 세대가 사회생활에서 점차 주도권을 가진다. 그리고 「경제성장주의」고수에서 오는 사회빈곤, 환경, 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에 관한 많은 반성이 속출했다. 「경제성장의 한계」는 새로운 차원의 사회·문화의식을 가져왔고, 특히 반핵운동, 녹색운동 등은 무엇보다도 국제성을 띄기 시작했다. 탈산업사회의 제문제는 국제성을 갖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 문제해결을 위해 「무력없는 저항」 「비공식 집단의 단결」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동·서독간의 민간·사회단체차원에서의 연대관계, 공동행사는 고르바초프 이전부터 추진됐고, Perestrojka에 의해서 더욱 가속화됐다.

독일통일의 이와 같은 세가지 요소는 우리나라의 「독일 통일토론」에서 고려되지 않고 다만 「게르만 민족의 민족성」을 지적하는 문화민주적 입장, 혹은 고르바초프의 Perestrojka를 지적하는 「국제환경론자」가 있으나 본인은 전기한 문화주의적 입장이 오히려 통일실현을 「불가능케할 수 있는 것」도 설명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선입관은 철저히 수정될 필요가 있다.

물론 Perestrojka의 독일통일로의 공헌은 말할 것도 없다. 향가리,

폴란드, 체코보다 훨씬 스탈린주의적이었던 「호네커」공산당정권은 끊임없는 「정치 자유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Vox Ponuli)를 당할 수 없었다. 작년 11월 9일은 필연적인 전환점이었다.

「정치적 자유」를 얻은 동독인은 금년 3월 18일 최초로 민주선거를 치루었다. 동·서독의 두 민주정부는 앞으로 4—5년간 연방제 형식으로 점차 수렴하여 통일로 가자는 논의가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공산권에서 가장 부유하다는 동독이 서독, 서구경제에 비하여 얼마나 빈곤하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사회주의 경제(소위 말하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주의”)의 허상이 나타났다. 이미 1929년 소련의 사회주의 경제에 대하여 George Halm의 「사회주의 경제의 성공은 장기적으로 보아 불가능하다」라고 한 예언은 반세기가 지난 동독에서 사실로 입증됐다.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와의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회주의 이론가들은 현실면에서 「국가」와 「공산당」의 이중적 명령체제가 노동의욕을 파괴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사회주의의 미래, 이상향은 얼마나 황홀한가?」 그러나 현실을 박탈당한 경제주체는 서독의 현실을 하루라도 빨리 자기 것으로 하고 싶어 했다.

연방 대통령 폰이바이첵커에 의하면 독일에서는 지난 2백년간 혁명이 성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동독의 「무혈혁명」은 과연 무엇인가? 이를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 학자들의 과제이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의 「사회주의내에서의 혁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전통적으로 「사회주의의 자본주의에 대한 우위설」을 고수하려던 주장(특히 R. Bahro, R. Heinrich, R. Steiner 등)을 현시점에 끌어와 다시금 「사회주의 실현」을 해 보겠다는 음성은 혹시 동독 공산당(이제는 이름조차도 바뀌 버렸다. PDS=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

mus) 일부 사람들의 노스탈지로서 남게 됐다. 사회주의 논쟁은 현재 불경기다.

그러나 사회주의 이론가들은 사회주의 실패원인을 「계획경제」 자체에, 혹은 「사회구조의 논리」에, 혹은 「경제정책 운영과의 비합리주의」에 두는 다양한 학문적 시도가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학자는 협동조합식 사회주의(현대적 사회주의)를 동독에서 주장하는 자가 있으나 결국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를 가미하지 않으면 (국제경영, 국제자본)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현실을 박탈당한 동독인들은 시간이 소모되는 단계적 통일을 반대하고 3월 18일 총선거 결과는 서독 여당이 제안한 경제·통화 통합을 하루라도 빨리 달성하는데 대한 국민투표였다. 동독인들은 동독정부에 대한 아무런 신념과 기대가 없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서독의 부유한 물질적 생활」이다. 동독인은 「동독의 아이덴티티」를 거부했으며 하루라도 서독 속으로 병합되기를 결정하고 말았다.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급속히 시장경제체제로 변혁하는 것은 독일인이 인간역사상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런 구체적 준비, 정책적 도구도 마련할 수 없었고 다만 서독 정치가, 경영자는 「강단」에서 「시장경제」를 설교하는 것 뿐이었다. 생산성이 극도로 저조하고, 지금까지 효율성이 아주 낮은 중화학 공업에만 위주했던 경제체제를 서독통화권(1:1)으로 통합시키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에는 정반대되는 것이었다. 많은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콜」 수상은 「역사적 순간」에 경제적 합리성보다 「정치우선주의」 원칙위에서 경제·통화 통합의 결단을 내렸다.

「정치우선주의」는 또한 「사회우선주의」와 맞서게 됐다. 「사회우선주의」(서독의 사민당주장)는 「경제 통화 통합」을 아무런 준비조

차 없이 정치적으로 밀고 나간다면 동독경제는 더욱 파산상태로 빠져 들어가 많은 기업은 문을 닫게 되고, 많은 실업자가 생기게 되고, 숙련공, 기술자는 임금소득수준이 높은 서독으로 이주하게 되고 동독에 공동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동독을 재건할 경영자, 숙련공을 동독에 잔류시키는 정책과 동시에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하는 자가 많이 생김으로써 나타날 서독의 주택문제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다. 물론 서독여당은 사회주의 경제를 일대 변혁하는 데서 오는 진통은 「독일 국민 전부가 연대책임으로 감수하라」고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상 서독인 약 3분의 1은 독일통일에 무관심하며 「독일 재건을 위한 재정부담」에 관해서는 유달리 좋아하지 않았다. 동독인 85%는 하루라도 빨리 「통일」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지금 동독경제사정은 대단한 불황이다. 생산성은 극도로 저하됐고, 실업자, 단시간 노동자는 현재 백만을 능가했다. 수많은 동독기업은 문을 닫게 됐고 기대했던 서독기업의 제조업 투자는 거의 전무상태이며 기업인은 아직도 개인재산, 사유권문제가 전연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동독에 대한 투자를 근본적으로 주저하고 있다. 상업서비스 계통에 진출한 서독기업은 아직도 수많은 공산당당원, 혹은 안보기관에서 일하던 사람들(Stasi)이 각 기관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기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젊은 경영자 세대를 육성하지 않고는 도저히 경제재건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동독인의 노동의용이 얼마나 저조한가는 상상하기 힘들다. 경제·통화통합이후 노동하지 않아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실업보험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업자로서 서베를린과 서독에 와서 「암노동」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동독인은 동독제 상품, 야채등을 구입하지 않는다. 그 곳의 「품질이 나쁘다」고 그냥 맹

목적으로 확신하고 무엇이든지 서독, 서구상품을 사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서 동독의 소매상은 거의 파산상태로 들어 갔고 그 대신 서쪽의 소매상은 대단한 호황을 맞고 있다.

이와 같은 동독인의 「자포자기현상」은 물론 동족인 부유한 서독으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동독의 identity」를 하루라도 빨리 포기하고 다시는 「사회주의」를 추종하지 않겠다는 철학이 뒷받침되어 있다.

동독은 수일전 10월 3일에 서독에 합류되기를 원한다고 국회에서 결의했다. 10월 14일은 동독 연방5개주의 선거이다. 기민당, 사민당 각주의 대표입후보자는 대부분 서독의 정치가들이다. 12월 3일에는 동·서독 통일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자유선거이다. 이 선거는 바로 동·서독이 정식으로 통일독일합법정부를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간 통일의 외교문제에서는 카우카서스에서 고르바초프로부터 통일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받고, 통일된 독일은 대서양동맹(NATO)에 남게 되고, 폴란드와도 오더 나이세 국경이 영구한 국경인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10월초에 있을 헬싱키체제회담에서 모든외교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형성하기까지 서독외교는 항구한 노력을 해왔다. 독일통일문제를 유럽화, 국제화하는데 성공했다. 서독 외상 '겐셔'의 활약을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 독일 통일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선 주목해야 할 점은 '독일민족성'이다. 동·서독의 국민성(만약 이와 같이 한국인의 민족성을 단편적으로 논할 수 있다면)은 전

연 다르다. 서독의 일반적인 민족성의 흐름은 현재 대단히 '유럽'지향적이다. 이에 반하여 동독인은 대단히 '독일'지향적이다. 서독인(전후세대)의 대부분은 독일통일이 유럽통일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물론 서독정치가들의 철학도 독일통일을 유럽통합의 큰 틀속에 집어 넣지 않고는 비현실적이고 특히 EC가맹국은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이에 반하여 동독인은 우선 부유한 '서독형제'와 같이 통일된 독일에 살고 싶다는 것이 그들의 포부이다. 공산주의자였던 동독인은 거의 반세기동안 유럽의 움질임을 맛보지 못하고 막연한 '독일인'이라는 차원에서 '물질적 통일'을 회구하는 것이 유감스럽다.

독일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시사점은 서독의 민주주의이다. 서독인은 전기한 바대로 독일역사에서 가장 길고, 안정된 다원주의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했다. 따라서 서구민주주의국가들에게 독일이 우호적인 파트너가 될수 있다는 희망과 신념을 줄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독일통일의 저력이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통일이라는 '정치사업'에 여·야당 할것없이 근본적인 동의는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었고 다만 방법과 수단에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국외적으로는 상기한 대로 '서독'은 미, 영, 불 나아가서는 소련에 대해서도 믿음을 줄수 있는 파트너가 됐다는 것이며 과거의 '전쟁 선호'의 '독일민족성'을 완전히 해소할수 있었다는 것은 서독민주주의의 강점이라고 볼수 있다.

독일통일의 원동력을 분석하면서 빼놓을수 없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서독의 경제력일 것이다. 그러나 서독의 경제력은 어디까지나 산업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경제적 효용성이다. 다시 말한다면 건전한 민주주의적인 노사관계, 공동결정권 위에 실현됐던 사회민주주

의가 얼마나 통일촉진의 저력이 될 수 있는가는 표현하기 힘들 정도이다.

또하나 중요한 것은 독일통일 문제의 국제화, 유럽화이며 상기한 대로 서독인은 독일통일은 반드시 유럽의 평화안전체제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실현해 왔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독일은 우발적, 일시적이 아닌 항상적, 영구적 노력을 해 왔다.

또한 서독은 독일통일 문제를 뒷받침하는 내외적 제도적 장치를 꾸준히 마련해 왔다. 내적 제도적 장치로는 독일연방기본법 23조의 동독 주(Lander)가 병합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준비, 외적 제도적 장치로는 7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소, 대폴란드 조약, 동·서독 기본조약, 미·영·소·프랑스 점령국과의 기본조약, 금년 독일·소련 우호조약, 2+4 독일에 관한 최종 타결조약, 동·서독 통일 조약 등이다. 구체적으로 남북 통일과업에 시사하는 것으로는 ① 영토문제(중국 북한, 소련 북한 국경선 문제, 백두산 문제), ② 대한민헌법 3조, 4조 부조리 문제 및 독일연방 기본법에 상응하는 헌법조항 삽입문제, ③ Lander → Bund형 지방자치에 입각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방자치 실천문제(단계적 대안으로 현존하는 당수 공천권 관행을 철폐하고 지방, 지역주민 주도의 경선에 의한 지방자치 단체장, 지방의회후보, 국회의원후보 결정방식의 도입과 정착, 전면적 지방자치제 전국적 실시보다는 Pilot Project로 일부 도시를 지정, 정당당수 공천제를 배제한 지방, 지역주민이 직접 후보를 뽑는 부분적, 단계적 지방자치 실현), ④독일연방정부가 실시 실천해 온 사회보장제도의 점진적 채택(연금, 건강, 실업, 사고보험제도의 확충, 노사단체 교섭자유성, 파업권, 노사공동결정권, 해고 방지법, 기업내 민주주의의 긍정적 검토 및 점진적 실천 실험), ⑤ 남북 통일

의 외적 걸림들은 독일보다는 훨씬 유리하다. 독일은 2차대전 「주범」으로 연합군이 「권리」를 앞세웠고 「통일독일」이 아직도 유럽과 세계에 군사안보위협의 의구심을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하는 반면, 남북한은 미·소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이 한반도 분단의 「책임」을 1차적으로 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지도자들 간의 진실에 기초한 민족적 숙원의 해결이라는 합의만 있다면 「한반도 문제의 한국주도 해결」은 훨씬 쉬운 일이다. ⑥ 가장 큰 걸림들은 북한의 기존 지도자와 집권세력으로 보인다. 동독에서 울브리히트 → 호네커 → 크렌츠 → 기시 등 공산당내 집권세력의 붕괴과정과 아울러 민주화에 기반한 자유총선이 선행되었다는 것은 남북한 통일과업의 실현에 있어서 큰 시사점이다. 이는 남한이 추구하는 김일성과의 정상회담의 신중한 재검토, 나아가서는 북한 자체적 정치-정책 변화의 선행이 강조되어야 할 근거가 된다. ⑦ 동독인이 동독혐오증을 느끼게 된 이유는 동·서독간의 통행, 통상, 통신의 확대가 그 주원인이다. 따라서 이는 남북한에 주요한 시사점이다. 남한이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북한이 남한의 현실을 바르게 터득하는 것이 제1차적 통일작업의 과제이다. 우선 남한부터라도 파격적으로 북한의 대중매체, 출판물, 연예물을 개방, 허용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남한은 서독이 아니다. 통일의 중요한 관건은 우리의 손아귀에 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독일에 비해 늦게 시작한 진통을 겪을 것이며, 특히 '김일성'과 같은 괴이한 대상이 '진통'을 가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통은 항상 과도기적이다. 결국 남북한 통일의 관건은 우리가 수년전 시작한 민주주의를 더욱 촉진하고 통일문제를 공개화, 민주화, 국제화 하는데 있다고 본다. 즉 통일을 서두르기에 앞서 남한내의 착실한 민주화, 자유화, 사회화 그리고

내적 외적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든 제도적 법적 장치를 제거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略 字 表

- DA : Demokratischer Aufbruch
DSU : Deutsche Soziale Union
DDR :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CDU : 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
CSU : Christlich-Soziale Union Deutschlands
SPD :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BRD : Bundesrepublik Deutschland
PDS : 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
FDP : Freie Demokratische Partei
B90 : Bündnis 90
Grüne : Grüne Partei
NDPD : National 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DFD : Demokratischer Frauenbund
KPD : Kommunistische Partei Deutschlands

제1부 동서독 통일실현과정의 점검

1. 동독의 무혈혁명

(1) 혁명의 성격

「혁명」의 성과를 평가하는 전문가들은 목적달성을 문제시하는 경향이 허다하다. 그러나 목적달성의 과정이 문제될 때 흔히들 「위로부터」, 혹은 「밑에서 부터」의 혁명이라고 구분한다. 그러나 동독의 혁명을 평가하는 사람은 이 혁명을 「중간으로부터의 혁명」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을 바꾼다면, “노동자와 농민위주의 밑에서 부터의 혁명이 아니고, 또한 정부, 혹은 독재체제 자체의 내부, 상부로부터의 개혁·개선도 아니다”라고 규정하면서, 동독의 혁명은 지식인, 종교인, 문예인, 예술가등의 전통적인 혁명의 Träger가 아닌 「중간층」(중산계급이라는 말은 아니다)이 위주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통적인 혁명이 대개 무력에 의한 사실상의 힘의 전복으로써 사망자를 내는 「유혈혁명」을 전제하는데 반해 동독의 혁명은 1989년 11월 9일 「베르린의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한 사람의 인명도 희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동구 제국에서 있었던 「혁명」들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 11월 9일까지의 소위 말하는 「평화스러운 혁명」(Friedliche

Revolution)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전개되었던가?

① 동·서독간의 특별한 관계(분단국가이지만)에 관해서는 이곳에서 부연하지 않기로 한다.

② 양독간의 협정에 의한 소위 말하는 「합법적인 이주」(Ubersiedlung) 즉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이주에 많은 규제(년령, 친척관계 등등)가 있었다.

1989년 5월 2일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국경이 개방되자 많은 동독인들은 헝가리 부다페스트 서독대사관에 몰려들어와 「서독으로의 이주신청」을 하기 시작했다.

8월 22일 프라하에 있는 서독대사관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대사관 업무를 중지했다. 8월 24일 헝가리 정부와 세계적십자사의 협조에 의하여 서독대사관에 머물고 있던 동독인 일부는 서독으로 이주하게 됐고 동베를린에 있는 서독상설대표부에도 수많은 동독인이 이주신청을 하게 됐고, 또한 바르샤바의 서독대사관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 대사관의 문을 닫게 됐다. 결국 각 동구제국에 소재하는 서독 대사관에 이주신청을 한 동독인에게 대규모 「제1차 이주 허가」가 동독정부에 의하여 내려졌다. 10월 1일 프라하에서 6,000명, 바르샤바에서 800명이 서독에 도착했다. 10월 4일 이후 제2차 대량 이주가 시작됐다. 바르샤바로부터 특별열차가 서독에 많은 동독인을 운반했다. 10월 24일 동독정부는 동독인의 자유여행을 허락했다.

③ 대량규모로 동독인이 서독으로 이주하고 동독내서도 동독정권에 대한 축적됐던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9월 4일 라이프찌히市 니콜라이(Nikolai)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량이주 대신 여행자유」를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 9월 7일 동베를린 알렉산더 광장에서 5월 7일 시행됐던 「지방선거에 부정이 있

었다」 하여 시위가 있었으며 약 80명의 참가자가 체포됐다. 9월 10일 동독 개신교회 예배중 동독인의 여행자유를 요구하는 탄원서가 낭독됐다.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한 숫자】

기 간	인 원
제2차 세계대전후~1948년12월31일	732, 100명
1949년 1월 1일~1961년 8월12일	2, 686, 942명
1961년 8월13일~1989년 12월까지	959, 905명
총 계	4, 378, 962명

(2) 무혈혁명의 운전자

상기와 같이 「정당」으로써 야당보다도 공산당(SPD)내에서의 야당 혹은 공산당과 동조한 블록정당(DBD, CDU, NDPD)속에서 「야당적 요소」가 있었으나 사실상 다음과 같은 사회주의체제 혁신을 주장하는 단체의 발생은 쉬운 일은 아니나 9월에 들어가서는 속속 생겨났다.

가. 뵘러너의 모임(Bohlener Plattform)

9월초 뵘러너의 여러 사회주의 제단체의 모임(기독교인, 마르크스

주의자, 동독 공산당원 등 참가)에서 동독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혁신이 긴급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단체는 공동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주지됐다. 여기서 발표된 호소문이 바로 「동독에 있는 좌익연합을 위하여」(Für die vereinigte Linke in der DDR)였다. 특히 여기서 채택된 것이 「독립사회주의 야당의 최저 콘세서」로서 동독사회 혁신을 위한 구체적 제안을 했다.

나. 「혁신89—신광장」(Aufbruch 89-Neues Forum)

1989년 9월 10일 출발하는 이 사회단체는 「국가」와 「사회」의 관계가 완전히 붕괴되어 동독인의 대부분은 「국내이민」(innere Immigration) 혹은 대량탈출 내지 이출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바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여러 단체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많은 사회단체가 혁신운동에 참가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 모임은 어디까지나 동독헌법 제29조에 뒷받침을 둔다고 했다. 회원은 대부분 개신교인, 학자, 문예인이다.

9월 19일에는 상기 헌법조항에 근거하여 동독 정부에 정식 단체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제출했다. 내무성은 9월 21일 「반국가 단체」라고 해서 인정하지 않았다.

다. 「민주주의는 지금 !」(Demokratie Jetzt)

9월 12일 발표된 「국내정치 참가를 위한 호소」는 1989년 5월 7일 지방선거에 있었던 부정선거를 탄핵하면서 소위 말하는 「정당, 국가, 국민」 삼위일체를 뒷받침하는 「국민전선」의 선거 후보자들은 국민 이익을 절대 대변하지 않으므로 「교인」과 「비평적인 마르크스주의

자」연합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독체제의 민주주의적 변혁을 위해서는 첫째, 권위주의국가에서 공화국으로, 둘째, 생산수단을 국유화에서 민영화로, 셋째, 환경 파괴와 오염으로부터 자연과 영구적인 조화로 라는 3가지의 목적을 명확히 했다.

이와 더불어 LDPD당의 기관지 Der Morgen(아침) 9월 20일자 신문에 게재된 동독 건립 40주년 기념사에서 당수 만프래드 게어라하(Manfred Gerlach)씨는 「동독은 무엇보다도 질문하는 자, 못견디는 자, 호기심을 가진자들이 필요하며, 더욱이나 ‘일상적’(공산주의 체제!)인 것에 불만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찾아 이것을 달성하는 자를 필요로 한다」(Die DDR braucht Fragende, Ungeduldigs, Neugierige; sie braucht jeden, der sich an der ‘Normalitat’ reibt und so hieft, Neues zu entdecken und dunchzusetzen)고 표명했다.

9월 24일 라이프찌히시에서 동독 제사회 단체 80명의 대표자들이 반정부 집회를 가졌다. 9월 25일 호네커 동독 공산당 당수가 장기간의 병환이후 다시 정부사무를 보게 됨과 동시에 라이프찌히시에서는 8,000명이 언론과 집회 자유를 위한 시위를 하면서 상기한 노이에스 포름을 야당단체로써 허락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이곳 시장이었으며 나중에 총리직을 맡게 되는 정치가가 한스 모드로우(Hans Modrow)씨다). 이 시위때 다시 수십 명이 체포됐다.

라. 사회민주당

9월 26일 동독 사회민주당이 발족했다. 발기인은 다음에 사민당 당수였던 I. Bohme씨와 현재 동독의 외상 Markus Meckel씨였다.

마. 베를린어 앙상블(Berliner Ensemble)의 성토

예술, 문화인들의 민주화, 혁신 성토에는 동독연극협회, 문예인 협회, 예술인 노조가 참가했다.

바. 민주혁신(Demokratischer Aufbruch)

노이에스 포름 출발이후 10월 1일 또 하나의 야당 단체가 발족했다. 참가자는 (개신)교인 목사, 문예인, 의사, 법률가, 학자들이었다.

(3) 「우리는 국민이다. 폭력은 아니다」 (Wir sind das Volk, keine Gewalt)

10월 2일 라이프찌히시에서 2만 5천명의 시위가 있었다. 10월 3일은 동독 40주년 기념파티에서 호네커를 위시한 동독 정부 수뇌들은 「동독 공산국가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또 이것을 방위할 것이라고 선서했다. 10월 5일에는 막대 볼크市, 드래스덴市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10월 6일 동독 40주년 기념식에 참가한 고르바초프는 동독수상 호네커씨의 기대와는 판이하게 「동독은 하루라도 빨리 모든 사회단체들과 협조해서 현시점에서 중요한 문제와 국민들의 욕망에 적절한 정치적 해답을 추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동시에 동베를린의 구세주교회(Erlöser Kirche)에서는 동독 정부

반대단체가 공동으로 결의하여 국제연합 감시하에 동독에서 비밀, 자유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고르바초프의 더욱 유명한 말은 다음과 같다. 「늦게 오는 자는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부터 벌을 받는다」(Wer zu spat kommt, den bestrafft das Leben) 이 명언은 고르바초프가 호네커 정권에 하루라도 빨리 「혁신,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을 권고하는 뜻이며, 이것은 동독 정부가 소련의 Perestrojka 노선에 대단히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40주년 기념식에 많은 동원된 행열이 보였으나, 그 날 밤(10월 7일) 수많은 시위가 동독 각처에서 일어났다. 부른 구호는 “Wir bleiben hier!”, “Gorbi”, “Hilfuns! (“우리는 여기에 머무른다. 고르비, 도와 주세요!).” 이날 경찰과 시위참가자 간에 많은 충돌이 생겼다.

동시에 포츠담 행정구역에 있는 슈반EH(Schwante)에서 동독 시민당이 43명의 발기인에 의하여 정식으로 발족되고 역사가 이부라함. 뵈에매씨가 당수직에 선출됐다.

10월 9일 라이프찌히市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시위가 있었다(7만 이상의 참가자) 그러나 이 시위에서는 아무런 사고는 없었고 평화적이었다. 많은 사람은 사실상 경찰들이 무력으로 시위자를 해산할 것이라고 우려했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나 라이프찌히市市 계 반트 하우스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그르트 마주어(Kurt Masur)씨가 동지역공산당 서기장과 합의해서 경찰들이 절대로 무력을 사용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나아가 호네커의 후계자인 에곤 크렌쯔(Egon Krenz)씨가 어떠한 압력을 가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알 수 없으며 어떤 설에 의하면 소련의 압력에 의하여 무력사용이 금지됐다고도 하고 있다.

이 때부터 시위의 구호는 간단하고 명료하다, “Wir sind das Volk, keine Gewalt.”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마주어씨가 시위자에게 권고한 바 대로 평화스럽게 시위하는 국민이라는 것이다.

드레스덴시위에는 1만 2천명이 참가했으며 그곳 시장 베르그호퍼(Berghofer)씨는 시위대표들과 토론을 전개했다(이로 인하여 한때 시위참가자 및 일부 동독인에게는 앞으로 동독의 유망한 정치가로서 물망에 올랐다) 드레스덴 공개토론에서는 ‘9개 요구조건’이 제시되었다. (전일 시위때 경찰들의 무력행위를 규명; 언론, 시위, 여행자유; 자유선거; 노이에스포름을 단체로써 승인; 등등) 10월 10일에는 시위시 체포됐던 5,000명이 석방됐다. 드레스덴 동독공산당 지역부장인 한스 모드로우(Hans Modrow)씨도 시위참가자와 공개토론을 시작했다.

10월 11일에는 공산당 중앙정치부가 발표한 모든 동독국민과 공공연하게 토론하며 사회주의원칙하에서 혁신을 해야 한다는 성명서에 대해서 동독개신교총회 부회장인 만프레 스톨페(Manfred Stolpe)는 동독 공산당의 제안을 수용하며 범국민적인 입장에서 혁신되어야 할 구체적인 안전에 대해서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월 13일 호네커씨는 블록정당대표 및 국민전선 대표와 ‘선진화된 사회주의 사회개발에 있어서 현실적인 과제’에 관해서 토론했다.

10월 14일 「노이에스 포름」의 100명 이상의 대표들이 동베를린에서 공동 회의를 개최했다. 동시에 주목할 것은 10월초순부터 각 분야별로 여러 형태의 반항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몇가지 예를 든다면,

* ANTIFA (Antifaschistische Gruppe aus Kirche von unten)

— (10월초) — 교육계, 정당, 제국가 조직내에서 파쇼성격이 다분히 내재하고 있는 것에 반대함.

- * 「드래서덴 극장」(Schauspiel Dresden) — 10월초
- * Frohliche Friedrichshainer Friedensfreunde (10월초) — 평화 운동자들의 모임으로서 우익계통(Skinhead)인데 감옥에서 단식투쟁하는 것을 권장함.
- * 「정치범 석방」운동(Mahnwache für die politischen Gefangenen) — 10월초
- * 「동베를린 예술 아카데미」 성명 — 10월초
- * 「찌타우 게르하르트 하우푸트만 극장」 성명 — 10월초
- * 여러 학생운동(특히 예술계통)
- * 「뵐렌의 좌익연합의 성명」(Vereinigte Linke) — 10월 13일
- * 「라이프찌히의 페퍼물래 카바레」 성명(Kabarett Leipziger Pfeffermühle) — 10월 13일

10월 16일에는 라이프찌히市에서 10만명 이상이 시위를 했으나 경찰들은 제어하지 않았다. 드래스덴市에서도 만명 이상이 시위에 참가했다. 특히 그곳 시장과 시민대표 및 교회대표와의 회담 결과의 발표를 요구했다.

(4) 호네커 공산독재 퇴거와 크랜쯔 과도정권 등장

10월 18일 호네커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당직과 공직에서 후퇴했다. 에곤크랜쯔씨가 동독 공산당 중앙서기장에 만장일치로 피선됐다. 취

임직후 그는 「지금까지 동독정부는 동독의 현실파악을 잘못했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을 수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지금부터 공산당은 일대 변혁에 착수할 것이다」라고 했다.

크렌쯔씨는 10월 19일 동독 국영기계공장의 노동자, 기사, 관리인들과 대화를 갖게 됐으며 교회대표와는 만나 조속히 「신뢰성」을 다시 살리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했으며 나아가 동독인의 해외여행 법규를 제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동독 텔레비에 10월 19일 처음으로 정치가, 학자, 기자들, 시민간의 공개토론이 목요토론으로 도입되어 매주 한번씩 방영되도록 했다.

10월 20일에 삭센지역 주교 햄펠(Hempel)씨는 「동독 공산당 정권 독점」을 토론에 부쳤다.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원한다면 전부 동독으로 복귀하도록 권장했다.

민주개혁을 위한 성토는 크렌쯔씨의 혁신 노력에 만족하지 않았다. 동독 전역에서 데모는 계속해서 일어났다. 절정을 이룬것은 10월 23일밤 라이프찌히市的 데모였는데, 약 30만의 참가자를 볼 수 있었다. 10월 24일에 동독국회(Volkskammer)는 크렌쯔씨를 「동독 국가원」 및 「국가국방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흥미스러운 현상은 전례없던 다수의 반대표를 볼 수 있었다. 사실상 크렌쯔는 호네커의 후계자로 등장하여 과거 호네커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한을 손아귀에 넣고 동독 변혁운동에 나섰다. 크렌쯔씨 선출후 동독 공산당은 동독인은 해외여행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동베를린에서는 동시에 크렌쯔의 선출에 반대하는 데모가 시작됐다.

10월 26일 동베를린지역 공산당 제일 서기장 귄터 사보스키(Gunther Schabowski)는 노이에스 포름대표 엔스 라이히(Jens Reich)와 세바

스티안 플룩바일(Sebastian Pflugbeil)이 공식적으로 혁신요구에 대하여 상담하게 됐고, 새로운 P.E.N대표들은 크렌쯔씨에게 「과감한 국가 및 제사회부분의 혁신을 요구」했다. 서독 수상 「콜」씨와 동독 수상 「크렌쯔」씨는 10월 27일 처음으로 전화로 대화를 나눴다.

10월 27일에는 지금까지 전 동독 피난민에 대해 완전 사면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10월 30일 라이프찌히 데모(20만 이상)는 계속됐다. 그리고 획기적인 사실은 동독 텔레비 AK(Aktuelle Kamera) 프로그램이 완전히 달라졌다. 칼 에두아르트 폰 슈넛젤러(Karl-Eduard von Schnitzler)씨가 약 30년간 서독에 반대선동하던, 소위 말하는 Black Channel(Schwarzer Kanal)이 없어졌다.

11월 1일에는 크렌쯔씨가 소련을 방문하여 고르바초프와 회담이 있던 후 11월 2일에는 고위층 정치가 당직자들은 해직 내지 자진사퇴했다. 몇 사람을 든다면 다음과 같다.

- Margot Honecker(전 국민교육상)
- Harry Tisch(전총노조대표 FDGB)
- Gerald Gotting(전 기민당대표)
- Heinrich Homan(전 자민당대표)

11월 3일에는 동독공산당이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혁신계획」을 결의하여 발표했고 주내용은 헌법재판소, 행정재판소 설립, 병역의 무대체복무, 경제 교육정책 혁신 등이었다. 그리고 왕년의 동독 공산당 권력자인 Hermann Axen, Kurt Hager, Erich Mielke, Erich Muckenberger, Alfred Neumann이 사임하고 약관의 실력자에게 자리를 이양하도록 했다. 동시에 라이프찌히 시장인 Bernd Seidel도 자진 사임했다.

11월 2일에서 8일까지 연일해서 데모가 계속되었다. 11월4일에는 약 1백만 동독시민이 언론, 집회, 신문자유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는데, 이자리에서는 Stefan Heym, Christa Wolf, Christoph Heim 등의 문예인들이 연설하였으며 이 광경은 동독 텔레비에서 생방송으로 방영되었다.

11월 6일 「신여행법」이 공포되었다. 그러나 11월 7일 동독국회 헌법위원회에서는 신여행법초안이 불충분하다고 거부되어 통과되지 않았다. Willi Stoph 동독 전정부는 자진사퇴하면서 신국무원이 선출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게 됐다.

11월 8일에는 동독 공산당 정치부가 전체 사임하면서 중앙위원회는 크랜쯔씨를 서기장으로 선출했다. 지금까지 21명에서 11명으로 감소시킨 정치부의 멤버중에는 드래스덴 정당서기장 한스 모드로우도 포함되어 있었고 중앙위원회는 모드로우씨를 총리로 선출할 것을 추천했다. 동시에 내무성은 지금까지 현안중이던 노이에스 포름을 정식으로 사회단체로 인정했다. 서독국회에서는 「쿨」수상이 동독 공산당 권력 독점시대는 끝났으므로 다른 민주정당사회 단체를 허가하고, 하루라도 빨리 자유선거를 실시하도록 권유했다.

드디어 11월 9일 베르린 장벽이 무너졌으며, 이로써 「통독노선」에 의 제1단계가 시작됐다.

(5) 평 가

9월말부터 10월까지의 경과를 본다면 「대화」를 제도화시키는 것이 중점이었다. 라이프찌히市的 「월요일 데모」, 타도시의 데모, 라

이프찌히市的 「Dialog am Karl Marx-Platz」(칼마르크스 광장의 대화), 동베르린市的 「Offene Turen-Offene Worte」(열려있는 문-공개된 대화) 등이 있었고 텔레비, 라디오 등의 매스콤에서도 공공연히 「국민과 대화」를 제도화시키는 것이 큰 중요성을 갖게 됐다.

다음으로 공산독재체제의 붕괴가 급속히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진화적인 형태를 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개인적, 조직적, 기구적 붕괴 과정에서도 동독국민들은 「복수적 입장」에서 폭력을 사용한다거나 혹은 인명 손상을 가한다던가 긴급재판에 의하여 「추악스러운 과거」를 청산한다는 태도를 전혀 볼수 없었다. 이것은 무엇보다 동독에 있는 「교회」와 「문화인단체」가 국민의식속에 파고 들어가 냉정한 태도, 이성적인 행위에 의해서만 순조로운 사회혁신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준 때문이었다. 여기서 11월 4일 동베르린 시위에서 행한 24인의 연사(문화인, 목사, 학자 등)들의 연설의 요점을 본다면 다음과 같다. 동독 민주혁신운동의 선봉에 나서 많은 탄압을 받았던 Stefan Heym(소설가)은 말하기를 “우리는 지난 수주 동안에 무언을 극복했다. 우리는 지금부터 정도로 가는 것을 배우려 한다.” 마르쿠스 볼프(Markus Wolf)씨는 ‘미래를 위한 이성’, Christa Wolf씨는 ‘언어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Christoph Heim씨는 ‘최근의 환희를 앞으로 해야할 혁신과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시위에서 쓰여진 유명한 표현은 ‘Wendehals(개미잡이: 목을 팔방으로, 수직으로 돌릴 수 있다)’인데, 우리 표현으로서는 「기회주의자」, 「임기응변주의자」를 두고 하는 말로서, 즉 공산정권하에서 권력을 가졌던 자가 혁신속으로 들어와 기회주의, 실리주의를 추구하면서 「혁명」을 방해한다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전국민이 공산독재하에서 적응하고 살아온 이상, 범국민적 입장

에서 「과거청산」이 절대적으로 앞서야 한다는 것으로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측면이 다분히 내재해 있는 것이다.

2. 동서독 통일의 제1단계

(1) 독일민족의 재회 :

「독일민족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진 다음날(11월 10일), 서베를린 시청앞에서 데시위가 있었다. 왕년의 동방정책의 기수 빌리 브란트를 위시하여 당시 폴란드를 방문중이던 '콜'수상도 방문을 중단하고 급히 이 시위에 참석했다. 이 시위에서 냉전종식을 확인하면서 고르바초프의 Perestrojka를 극구 찬양, 지지하고 유럽중심에 놓여 있는 동서독간의 냉전종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나아가서는 독일민족이 하나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입장에서 서베를린시장 Momper씨는 군중을 향하여 "현재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국민이다"고 하였다.

서베를린시와 동독국경 인접지역의 서독에는 11월 9일부터 동독자동차 'Trabant(약자로 Trabi)'가 몰려오기 시작했다. '국민재회 대축전'이 벌어졌던 것이다.

다음표는 1990년 1월 22일까지 동서독간에 개통된 경계지역이다.

Schleswig-Holstein:	Hessen:
Lubeck-Schlutup/Seimsdorf..... 1	Neu-Eichenberg/Hehengandern
Lubeck-Eichholz/Herrnberg..... 2	Bad Sooden-Allendorf/Wahlhausen..2
Lubeck/Herrnberg..... 1	Meinhard-Grebendorf/Kella.....2,4
Mustin/Roggendorf	Meinhard-Frieda/Grosstopfer.....2
Marienstedt/Zarrentin..... 2	Wanfried/Doringsdorf.....4
Gudow/Zarrentin..... 1	Wanfried/Katharineberg
Lauenburg/Horst.....1,3	Wanfried-Heldra/Treffurt.....2
Buchen/Schwanheide..... 1	Altenburschia/Grossburschla.....2
	Ringgau-Rittmannshausen/Ifta.....3
Niedersachsen:	Herleshausen-Willershausen/Pferdsdorf
Bleckede/Neu Bleckede.....2a	Herleshausen/Wartha..... 1
Neu Darchau/Darchau.....2a,4	Herleshausen/Lauchroden.....2
Hitzacker/Bitter.....2a	Herleshausen/Wommen/Neustadt....2,4
Kattenhof/Domitz.....2a	Bebra/Gerstungen.....1,9
Pevestorf/Lenzen.....2a	Wildeck-Obersuhl/Untersuhl
Schmarsau/Schrampe	Heringen-Kleinensee/Grossensee....2
Lubbow/Hoyersburg	Heringen-Widdershausen/Dankmarshausen
Bergen (Dumme)/Salzwedel.....1	Heringen-Leimbach/Dippach
Bodenteich-Schafwedel/Bonese	Philippsthal (Werra)/Vacha
Wittingen-Zasenbeck-/Hanum	Philippsthal (Werra)/Unterbreizbach.....6
Brome/Mellin	Rasdorf/Buttlar
Brome-Zicherie/Bockwitz	Tann-Gunthers/Motziar
Grafhorst-Beitenrode	

Wolfaburg/Obisfelde.....1,5,9	Bayern:
Bustedt/Obisfelde	Fladungen/Meipers
Grasleben/Weferlingen.....2	Eussenhausen/Meiningen.....1
Helmstedt/Beendorf..... 2	Trappstadt/Eicha
Helmstedt/Morsleben..... 3	Allertshausen/Hellingen.....7
Helmstedt/Marienborn..... 1	Rodach b.Coburg/Eishausen
Helmstedt/Marienborn.....1,9	Rottenbach/Eisfeld.....1
Helmstedt/Harbke..... 2	Neustadt b.Coburg/Horbach
Schoningen/Hotensleben	Stockheim-Burggrub/Neuhaus-Schiernitz
Jerxheim/Debeleben	Pressig-Welitsch/Heinersdorf.....2
Mattierzoll/Hessen	Tettau/Spechtsbrunn
Hornburg/Bühne.....2	Ludwigsstadt/Probstzella
Yienenburg/Luttgenrode	Ludwigsstadt/Probstzella.....1,9
Bad Harzburg-Eckertal/Stapelburg	Ludwigsstadt-Lauenhain/Lehesten....2,4
Braunlage/Elend.....2	Tschirn/Brennersgrun.....2,4
Braunlage-Hohegeiss/Benneckenstein	Nordhalben/Rodacherbrunn
Zorge/Ellrich	Lichtenberg/Blankenstein
Walkenried/Ellrich.....1,5,9	Rudolphstein/Hirschberg.....1
Nuxel/Mackenrode	Untertiefengrun/Hirschberg.....2
Bad Lauterberg-Bartolfelde/Bockelnhagen..2,4	Topen/Juchhoh.....3
Dudelstadt-Brochthausen/Zwinge..2,4	Modlareuth/Modlareuth
Dudelstadt/Ecklingerode.....2	Hof/Gutenfurst.....1,9
Dudelstadt/Worbis.....1	Hof/Heinersgrun
Dudelstadt-Nesselroden/Boseckendorf....2,4	Ullitz/Blösenberg

Gleichen-Etzenborn/Neuendorf.....2,4	Gattendorf/Cassenreuth.....8
Gleichen-Beienride/Glasehausen....2,4	Regnitzlosau-Nentschau/Posseck.....2
Gleichen-Brenke/Bischhagen.....2	
Friedland-Niedergandern/Kirchgandern....2	

* 참 고

- 1 : 1989년 11월 9일전에 개통되어 있었다.
- 2 : 보행자와 자전거
- 2a : 엘배강 연락선(보행자와 자전거)
- 3 : 1990년 1월 1일부터 개통
- 4 : 주말에만 개통
- 5 : 철도교통에만 개통
- 6 :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개통
- 7 : 자동차교통에 개통(1990년 1월 26일부터)
- 8 : 정기버스 및 관광버스교통에 개통
- 9 : 철도교통에 개통

< 1990년 1월 22일 기준 >

(2) 동독 민주주의의 첫 실험 : 원탁회의

11월말경에는 동독의 일부층에서 공산당정권붕괴, 자유선거실시, 점차적으로 고조되는 동서독간의 교류 등의 「동독 자립성 확보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운동의 이니셔티브는 왕년의 공산당정권 반대투쟁을 해온 문예인, 교인, 목사들이었다. 예를 들면, Stefan Heym, Christa Wolf, Volker Braun 등이었다.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동독이 서독으로 흡수되어 통일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물론 이들의 ‘동독 아이덴티티 유지운동’이 공산당정부의 대표인 크렌쯔, 모드로우씨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12월 1일 동독국회에서는 획기적 사실이 발생했다. 그것은 동독헌법에서 보장되어 있었던 ‘동독공산당 정권독점’ 조항을 삭제해버렸다. 개정된 동독헌법 제1조는 다음과 같다.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ist ein sozialistischer Staat der Arbeiter und Bauern. Sie ist die politche Organisation der Wertatigen in Stadt und Laud” (독일민주공화국은 노동자, 농민의 사회주의국가이며, 도시와 농촌에서의 근로자의 정치기관이다).

이제는 점차 공산당(SED) 당원이 공산당 자체내의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12월 2일 공산당당원의 큰 시위가 있었고 그 다음날은 크렌쯔를 위시해서 공산당 정치국과 중앙위원회 전원이 사퇴했다. 호네커씨도 당으로부터 추방당하고 공산당 혁신운동이 일어나는 한편, 왕년의 막강한 인물들이었던 Gunter Mittag, Harry Tisch, Gerhard Muller, Alexander Schalck, Golodkowski 등은 당을 이용해서 개인재산을 부정으로 축적하고, 사치생활을 했으며, 불법적으로

많은 외화를 외국은행에 예치한 사건들이 속속 폭로되고 있었으며, 기민당은 공산당과 협동하던 Demokratischen Block으로부터 이탈 독립했다. 그러나 '자유선거'를 요구하던 시위의 구호는 점차 공산당 당원의 오직, 뇌물, 권력남용, 부패, 부정 반대로 옮겨가고 12월 4일에는 처음으로 '조속한 독일통일'을 요구하는 구호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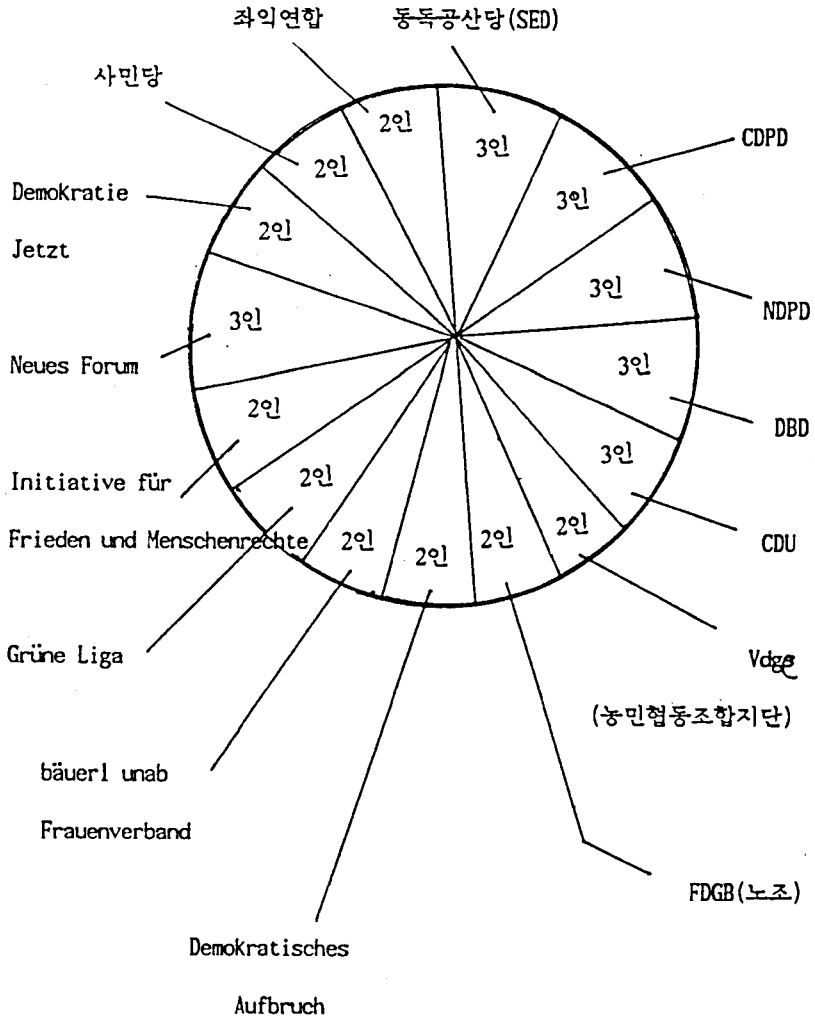
12월 6일 크랜쯔씨는 국무원위원장 및 국방위원회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대신 자민당의 Manfred Gerlach가 대임하게 되었다. 12월 7일 교회기관의 제의에 의하여 처음으로 동베를린에서 원탁회의가 시작됐다. 구성은 지금까지의 5개 블록정당과 야당대표들이었다.

지금 논한 것을 중앙원탁회의(Zentraler Runder Tisch)라고 부르며, 지방 및 각 부분에서도 존재하고 있고, 소위 말하는 국민대표기관의 합법성이 문제됐기 때문에 지역, 지방, 전문 원탁회의가 속속 생기기 시작했다.

상기한 (중앙)원탁회의는 가장 중요한 '의결기관'으로서 국회(Volkskammer)와 각료회의(Ministerrat)를 통제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리고 여러 부서에 관한 의결안을 작성 제안할 수 있었다. 첫회의는 12월 7~8일에 열렸다. 그 이후 1990년 3월 18일 국회선거가 있을 때까지 매주 월요일 개최되었다. 그러나 지방원탁회의는 1990년 5월 6일까지 지방의회선거가 있을때까지 존속했다. (중앙)원탁회의에는 17정당단체의 39명의 대표가 참가했고 회의진행사회는 3인의 교회가 추천한 사람들이었다. 물론 이 원탁회의는 자유선거의 결과에서 나온 합법적인 제도는 아니었으나 동독국회보다 더욱 다원적이었다.

원탁회의는 국가안전성(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 = Stasi)

【圓卓會議의 構成員】



* 그의 소수민족대표로서 Sorbische Minderheot의 1대표가 참석했고 옹서버로는 DFD (Demokratischer Frauenbund Deutschlands), 소비협동조합, 환경정당대표들이 참석했다.

해산을 결의, 시행하였으며, 동독공산당 부패상황과 1989년 5월달의 지방선거 부정을 해명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그리고 내각의 여러 장관에 대해서 불신임을 표명하여 사면시키게 했다.

1990년 1월 15일 모드로우씨는 원탁회의대표들에게 입각하기를 권장하여 원탁회의에 참가하는 모든 단체, 정당은 1월 28일 각 1명씩의 무임소장관을 입각시키도록 하고 내각멤버가 원탁회의에 참석케 했다. 그리고 원래 5월 8일 실시할 국회의원선거는 동독 제사정의 악화때문에 3월 18일로 앞당겨 실시케 하는 결의를 했다. 원탁회의는 원래 통제, 감시기관으로 설립했으나 나중에 자신이 입법기관으로 변형되어 선거법, 매스콤법, 노조법, 사회헌장, 신헌법초안 등을 제정했고 물론 서독인에 의해 준수되지는 않았지만 동독선거전에 서독인들이 참가하지 않도록 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물론 원탁회의는 회의진행 절차상 많은 문제가 있었으나 동독의 첫 민주주의 실험 단계에서 많은 공헌을 했고 특히 원탁회의과정은 텔레비에서 생방영됐기 때문에 동독국민들은 많은 흥미를 갖게 됐고 특히 왕년의 공산당의 책임자가 원탁회의에 나와 과거 자기 행위에 대한 진술, 더욱이나 Stasi기관해체에 관해서 질의응답이 진행됐을때는 한국의 '청문회'광경을 어느 정도 회상시키는 것 같았다. 원탁회의가 3월18일 국회의원선거 이후 없어졌을 때 아쉬워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았다.

여하간 12월 7, 8일 양일간 결의의 가장 중요한 안건은 '국가안전성'(Stasi)을 해체하는 것이고 다음은 1990년 5월 6일 처음으로 동독에서 자유선거를 실시하는 추천을 발표한 것이다.

(3) 동독 공산당의 말로

원탁회의가 점차 중요성을 갖게 되고 동시에 공산당의 자체쇄신 운동이 시작되었다.

위에서 논한 바 크렌츠를 위시한 공산당 수뇌들이 사퇴하고 난 이후 12월 8일 공산당대회가 개최되어 새당수에는 변호사인 그레고 지(Gregor Gysi)가 당선되고 부당수급에는 모드로우씨와 드래스덴市 시장 Berghofer씨가 각각 등장하게 됐다. 공산당은 공공연하게 동독국민에게 동독의 경제,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 혼란과 빈곤, 통제, 위기를 초래한 것이 공산당(SED)이었다고 자칭하면서 공식으로 사과하기도 했다. 그리고 획기적 사회변혁, 자기변혁을 위하여 민주적 사회주의를 위하여 스탈린주의를 거절한다고 명백히 했다. 그리고 동독 대검찰청은 왕년의 세력자, 공산당 수뇌들에게 부정혐의 조사를 시작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최고급의 지도자였다.

Erich Honecker

Erich Mielke

Willi Stoph

Grunther Kleider

Werner Krolikowski

Hermann Axen

Gerald Gotting

상기의 7인은 왕년 공산당 Power centre의 24인 중에 속하는 인물 들로써 막강한 세력자였다. 이들에 대한 혐의는 오직, 권력남용, 부정축재등이었다.

12월 13일에는 동베르린시의회에서 1982년 Honecker에 부여된 명예시민권을 다시 무효화시켰다. 공산당은 12월 12-13 양일간의 전 당대회를 끝내고 '기지'당수는 공산당 속에서 앞으로 스탈린주의자들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공산당 이름의 개칭을 추진하였다;공산당은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에서 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로 개칭되는 한편 동독공산당기관지(Neues Deutschland)의 별칭이었던 'Zentralorgan der SED(공산당 중앙기관지)'를 포기하고 단지 'Sozialistische Tageszeitung(사회주의 일간지)'라고 고쳤다. 그리고 종전에 신문에서 쉽게 볼 수 있던 "만국의 무산자들이여, 단결하자"라는 표현이 자취를 감추었다.

(4) 모드로 정권의 등장과 동서독의 접근

가. 동독 : 청산과 새출발

(가) 동독의 제안 : 조약공동체

동베를린에서는 11월 3일 공포했던 Action Program의 내용으로서 자유비밀선거, 경제개혁, 신형법, 신매스콤법, 언론, 결사법 등을 제정할 것을 더욱 구체화해서 11월 10일 발표했다. 동시에 동독의 기민당 당수였던 Gerald Gotting이 사퇴하고 새로 로타 더 메지어

(Lothar de Maiziere)가 신당수로 피선됐다.

동독국회에서는 지금까지 막강했던 의장 Horst Sindermann은 사퇴하고 농민당(DBD) Gunther Maleuda와 자민당(LDPD)의 Manfred Gerlach가 국회의장선거에 경선한 결과, 농민당 출신의 Maleuda씨가 피선됐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동독의 농민당이 결국 자민당과 Bloc정당으로써 공산당과 동조했으나 아직도 간과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신총회에는 한스 모드로우(Hans Modrow)가 무투표, 거수로서 당선됐다. 모드로우씨는 물론 공산당원으로써 활약하고 있었으나 호네커 정권때 권력의 주변에서 있었다. 청렴하고, 순박하고, 거짓이 없는 양심있는 정치가로서 자기 자신이 '공산당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저심을 갖고 나서는 사람으로서 과도기에는 가장 최적한 정치가로 Stoph의 후계자로 미리부터 물망에 올랐던 사람이다.

모드로우씨가 등장하여 가장먼저 실행한 것은 동서독 경계지역에 있는 '금지구역(Sperrzonen) (여기는 피난하는 사람을 사살하는 자동사살 장치가 비치되어 있었다)'을 철폐하고 경계선을 넘어가는 동독인을 절대 사살해서는 안된다는 명령을 공포했다.

다음은 '명예회복'이었다. 공산정권에 대해서 비평적이었고 반대했던 인사들의 명예회복이었다. 첫째, 동독과학 아카데미(Akademie der Wissenschaften der DDR)는 前 정식회원으로서 회원권을 상실했던 Ernst Bloch(1885~1977), Robert Havermann(1910~1982)씨를 다시금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동베르린의 유명한 출판사 Aufbau-Velag 책임자 Walfer Janka도 명예회복을 받게 됐다.

11월 17일 Modrow씨는 동독국회에서 서독정부에 대해서 '조약공동체(Vertragsgemeinschaft)'형성을 제안했다. 물론 이 제안은 그가

동독수상으로 등장하여 최초로 정부시정연설을 한 과도정부 혁신분야 '6개 종목'중의 마지막 부분이었다. 첫째 법질서 강화(신형법, 신매스콤법, 선거법, 여행법 등등이다), 둘째 지금까지의 정부재정지원정책 및 가격정책의 개정, 셋째 교육개혁, 넷째 경제발전과 환경을 조화시키고, 다섯째 행정개혁, 마지막으로 외교부문에서 Modrow씨는 EC와 경제협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고 서독과는 지금까지의 협조적 친선관계를 더욱 충실히 하며, 양독의 이 관계는 '협조적 공존(Kooperative Koexistenz)'의 큰 예가 될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양독이 조약공동체(Vertragsgemeinschaft)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 시정연설에 이어 당시 동독국회의 정당 NDPD의 Gunter Hartmann씨와 기민당 Lothar de Maiziere씨는 동독내에서 주(Lander)를 설치하며 중앙집권을 분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동독국무원의 멤버들인 Horst Sindermann(공산당), Willi Stoph(공산당), Gerall Gotting(기민당), Heinrich Homann(NDPD), Kurt Hager(공산당), Werner Krolkowski(공산당), Harry Tisch(공산당)씨등은 각각 속하는 정당의 제안에 의하여 사직했다. 27명의 동독 공산당 당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나) 모드로우 내각과 과거청산시도

과도정부 모드로우 내각이 11월 18일 출범했다. 사실상 국회구성과 같이 내각구성도 당시 존재하는 공산당과 블록정당에 소속하는 인물만이 등장하게 됐다. 이에 반하여 동독 각처의 시위는 공산당(SED)의 '정권독점'을 부인하고 가능한 빨리 '자유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11월 18일 모드로우 내각이 출범했을 때 노이에

스 포름이 주최한 정식으로 승인받은 라이프찌히 데모에서는 자유선거에 의한 신정부수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모드로우내각 28인의 정당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정 당 소 속	인 원
공산당 (SED) 소속	19명
기민당 (CDU) 소속	4명
농민당 (DBD) 소속	2명
자민당(LDPD) 소속	2명
국민당(NDPD) 소속	1명
총 계	28명

모드로우 정부는 점차 고조되는 국민들의 '자유선거 요구'에 입각하여 나름대로 혁신의 첫시도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동독국회는 등독헌법개정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결의했고 나아가서는 신선거법을 제정할 위원회 구성에 동의했다. 11월 19일에는 11월 9일 동서독 경제선을 개통하고 난 이후 약 3백만 동독인이 서독 및 서베를린을 방문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19일에는 드레스덴, 푸랑크푸르트오더, 게라, 칼 말크스 슈타트, 쥘, 에르푸르트, 동베르린 등에서 다시금 큰시위가 일어나서 '기본권 부여 보장'을 요구했다.

나. 서독 : 통일관과 통일안

(가) 에고이즘과 낙관주의

엠니드 여론조사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처음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① 한스 모드로우의 지명도 : 과연 모드로우씨는 동독의 고르바초프가 될것인가? 서독국민들에게는 모드로우씨와 고르바초프씨의 지명도가 거의 같았다.

Sympathy scale (+5, -5)에서 보면 모드로우씨가 2,3, 고르바초프씨가 2,2였다. 서독에서의 모드로우씨의 지명도는 정당의 차별이 없었다. 흥미스러운 사실은 모드로우씨는 노이에스 포름의 대표 Barbel Bohley여사와 거의 같았다.

② 경계선이 개방되고 난 이후 동독인이 서독을 방문할 때, 환영금으로 1인당 100마르크를 받았는데 이에 관한 서독국민의 여론은

- 100마르크 정도면 좋다(현상유지) : 65%
- 100마르크는 너무 높다 : 25%
- 100마르크는 너무 낮다 : 6%

이 결과를 보면 서독이 동독인에게 1인당 지불하는 '환영금'은 다수사람들의 동의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4분의 1의 해답은 100마르크면 너무 높은 수준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바, '환영금'에 대한 국민의 콘센서스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여하간 동독인이 환영금을 받기 위하여 각 곳(은행, 우체국 등등)에 많은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고, 시내가로에서는 동독인들이 플라스틱 보자기를 가지고 환영금을 받아 서베르린과 서독에 와서

‘처음으로 한번 거창하게 쇼핑’해서 돌아가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 사실상 동독마르크가 시장시세로는 서독마르크에 대해서 불과 20분의 1정도의 가치밖에 없었기 때문에 동독인이 100서독 마르크를 갑자기 손아귀에 넣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것이었고 그간 자본주의 소비경제에 아무런 지식을 갖지 못했고 다종다양의 상품을 처음 경험하는 동독인은 황홀하기 마련이었다.

③ 동독 공산당(SED)은 자유선거를 실시할 용의를 갖고 있다고 믿는가?

이 질문에 낙관적 해답을 보내준 것이 82%, 비관적인 의견이 13%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시위에 의한 동독 공산당정부와 공산당의 붕괴, 모드로우씨의 공개적인 민주화의 노력이 여기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만약 자유선거가 있을때 동독공산당은 어느 정도 득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득표예상	100인을 기준해서
5% 미만	1 인
5 - 9%	4 인
10 - 19%	13 인
20 - 29%	23 인
30 - 39%	18 인
40 - 49%	15 인
50% 이상	15 인

여기서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공산당(SED) 세력이 아직도 잔존

할 것을 예측하고 있다. 사실상 1990년 3월 18일 선거때도 나타났지만 공산당 세력이 많은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는 예측은 맞았다고 볼 수 있다.

④ 서독국민에게 묻기를 서독정부는 동독에서 혁신과 개혁이 이뤄질 때 더욱 많은 재정원조를 해야 할지? 이에 대하여 74%에 해당하는 서독국민들은 '세금을 올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조해야 한다'고 했으며 단지 22%만이 '세금을 올릴지라도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동독재건을 위한 서독의 재정지원이 과연 서독인의 세금상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을 생각하면 이미 이때 다수의 서독인들은 세금상승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명확히 나타났다.

⑤ 서독에 넘어오는 '이주자의 경향'에 대한 예측은 동서독 경계선이 무너지고 난 이후 75%의 설문 응답자는 지금부터는 '이주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았다(낙관적)',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자가 10%,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자가 9%이었다.

물론 이 낙관적 견해는 다음에 설명하겠으나, '경제, 통화, 사회통합'(1990년 7월 1일) 시까지 절대적으로 맞지 않았다.

앞으로 이미 넘어온 이주자가 동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41%의 설문응답자는 '일부 소수의 사람만이 동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라고 했으며 21%는 약 반수의 이주자는 다시 동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서독인들의 '기대와 희망'이 다분히 내재하고 있다. 대체로 서독인은 동독의 이주민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다. 같은 민족이라는 구호로써는 현실적인 문제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나타내주고 있다.

엠니드 여론조사연구소는 서독인의 '이기주의'를 더욱 명확히 알

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설문에 설명을 붙였다. “※(예) : 동독의 숙련공이 서독으로 이주하고 싶어한다. 그는 결혼하여 두 어린애를 갖고 있다. 친척은 서독에 없지만 직장은 서독에서 빨리 얻을 것이다.” 만약 이런 경우 당신의 조인은 무엇입니까? 단지 26%만의 서독여론이 이주에 동의하고, 62%는 동독에 남아있기를 충고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확실히 나타나는 사실은 ‘서독인의 동독인에 대한 경쟁심’, 나아가서는 서독인의 이기주의 태도를 표출시키고 있다.

따라서 Sympathy Scale에서도 동독인이 서독을 방문할 때는 +3.9 이나 이주민의 경우에는 +2.5라는 이주민에 대한 비선호를 나타내 주고 있다. 큰 이유중의 하나가 이주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노동시장에서 고용경쟁이 심각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반수 이상(57%)의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

특히 주택문제에 관해서는 81%가 그렇게 생각했다.

⑥ 독일 통일에 관한 여론조사는 다음과 같다.

동독과 서독간의 관계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지?

- 관계는 점차 좋아질 것이다. 서독은 서구진영, 동독은 동구진영 중심으로 계속될 것이다. ----- 25%
- 관계는 더욱 좋아질 것이고, 꼭 오스트리아, 스위스와 같은 나라들의 관계처럼 될 것이다. ----- 44%
- 관계는 대단히 좋게 발전해서 독일 통일이 가능할 것이다.
----- 27%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11월초까지만 해도 서독사람들중 약 4분의 1만이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슈피겔지, 1989년 11월

20일자).

(나) 서독정부의 10개조항 : 연방제안

모드로우씨의 '조약공동체' 제안이 있는 후, 동서독 간의 접촉은 대단히 활발해졌다.

11월 20일 자이터스(Seiters) 장관은 크렌츠 동독공산당 서기장 및 모드로우씨와 협의하고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체제구성에 관해서 합의했고, 특히 여행, 경제, 무역교류, 환경보호, 우체통신, 교통분야에서 협력하기로 동의를 보았다.

그리고 지방도시, 주차원에서 동서독간 협력조약(자매결연 등)이 체결됐다. 예를 들면 헛센주와 튜링겐주(3행정구역), 한노바와 라이프찌히, 쿤트부스와 자르부뤼켄, 본과 쾰른, 빌즈볼크와 줄 등등이 있으며 사회단체간의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체제가 급속도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동서베를린의 체육위원회간의 협력, 새로 생긴 '동독의 녹색정당'(11월 24일)은 서독의 녹색정당과 협력의사를 표명했고, 서독의 자민당(FDP)은 동독의 자민당(LDPD) 및 '민주혁신출발'(Demokratischer Aufbruch)과 접촉하게 됐다. 그 이외 수많은 공식 주차원에서 서로서로의 파트너는 커뮤니케이션을 찾기 시작했다.

나아가 동독 공산당(SED)은 동독내에 존재하는 제사회단체, 정당들과 함께 제분야에 있어서 혁신문제들 토론하자는 제의를 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원탁회의'의 첫구상이었다. 동독에서 공산당 이외의 야당 사회단체를 인정하고 중요시 하고, 나아가서 서독 정부에서도 정식으로 야당을 이렇게 승인하게 된 것은 이때였다. '쿨'수상

은 Demokratischer Aufbruch의 대표인 Wolfgang Schnur와 Rainer Eppelmann과 회담했다.

그리고 11월 26일 노이에스 포름은 동베를린에서, 동구지역에서 경제개혁이라는 제목으로 2일간 큰 회의를 열고 앞으로 동독이 당면한 경제개혁과 문제를 제기하여 논의했으며, 서독의 경제인 연합단체(BDI)와 서독 연방경제성도 적극적으로 지원참석 했으며, 동독 자신이 뤼벡(Lubeck)에서 '슐레스빅 홀스타인 경제회의'(Wirtschaftstag in Schleswing-Holstein)를 개최하여 양독간의 경제, 무역관계 발전에 관해서 토론했다.

이때 벌써 알려진 사실이 공산주의 경제(Marxwirtschaft)는 시장 경제체제(Marktwirtschaft)에로 변형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많은 전문가의 의문점이었다. 일반적 견해는 형식상으로 동구공산권에서 가장 경제 수준이 높다는 동독경제는 '아무런 기력이 없는 고질체'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AEG부사장 하인쯔 뒤어(Heinz Durr)씨는 현재 '동독에서 진행될 경제부흥은 200년 이래 처음보는 가장 큰 실험'이라고 했다.

이러한 지경속에서 '콜'수상이 서독국회에서 11월28일 선언한 '10개항'의 초점은 '조약공동체'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연방제'를 제안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 방식의 선거에 의한 정부는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다. '10개항'중의 '제5항'이 바로 '연방제'구상이다: 연방제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동독에서 자유선거가 필요하다. 자유선거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공동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 상시 협의와 정치적 조정을 위하여 공동 정부위원회

- 공동의회 위원회
- 완전히 새로운 발전을 대비한 여러 위원회

이와 동시에 '콜'수상은 독일 역사의 연방제 전통을 강조했다. 나아가서 그는 '통일된 독일은 어떠한 양상을 가질 것인지 지금 아무도 알수 없다. 그러나 독일국민이 통일을 원한다면 통일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동서독 접근은 항상 유럽통합체제속에서 이뤄져야 하며 동독이 하루라도 빨리 EC와 경제, 무역협력 협정이 체결되도록 강조했다. 특히 '콜'수상은 동서독 접근 시간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콜'수상의 '10개항'에 대한 반응은 국제적으로 좋지 않았다. 소련은 '콜'수상의 구상이 '헬싱키'정신에 위배된다고 했으며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대단히 reserve한 태도를 보여 주면서 '독일민족의 자결권은 인정하나, 독일통일은 현실적이 아니다'고 일반적으로 논평했다.

다. 동독의 정치적 자립과 경제적 흡수간의 갈등

(가) 양독간 접근의 중점변화 : 경제우선주의

이미 논한 바 모드로우씨의 '조약공동체'제안에 대하여 콜수상은 '연방제'(국가연합)를 주장했다. 이것은 11월 28일의 '10개항'속에 들어 있었다. 이 '10개항'을 다시 상기해보면 제1항은 '환영금'(1인당 100 마르크)을 지불한 이외에 '외화기금'(Devisenfonds)을 동독인을 위해서 설치할 것이나 그 반대급부로서 동독은 지금부터 서독인에게

요구했던 '강제태환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조건을 붙였다.

그리고 12월 5일 콜수상은 동독 텔레비 인터뷰에서 다시금 강조하기를(자기 자신이 발표한 '10개항'을 연설하면서)독일통일을 현실화 하는데 많은 '물질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특히 동독 경제부흥을 위한 적극적 원조(마살원조와 같은)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보조를 맞춰 동독의 기민당전당대회(12월 15일)에서 더 매지어는 '독일통일의 필연성'을 강조하고 특히 '시장경제체 도입을 사회적 의무와 환경보호의 책임속'에서 해야 한다고 했으며, 같은 보수우파계통의 Demokratischer Aufbruch전당대회(12월 16-17일)에서 당수로 피선된 볼프강 슈누어(Wolfgang Schnur)씨도 기민당과 똑같은 정강을 내세우면서 서독식의 '사회적 시장 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사회적, 환경보호적 요소가 가미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배경으로 12월초 동서독 정부는 1990년 1월부터 서독인이 비자와 강제태환의무없이 동독으로 여행할 수 있게 하고 2년간 제한하는 '외환기금'(2.9 billion 마르크)을 설치하며 동독인이 서독으로 여행할 때 매년 200마르크를 태환하는데 100마르크까지는 1:1로 태환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100마르크는 1:5로 태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동의를 보았다.

12월 12일에는 양독간에 전화, 통신교류를 개선할 것을 상의하여 서독은 1989년말까지 지금까지 있는 120개의 전화선에 추가적으로 188선을 가설할 것이고 1990년 1월 20일까지는 96선을 더 가설할 것을 합의했다. 또한 1990년 6월 30일까지는 지금 존재하는 740 자동차이얼선에 추가적으로 200선을 가설한다고 했다. 볼프(Wolf) 장관은 동독에는 1백 20만 개인전화 가설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1990년에는 불과 8만 내지 10만대의 신청만이 허가될 것이라고 말하고 동독전화

시설의 48%는 전부 노후화되어 있다고 말했다. 12월 중순에는 동서독 공동환경위원회, 경제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합의했다.

12월 19일 '콜'과 '모드로우'의 드레스덴회합은 동서독 접근에 더욱 구체적인 단계였다. 두 수상은 '조약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에 합의하고, 1990년 5월에 조약을 정식으로 서명하기로 약속했다.

여기서 합의된 구체적 내용은

- ① 1990년 1월 1일부터 서독인에게 유효한 태환율은 1 : 3으로 한다.
- ② 성탄절전에 동서 베를린간의 경계인 부란덴부르크문을 개통한다.
- ③ 정치범을 12월 24일까지 석방한다.

같은 날 동베를린에서는 수천명이 큰 시위를 하면서 '동독을 서독에 판매하는 것에 반대하여 자립, 주권을 가진 동독'을 요구하는 구호를 주장했다.

다시 한번 12월 31일 '콜'수상은 자기 자신의 '10개항'을 논하면서 '독일국민은 자유, 자결원칙에 입각하여 통일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독에서 정당, 단체활동이 허락되어 자유선거가 시행되어야 하며 서독은 동독의 경제사정을 속히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오는 이주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경제부흥을 일으켜야 하며 나아가서는 유럽공동체는 결국 엘베강에서 머물지 않고 전유럽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독일은 우리의 조국이며, 유럽은 우리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나) 엑소더스 동독

상기와 같은 동서독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에 이주민수는 점차 더욱 증가되어 1989년 11월 12일에는 피크를 이루었다. 1988년에 이주자수는 39,832명이었으나 1989년에는 전부 34만 3,854명이었고 1989년 11월에만 13만 3,429명이나 되었다.

동독 이주민은 서독에서 여러가지의 특전을 받았다. 우선 재정적 지원, 주택, 취직, 나아가서는 연금, 제보험 혜택까지 받는 처지였다. 역시 이것은 냉전시대의 유물로서 공산권에서 서구진영으로 피난, 도피하는 자에게 특전을 부여하는 '서구의 자기체제 우세'라는 입장에서 유지돼왔다.

동서독 접근속도가 동독인의 입장에서 보았을때 늦은 편이고, 앞으로 다시 어떠한 양상으로 동서독관계가 냉전형태로 다시 바뀌질지도 모르고 여러가지 면에서 불안정한 입장에서 우선 이주해보자는 motivation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대량 이주민의 문제는 서독 각지방에서 점차 '사회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서독에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된 요점은 다음과 같다.

- ① 이주민 수용소가 부족하다(스포츠홀, 병영, 연락선, 캠핑버스 등등을 이용해도 수용시설은 부족함)
- ② 일반적으로 서독에서 주택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처지였는데 설상가상으로 문제시 됐다.
- ③ 취업기회가 적다. 서독의 실업율이 9% 이상이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최저빈곤자 구호(Sozialhilfe) 예산 Capacity는 전무하다.

⑤ 서독인 빈곤자가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게 됐다.

엠티드여론연구소에서 조사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0년 1월)

① 이주민에게 부여되는 재정적 지원수준은?

너무 높다(56%)

적당하다(40%)

② 동독 이주민을 서독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지?

좋다

1989년 1월 : 28%

5월 : 36%

8월 : 44%

9월 : 62%

10월 : 63%

11월 : 59%

12월 : 44%

1990년 1월 : 33%

이 조사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동독 이주민에 대한 서독인의 거부적 태도는 대단히 증가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콜' 정부의 이주민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진자가 금년 12월초 '콜'의 라이벌로 등장하는 사민당의 Oskar Lafontaine 후보자인데, 그는 '이주자 문제'를 포함 모든 사회문제를 '통일의 사회적 차원'이라고 불렀다. 동독인 이주를 하루라도 방지하지 않으면 앞으로 동독경제 재건을 누가 해야 할 것이며, 서독에 현재 존재하는 사회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경향이므로 이주자가 서독으로 올려면 반드시 '주택'과 '직장'을 미리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1989년말과 1990년초의 정당소속 구별없이 모든 서독국민의 동독 이주민에 대한 불만을 바로 반영하고 있었다.

(다) 시장경제체제 도입시작

1990년 1월3일 크리스타 루푸트 경제상(부수상겸)은 원탁회의에서 동독의 경제현황을 보고하면서 '경제개혁'의 복안을 발표했다.

내용인 즉, 동독은 지금까지와 다른 소유형태를 도입할 것이나 '국민소유제는 고수할 것이며, 1989년 외화수입이 9.3billion마르크였고 지출이 11.7billion마르크였기 때문에 차관을 얻는 것은 불가피하게 됐으며, 비공산권에 부채는 현재 20.6billion마르크에 상당하며 노동시장에서는 25만 취업기회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원탁회의 야당측에서 신랄한 비평이 있었다. 특히 현정부의 '경제개혁 속도가 너무나 완만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나아가서는 아직도 '공산당세력이 뿌리박혀 있다'고 논박했다.

금년에 들어와서 동서독간의 공동협력위원회(정부차원/민간차원)설치가 대단히 활발해졌다.

- 동서독 건설성은 공동으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마이센 바이마르, 브란덴부르크, 슈트랄순드의 지역개수사업을 공동으로 처리할 것을 합의하였다. (1월 5일)
- 서독 기민당원 비덴콕(Biedenköp) 교수는 라이프찌히 대학에 '시장경제체제 교수직'을 받아 처음으로 '시장경제학'을 강의

하게 됐다(1월 8일).

- 동독에서 관광사업진흥을 위한 합의가 성립되어 특히 서독기업의 투자 내지 합작투자를 통해서 관광을 위주로 하는 서어비스산업을 확장하는데 서독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동서독 교통부는 '교통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특히 철도교통 공동작업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1월 9일).
- 동서베를린 대도시지역 공동개발위원회를 구성했다(1989년 12월 12일)
- 동서독 공동환경위원회 설치 (1989년 12월 14일)
- 동서베를린 재정부야에서 공동협력할 것을 합의 (1990년 1월 4일)
- 자매도시간의 공동경제위원회 설치 : 드레스덴과 함불크, 한노바와 라이프찌히 (1990년 1월 9일)

이러한 움직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독 수상은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1월 11일 원탁회의에서 밝혔다. 두 국가간의 관계는 미래에 해결할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로서 모드로우씨는 지금까지의 동독정부의 국가계획위원회를 단순한 경제위원회로 대체하면서 이 위원회가 정부경제정책을 자문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발표했다. 이 경제위원회는 학자, 경영자 및 원탁회의에서 선출된 사람들로 구성되었는데, 위원장은 지금까지 기계공업을 담당하고 있던 칼 그린 라이드 교수가 임명됐다. 이로써 지금까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경제정책을 조정하던 계획위원회는 없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사실상 새로 생긴 '경제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시장경제체제의 기능에 관해서 아무런 경험과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경제상 루푸트씨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로 결정했고 단지 조건으로써는 '동독의 이해관계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작투자는 가능하다고 했으나 경제장관은 '동독의 이해관계'가 무엇인지는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

동독 정부는 나아가서 1월 29일까지 '동독 경제사정에 대한 심층적 분석결과'를 제출할 것이며 3월초까지는 1990년 '경제계획안'을 제출할 것이며 2월초에는 '경제계획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1월 13일 루푸트장관은 동서독 정부, 경제계 대표 70명과 대담을 나눴다. 우선 장관은 동독의 '경제계획'에 대해서 강연을 하면서 서독기업체의 동독경제재건 후원을 요구하였다. 괄목할만한 사실은 서독측 경제계 거두들이 참석하였던 것이다. 예를 들면,

Tyll Necker (BDI: 경제인연합회 회장)

Carl H. Hahn (포크스바겐회사 사장)

Gerd Neglein (지멘스회사 사장)

Ernt Pieper (잘쯔기타회사 사장)

Edzard Reuter (벤쯔회사 사장)

Friedrich Spath (루-르 개스회사 사장)

Diceter Spethmann (뒃센회사 사장)

그리고 루푸트장관은 서독 경제계의 아성인 뒃셀돌푸의 상공회의소에서 사회주의체제 경제를 시장경제체제로 변형시킬 것을 약속하고 여기서 문제되는 소유형태, 가격개혁, 통화 태환가능성, 생산, 무역구조의 본질적인 개혁을 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서독 경제상

하우스만씨와의 회동에서는 '서독기업이 동독에 합작투자할 경우 49% 자본투자권을 능가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은 중소기업의 경우 일때'라고 합의되면서 동서독 전문가 공동위원회가 '투자보호 협정'을 위한 초안을 작성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을 결정했다.

1월 18일 서독정부는 동독 정부에게 '동독이 외국자본 도입을 위해서 문호개방을 하지 않거나 통화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시장경제적 조건을 조성하지 않고 개인 기업활동을 촉진시키지 않은 이상 경제 부흥은 없을 것이다'고 공공연하게 촉구했다. 자이터스 서독장관은 '동독은 '국가간섭제'와 '중앙집권적 계획'을 조속히 포기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와 합작투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금 그는 서독이 동독에게 부여하는 재정지원을 발표했다.

- 동서독 공동 여행기금 2billion마르크
- 동서독 기업체들의 경제 협력을 위한 서독 정부예산에서 ERP 차관을 위한 2billion마르크
- 서독 수출차관 추가 지출 1,5billion 마르크와 전액 6billion마르크
- 서독이 우체, 통신 추가원조 100million마르크를 지출하며 전액을 300million마르크로 올린다(조건은 우편, 통신 사회간접자본을 충실화 한다)

1월 23일 동서독 공동경제위원회가 동베를린에서 개최됐다. 이 회의에서 논의된 중점은 서독은 저이자 수준에서 6billion마르크를 지출하여 동독의 중소기업을 진흥시키겠다는 것인데 중점 지원대상은 기업체 설립, 환경보호, 생산시설 혁신, 수익성 개선 및 관광사업

등이었다.

1월말에 들어가면 서독과 동독간의 경제 기술, 협력관계는 점차 더 밀접하게 된다. 1월 25일에 내독성은 동독의 건강, 보건시설 개선을 위해서 92.5million마르크 상당의 의료품 약을 무료 제공하여 동독의 600개 병원에 지원하도록 했으며, 동서독 과학성장관은 공동으로 환경, 에너지, 교통, 통신, 사회과학 분야에서 실험력 체제를 확립하기로 합의하고 동서독 간의 통신교류에는 여러 전문팀이 구성되는 공동작업에 착수할 것을 발표하였다.

동시에 동독 정부는 '영업자유법'을 도입했고 외국인 합작투자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공포했다. 그리고 투자대상의 기업이 외국인투자 49%이상을 요할때 혹은 중소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할 때는 49% 투자선을 능가해도 가능하게 했다.

사실상 동독 정부내에서의 경제개혁의 토론중에서 문제된 것은 '완전한 시장경제를 도입하느냐? 혹은 계획경제에 시장경제를 가미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동독 경제상의 입장은 '시장경제 지향적인 계획경제'이었다. 물론 '순시장 경제모델'이 이상적으로 생각되고 있었으나 '시장지향적인 계획경제'가 실현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서독정부, 기업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서독쪽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다.

- ① 동독 문호개방의 약속은 있었으나 합작투자에 있어서 49% 이상 투자 가능한 곳은 다만 부식된 수익성이 없는 국민기업(VEB)뿐이다.
- ② 콤비나트(Kombinat) 헤체는 다만 생산성, 수익성이 저조한 곳으로 제한되어 있다.

- ③ 약속된 가격개혁은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 국가 고정가격제는 철폐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더욱 높은 가격수준에 의해서 대체됐다. (예 : 장미꽃 한 포기가 종전에 1.50마르크인데 지금은 2.65마르크로 됐다)

서독인들은 새로 생긴 '경제위원회'는 종전의 '계획위원회'와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1,300명의 관료는 구태의연하게 경제순환을 규제하고 있다고 비평했다. 루프트장관은 갑자기 시장경제를 도입하면 소련 원재료 공급자와 지금까지의 밀접한 협력체제를 붕괴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동독인이 하루 아침에 시장경제 사고방식에 익숙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개혁추진 속도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를 원탁회의 일부 대표는 아직도 공산당 세력이 막강하며 '개혁 열의'가 단지 형식적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Demokratischer Aufbruch 대표인 슈뉴어씨는 '종전의 공산당 출신 공장·기업경영자가 아직도 경영관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하간 동독 제조업의 80%는 아직도 '국영기업'으로 존속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다. 소기업은 동독의 서어비스 계통을 개선하나 대국영기업에는 개인기업체가 절대 간여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큰 예로써 전자계통과 기계계통이었다. 따라서 서독, 서구자본은 아주 적은 분야에서만 기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었다. (동독 합작회사법 1990년 1월 25일)

동독 루프트장관은 이와 같은 「시장경제 요소가 가미된 계획경제」 모델을 추진시키려 하면서 주저없이 서독정부에게 재정지원을 요구했다. 동·서독 공동경제위원회에서 동독측은 제2차 세계대전 배상

금을 720 billion마르크 이상을 지불했는데 반하여 서독은 다만 15 billion 마르크를 지불했으므로 서독이 동독에 균형보상을 한다면 이것으로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독쪽은 5월 6일 자유선거이후 합법적인 동독정부가 설립되지 않는 이상, “한푼이라도 지불않는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서독기업인들은 루프트장관의 아이디어는 좋을지도 모르나 구체적인 투자활동은 민주적 자유선거가 끝난 이후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5) 경제·통화 통합구상의 대두

이주민 수의 증대, 자유선거 실시요구 증대, 경제사정의 악화는 정부와 정치가의 행동을 언제나 너무 앞섰다. 5월 8일 예정이던 자유선거 실시는 앞당겨 3월 18일로 확정되었다(1월 29일 원탁회의에서) 이날 서독의 선거법을 모델로 한 선거법이 원탁회의에서 통과되고 극좌, 극우정당은 선거에 참가할 수 없게끔 규정하였다.

그동안 동서독 정부는 각각 소련정부와 ‘통일’에 대한 의사타진을 하였다. 1월 30일 고르바초프는 모드로우와 만나기 전에 ‘독일통일’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2차대전 ‘전승 4개연합국’의 의무가 있고 구주통합 과정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모드로우와 만난 이후 그는 ‘독일통일’ 문제에 대하여 앞으로 노력을 경주하며,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2월 1일 모드로우씨는 ‘독일통일 실현을 위한 4단계안’을 발표하였다.

첫단계, 경제, 통화, 교통, 법률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연방적 요소

를 포함하는 계약공동체 형성.

둘째단계, 공동기관제도(예;공동의회위원회, 지방의회, 공동집행위원회)를 기반으로 하는 동서독간의 국가연합의 형성.

세째단계, 동서독 양국가의 주권을 국가연합권력기관에 이양

네째단계, 통일독일을 연방형식 혹은 국가연합 형식으로 현실화 시킨다. 이를 위해서는 동서독에서 선거가 치루어져야 한다.

또한 통일독일은 통일국회, 통일헌법을 보유하며 베를린이 수도가 된다. 그리고 통일독일은 중립국이어야 한다.

모드로우씨는 이와 같은 통일방안을 제안하면서 이것은 「개인적인 견해」이지 여당인 공산당과, 원탁회의와 혹은 인접국가와도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기의 견해는 대체로 고르바초프의 견해와 일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작년 11월에만 해도 모드로우씨는 「통일독일」은 아무런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그간 그의 의견은 급속히 변했다.

2월 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동서독 수상은 재회할 기회가 있었다. 이 회동후 '쿨'수상은 자기가 '10개항'을 발표했다를 때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동독경제는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동독정부는 지금까지 필요한 경제개혁에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심하게 비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정부는 루프트장관을 통해서 2월 6일 10~12 billion마르크의 긴급 재정원조를 요청해 왔고 일부 태환제를 요구해 왔다. 이때 태환율은 1:1 혹은 1:2로써 제안해 왔으나 2월 7일 서독 각료회의에서는 오히려 '통화통합'을 위한 동서독 회담 시작을 결의했다. (사실상 통화통합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사민당의 재정전문가인 마태오스 마이어씨가 먼저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서독 수상은

2월 10일 고르바초프와 회동하고 난 후 동서독·소련간에 독일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견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여하간 동서독 수상은 가장 걱정했던 소련의 '통일독일'에 대한 외교문제는 제외하고 — 동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은 2월 13일 '쿨'수상의 모드로우씨에 대한 「경제, 통화 통합성립」제안의 큰 기둥이었다. 그리고 2월 20일에는 이미 「경제, 통화 통합공동위원회」 제1차 회담이 동베를린에서 시작되었다.

1월말과 2월초의 일반적 분위기는 '통화통합'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연방재무장 바이겔씨는 '통화통합'을 도입은 완전히 잘못된 신호를 동독인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하던 사람인데, 수일후 완전히 정반대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중앙은행장 쾨이르(Pohl) 박사는 하루전에 동독의 중앙은행장인 카민스키(Kaminsky) 씨와 회동하여 TV에 나와 공공연하게 '통화통합'은 시기상조라고 하였으며 서독 연방중앙은행 부총재도 같은 태도를 나타내었는데 하루밤 사이에 완전히 의견을 바꿔서 '통화통합'을 실현하는 것은 '중앙은행장'의 입장과 '한 국민의 입장'으로서 당연하다고 발표하였으므로 일반여론은 오리무중이었다. 일반적으로 학자·경제계·기업인 등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독경제의 생산성 수준을 어느 정도 올려야 하며, 자본축적이 어느정도 이루어져야 하며 시장경제체제가 어느정도 기능화 되어 있을 때 통화통합은 가능할 것이며, 이미 유럽의 EC차원에서 통화통합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경험상 잘 알고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쿨'수상의 단호한 결정은 경제적 합리성보다 우선하는 것이 정치라는 원칙하에서 '통화통합'을 실현해야 한다고 하여 이를 관철하였다.

한편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동독이 경제적으로 서독에 합류될 때 동독의 공동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제2의 경제기적을 동독에서 성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이 동독경제의 적자예산, 물가 및 이자율비등, 실업증가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서베를린 경제연구소(DIW) 소장 호프만 교수는 성급한 통화통합은 250만 내지 3백만 실업자를 초래할 것이며 서독은 동독인 실업자들에게 월 500마르크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년 15—18 billion 마르크) 말하였다. 그리고 서독정부 최고경제자문회의도 동독의 생산성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파산하는 기업이 많이 생기고 실업자 구제를 위한 공공예산에 부담이 증대되어 인플레이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비판론을 제기하였다. 기업인들은 자기 자신의 Risk가 있는 투자는 특히 중소기업은 대단히 유의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논평하였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최저조건이라고 비판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낙관론자는 수많은 고용기회 창출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1993년까지 동독은 EC에서 중간급의 경제수준에까지 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비덴콤포(Biedenkopf) 교수는 일시 불황이 올 것이나 그 이후 GNP성장률은 8—10%까지 증대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제도적, 법적, 사회간접자본적 조건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6) 동서독인의 '통일의식' 비교

동서독인의 통일에 관한 여론조사를 분석해 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동독인은 「통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편

이다. 반면, 서독인은 유달리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서독인의 「물질중심주의」 「이기주의」가 일목요연하게 나타난다.

우선 동독인의 여론조사를 보자. 라이프찌히 여론조사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추세를 분석했다.

【당신은 독일통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단히 찬성	거절보다는 찬성한다	찬성보다는 거절한다	대단히 거절한다
1989년 11월	16%	32%	29%	23%
1990년 1월/2월	40%	39%	15%	2%
1990년 2월/3월	44%	40%	13%	3%

「찬성」쪽이 작년 11월에는 불과 16%였는데 1990년 2월, 3월이 되면서 거의 두배가 되는 현상을 보여주어 「통일해야 한다」는 의식이 점차 증가했고 통일반대가 작년 11월에는 오히려 더 많은 편이었는데 금년 2월/3월에는 불과 16%로 낙착되었다.

서독의 알렌스바하(Allensbach) 여론조사는 다음과 같다. (2월 9일 조사).

서독인은 동독인보다 훨씬 낮은 「찬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많으면 많을수록 「찬성도」가 높다. 역시 이것은 2차대전전에 「독일제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독에서 이주·피난해 왔기 때문이며 젊은 세대(44세까지)는 전후 세대인 이상「분단의 비극」을 그렇게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독일통일에 관한 견해는?】

	찬 성		불 찬 성
전 체	69%		11%
년 령 별	57%	16 - 29 세	17%
	64%	30 - 44 세	16%
	76%	45 - 59 세	7%
	80%	60세 이상	5%
정 당 소 속 별	71%	기민당(CDU)	6%
	69%	자민당(FDP)	8%
	63%	사민당(SPD)	15%
	48%	녹색당(Grüne)	21%
	66%	공화당(Rep)	20%

정당소속별로 보면 역시 보수파의 「찬성도」가 단연 높고 녹색정당은 오히려 독일 통일에 대하여 대단히 비판적이다. 「독일민족」의 과거역사를 보아 「독일민족」이 「대국가」, 「대민족」으로 등장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다음은 서독인에게 지금 가장 중대한 문제가 무엇인가 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서독인에게 가장 중대한 문제는?]

순 위	항 목	비 율
1 위	환 경 보 호	60%
2 위	실 업 자 해 소	52%
3 위	주 택 건 설	44%
4 위	연 금 제 도 확 립	39%
5 위	통 일	23%

동서통일은 서독인에게 큰 관심사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들면 마약금지, 가족부양, 범죄행위감소, 구주통합이 같은 부류에 속하는 관심사이다.

다음은 「통일비용」의 문제이다.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면 서독인들은 「통일이 가지고 오는 비용」에 대하여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일이 가지고 오는 비용에 대한 서독인의 견해]

감수할 용의가 있다		이런 현상들이 생길 것이다
27%	세 금 인 상	75%
26%	사 회 보 장 세 금 이 상 승	61%
23%	정 부 부 채 는 커 진 다	61%
24%	차 관 은 비 싸 진 다 이 자 는 비 싸 진 다	47%
15%	마 르 크 는 불 안 정 하 게 된 다	44%

8%	사회보장제도가 나쁘다	38%
21%	일시 임금인상이 없다	34%
3%	연금제도가 불안하게 된다	35%
8%	마르크가 절해된다	29%
2%	인플레이가 생긴다	14%

통일비용에 의한 여러가지의 현상들이 생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물질적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것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통일비용」에 관해서 더욱 구체적인 설문은 「당신의 통일을 위한 희생은 어느정도일까?」 여기서도 알 수 있지만 「희생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4분의 1을 이루고 있다.

[당신의 통일을 위한 희생은 어느 정도일까?]

		희생이 크다	크지 않다	말하기 불가능하다
전 체		24%	51%	25%
연령별	16 - 19 세	16%	63%	25%
	30 - 44 세	21%	55%	24%
	45 - 59 세	28%	47%	25%
	60세 이상	36%	37%	27%
정당별	기 민 당	33%	42%	25%
	자 민 당	25%	37%	38%
	사 민 당	17%	58%	25%
	녹 색 당	14%	66%	20%
	공 화 당	17%	70%	13%

아주 흥미스러운 설문은 다음과 같다 :

「경제통화통합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월 1,900마르크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는 자기 소득에서 10년간 일부를 통일비용에 쓴다면 찬성하는가?」

(1990년 2월 기준)

항 목	비 율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5 %
주저하면서 찬성한다	15 %
반대한다	77 %
무답	3 %

통일을 찬성한다고 볼 수 있으나 「통일비용」각출을 위한 희생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는 서독인에게서 찾아 볼 수 없다.

이 여론조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로서 결론을 지었다. 「사실상 서독인들의 애국심·민족심은 대단히 저조하다. 독일통일과 관련해서 단지 12%만이 독일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고 싶다」고 했다. 여하간 서독인의 「애국심」, 「민족주의」는 2차대전전의 '독일민족의 이름'하에서 행해진 비참한 범행때문에 터부시되어 발달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는 오히려 과대평가 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다.

3. 동독에서 첫 민주주의 선거 : 서독정당 영향하의 동독정당

(1) 선거전 : 「우리는 민주주의의 아기들」

1990년 2월까지 다음과 같은 수많은 정당과 사회단체가 그간 생겼다.

- 35개 정당
- 16개 시민운동
- 12개 여성운동단체
- 52개 청년운동단체
- 6개 노조
- 24개 정당을 가지고 있는 단체
- 42개 직업단체(일부는 정당까지 가지고 있다)

특히 3월 18일로 선거일이 당겨지자 상기한 단체, 정당 형성과정 이 더욱 가속화 되었다. 서독의 정당들은 동독에 파트너를 찾거나 (기민당, 사민당의 경우), 또 자매정당을 설립하거나(기사당의 경우) 함으로써 원탁회의에서는 서독 및 외국정당이 동독선거전에 참가하지 않기를 권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서독정당은 물질면으로(재정적으로, 시설면으로), 인적으로(선거유세, 응원) 동독 선거전에 직접 관여하였다.

선거기간중 각당의 활동을 살펴보면 사민당은 동독의회 SDP가 명칭을 바꾼(1월 14일) SPD의 자매정당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원래는 SDP, Demokratischer Aufbruch, 노이에스 포름, Demokratie jetzt, 좌익연합, Initiative Frieden and Menschenrechte, 이 여섯 단체(무혈혁명의 주동이 됐던 세력)가 '선거연합90'(Wahlbündnis 90)을 형성했으나 사민당은 나중에 탈퇴해서 독립적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했다. 좌익연합도 탈퇴하여 '선거연합 90'은 약화됐다. 동독공산당(SPD-PDS)은 1월 20일 정당해체를 거부하고 오히려 정당 자체의 개혁을 목표로 하여 존속하면서 앞으로는 단지 'PDS'로 칭하기로 했다(2월 4일);자민당(FDP)는 2월 4일 동베를린에서 자매정당을 설립했다. 기민당쪽은 상당한 고전을 한 후 기민당, 기사당, Demokratischer Aufbruch를 뭉쳐 선거연합을 형성했다. 이것이 '독일동맹(Allianz für Deutschland)'이었다.

24정당 및 정당단체가 선거전에 참가하였으며 유권자는 1천2백20만으로 산정되었다.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을 보면 1월달에 사민당은 54% 절대다수로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종반전에 들어서서는 기민당 중심의 '독일동맹'이 대단히 많이 만회하여 라이프찌히 여론조사에 의하면 사민당이 34%, '독일동맹'이 30%에 달하였다. 그리고 PDS가 17%로서 여하간 좌익측 정당이 득세할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측하였다.

그러나 선거결과를 보면 기민당을 중심으로 한 선거연맹이 압도적 승리를 획득한다. 선거연맹은 48.15% 득표, 193의석을 획득하여 절대다수선에 접근하였다. 기민당만이 40%이상을 획득하였으며, 오래동안의 예측에서 선두에 서 있던 사민당은 불과 21.84%로 낙착되었다. 의석이 87석이 된 공산당(PDS)은 예상외로 그 세력이 아직

도 16.33%로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 이와같은 기민당의 승리는 무슨 이유때문일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동독국민이 빈곤속에서 해방되고 싶다'는 동기였다. 즉 서독인과 같은 부유한 생활을 향유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동기였다. 부유한 생활을 향유하기 위하여는 서독 야당권의 정당인 사민당을 지지하는 것보다 현재 집권당인 '콜'의 기민당을 지지해야만 부유한 생활로 가는데 첩경이라고 생각하였고 '콜' 자신이 6차례의 동독선거 유세시에 기민당만이 동독 경제부흥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들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약속을 주었다.

아주 괄목할 사실은 서독과 같은 정당선호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남쪽은 보수세력, 북쪽은 진보세력"이라는 서독의 선거민 양상과 비슷하다. 예를들면 드레스덴, 에르푸르트, 게라, 켐니츠, 쥘 등 남쪽지방에서는 보수세력(기민당)이 우세하였고 프랑크푸르트(오더), 동베를린, 쏫츠담, 로스톡 등(북부지방)에서는 사민당이 우세했다. 남쪽지방은 서독과는 달리 오히려 동독의 공업중심이므로 노동자가 대부분 이 곳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戰前에는 '사민당의 본토'라고 칭하여 왔던 곳이다.

(2) 동독 민주정부의 출발

3월 18일 총선후 4월 12일 동독의 신정부는 발족했다. 26명의 각료를 포함하는 '대연정'이었다. 신정부에는 기민당, 사민당, 기사당(DSU), 자민당연합(BFD)이 참가했다. 총리직은 더 메저어(기민당), 부총리직은 디스텔(기사당)이 맡게 되었고, 외무, 재무, 농림, 노동

• 사회, 통신, 과학기술과 같은 중요부서는 사민당에게 넘어갔다.

대연정을 형성하는데 여러가지의 문제가 있었다. 기민당수 '더 메지어' 자신이 총리로서 집권할 적극적 의욕을 표명하지 않고서 주저하고, 겸손한 입장을 취하여 왔다. 그러나 서독정부의 강력한 압력에 의하여 동독정부를 리드하게 되었다. 그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회경제체제를 어떻게 시장경제체제로 옮겨놓는가 하는 것이었다. 동독 사민당에는 시장경제의 메카니즘에 심층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없었다. 그는 앞으로 당면한 '경제통화통합'을 위한 전문가가 절실하였기 때문에 우선 전 베를린 경제상 엘마 피로트(Elmar Pieroth)씨를 자문으로 모시기로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전문가는 두 가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 시장경제의 메카니즘을 잘 아는 사람, 둘째 실제 기업가, 경영자로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피로트씨는 왕년 베를린 경제상이 되기 전에 포도주 생산공장 경영을 한 사람이며 외국무역에도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대연정 설립에서 다른 문제는 사민당의 태도였다. 사민당은 선거운동중 보수세력으로부터 공산당(PDS)과 같은 차원에서 공동협력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전형적인 상징이 'PDSPDPDSPD'이었다. 즉 사민당은 공산당과 같은 정당으로 오해받게 되었고 특히 기사당과는 절대 연립하지 않는다고 공약까지 하였다. 기사당은 너무나 보수적이며 서독의 기사당보다 더욱 보수적이고 '파쇼색채'가 농후하다고 사민당은 생각하였기 때문에 기사당과 연립하는 것에 대단히 주저하고 있었던 바, 문제의 초점은 야당으로 있게되면 결국 PDS와 같은 배를 타게 되고 PDSPD구호에 맞다는 인상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야당으로서는 통일과정에 있어 중대 사항 결정

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없었다. 결국 동독 사민당은 서독 사민당의 권유에 의하여 대연정에 참가하게 되었다.

4. 동독에 있어서 40년간 사회경제체제의 유산

(1) 40년간 사회경제체제의 유산

3월 18일 총선결과는 동독인의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폭로해 주었다. 신정부가 이어받은 유산은 한마디로 서독에 비하면 파산이라고 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신정부가 시장경제체제로 혁신하기 전에 동독경제의 현황을 서독경제와 비교하는 것은 절대적 조건이다.

다음의 기술은 동베를린의 응용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요약한 것이다.

- ① 동독 가계의 평균실질소득은 서독에 비하여 반 정도이다.
- ② 화폐·비화폐 재산수준은 서독과 비교하면 1 : 3정도이다.
- ③ 서독의 일인당 외국 무역수지는 동독과 비교하면 2배반 이상이다.
- ④ 생산성을 비교한다면 동독의 생산성(순부가가치 기준)은 서독의 반 정도이다
- ⑤ 학문, 기술수준, 상품의 품질, 노동자의 탄력성, 신속성 등 질적 수준을 고려하면 동독의 생산성 수준은 더욱 낮아진다.
- ⑥ 동독의 투자량은 실질대체, 신투자 수요의 85%만이 충당된다. 기계소모율은 대단히 높다. (55%; 국제수준은 45%) 노후

시설 격리도는 서독에서 연 4%, 동독은 1%이하이다.

- ⑦ 동독에서 제조업 투자가 80%, 서독은 약 50% 정도이다. 이 유인 즉, 동독은 원재료생산, 가공에 많은 투자를 한다. 그 대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대단히 미흡하다.
- ⑧ 도로망은 대부분이 파괴되어 있다. 지난 10년동안 도로, 선로, 교통수리 수요는 불과 70%정도 충족됐다.
- ⑨ 전화시설의 72%는 30년 이상 노후화되어 있다. 전화보급율은 세계에서 65위이다.
- ⑩ 주택의 난방장치는 70%가 아직도 옛날식으로 석탄등을 연료로 하고 있다. 주택소모율은 42%정도이다.

(2) 통일비용

그럼 서독기업인들은 통일비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문헌 IFO연구소의 앙케이트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독정부는 '통일비용'을 어떻게 지출해야 하나?】

(500명의 경영자에 대한 설문해답)

항 목	찬 성	반 대
부채를 더욱 많이 늘린다	36%	22%
부가가치세를 올린다	30%	69%
현안중에 있는 간접세에서 조세특혜를 포기한다	31%	67%
소득세를 올린다	16%	82%
일시 특정목적용을 위한 소득세를 증가한다	44%	54%

여기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실은 정부가 더욱 많은 부채를 내는 데는 찬성하고 있으나 소득세를 올리는 데는 불찬성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기업인(18%)들은 정부가 '마샬플랜'을 책정하여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전에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실로서 대부분의 기업인(90%)들은 국방예산을 축소해야 한다고 했으며 93%기업인들은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예산 재배당을 해야 하며 동서독 국경지역(Zonenrandgebiete)의 개발지원금을 삭제해야 한다고 하였다.

(3) 통일이냐 병합이냐

「통일」로 가는 헌법적 접근으로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학자간에 대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이 논쟁은 서독 및 동독 정당의 시나리오와 대조하면 학자들의 이념적인 선호성과 절대적 관계를 갖고 있다.

두가지 방법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 ① 서독 기본헌법 제23조(이 방법을 주장하는 학자를 23조파라고 칭한다).
- ② 서독 기본헌법 제146조(이 방법을 주장하는 학자를 146조파라고 한다)

서독기본헌법 제23조에 의하여 한때 동독의 '사르-주'가 50년대에 서독연방공화국에 병합되었듯이 국회(동독)의 결의에 의하여 서독에 그냥 병합(Beitritt)되어 버리는 것이다. 병합론자의 근거는 납득할 수 있다. 동독이 서독에 병합됨으로써 자동적으로 EC에 통합

되어질 수 있으며 서독의회가 통일을 위한 특별한 결의 및 선거를 시행할 필요가 없어지고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서독에 합병됨으로써 외교정책상으로도 많은 이점을 가져 독일의 외교적 신빙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23조 학파’의 대부분의 학자는 법학자, 특히 헌법학자들로서 ‘비트볼크 Circle’의 멤버들로서 보수주의적 법해석 뿐만 아니라 기독교 민주당, 기독교 사회당에 가까운 학자들이 대부분이다. 이 대표자들 중에 우리나라에서도 알려져 있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Günter Dürig (Tübingen대) : 헌법주석으로 유명하다

Wilhelm Grewe (Bonn대) : 헌법, 국제법학자

Wilhelm Kewenig (Kiel대) : 전 베를린주 내무부장관

Rupert Scholz (베르린대) : 전 국방장관

‘146조 학파’는 법학자, 사회과학자, 철학자등으로 반드시 법학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표자들은 수주전에 공표된 Petition의 서명자들인데 서명한 문서의 타이틀은 ‘국민은 어디에 있는가?’로서 전 독일 제헌국회성립을 주장하였다.

146조의 내용은 ‘독일민족이 자유결의에 의하여 신헌법이 유효하게 되면 서독의 본헌법은 그 유효성을 상실한다’이다. 그런데 146조 주장자의 근본요지는 다음과 같다.

- (무혈) 민주혁명에 의하여 쟁취한 동독의 자기존엄성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병합을 강요할 수 없다)
- 지금까지 성공적인 민주주의 실적을 공개토론에 의해서 더욱 확립시키자.

- 양독국민이 동등한 입장에서 통일을 추구하며 이러한 조건하에서 신헌법을 제정하자.

146조파는 나아가 기본헌법 서문에 명기되어 있는 헌법정신으로서 '전독일 국민이 같이 미래의 정치체제에 관하여 자결한다'라고 약속되어 있으므로 23조는 동독을 식민지화하는 것과는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흥미있는 사실은 자민당, 사민당 등의 비보수계의 학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유명한 철학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Jurgen Habermas (프랑크푸르트대)

Ernst Tugendhat (베를린대)

Michael Theunissen (베를린대)

사회과학자로서는,

Wilhelm Hennis (프라이블크대)

Oskar Negt (하노버대)

Jurgen Seifert (하노버대)

146조파는 3월 18일 동독선거를 부인한다거나 그 정당성 내지 합법성을 의문에 부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전독일국민의 공개토론없이 23조에 의한 동독병합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야당계통 내지 비보수계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서독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자민당(FDP)도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전국에서 혹은 동독에서만 보선을통하여 전독

국회를 형성할 것인가 하는 의견이 대립되어 있다. 기독교사회당(CSU:기사당)과 기민당 일부는 동독에서만 통일의회를 위한 보선에 의하여 의원을 뽑자는데 반하여 자민당, 사민당은 이 안에 대하여 반대하며 상기한 병합이론과 같이 서독의원을 second class로 취급하는 의향이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문제의 구상은 현 서독수상의 통일스케줄은 대단히 급하다. 그는 통일된 수상으로서 독일역사에 제2의 비스마르크처럼 남고 싶다. '쿨'수상이 생각하는 전략은 늦어도 내년 후반기에 통독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문제는 서독 기본헌법 39조에 「선거는 4년마다 시행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금년 12월초에 선거가 시행되어 새 국회가 구성된다면 결국 내년 통독선거를 위하여는 국회해산이 필요하게 된다. 국회조기해산을 위하여는 헌법개정이 필요하게 되며, 헌법개정은 국회의원수의 3분의2의 찬성이 필요하다.

앞으로 통독으로 가는 헌법정책적 해결은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이며 조만간 생기게 될 동독정부와 연정을 하게 될 사민당(SPD)이 서독 SPD와 많은 점에서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성급한 통일독일'에 약간의 수정이 갈 것으로 본다. 슈피겔지가 조사한 여론분석(4월 2일)은 다음과 같다.

◎ 독일통일에 있어서 병합형식, 혹은 국민투표를 선호하는지?

- 병합형식 : 33%
- 국민투표 : 65% (국민투표가 단연 우세하다)

◎ 정당별로 병합형식에 대한 선호도

- 기민당/기사당 : 38%
- 사민당 : 30%
- 자민당 : 39%

- 녹색당 : 25%
- 공화당 : 35%

(보수계통은 진보계통보다 병합형식을 더 선호)

(4) 동독개발은 서독기업인에게 일대 도전

누구보다도 왕년의 유명한 수상 헬무트 슈미트는 90년대에 있어서 동독 동구개발은 우리 기업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도전이라고 했다. 어떤 이는 중구경제권, 게르만경제권 형성 등을 운운하면서 조속히 동구, 동독에 진출해야 한다고 하였다. 500기업인 중 반이상인 53%의 서독기업인은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보다 동독에 투자할 용의가 있다. 이러한 동독에 대한 서독기업의 선호는 헝가리, 체코에도 해당한다.

다음표는 동독과 EC의 주변국(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과 비교해 본 것이다.

[동독의 투자입지조건에 대하여]

항 목	더욱좋다	동등하다	더욱나쁘다	무 답
건 설 업	72%	9%	15%	4%
식 료 품	70%	6%		24%
투 자 재	54%	17%	18%	11%
상 업	50%	16%	12%	22%
소 비 재	43%	19%	27%	11%
원 재 료	40%	30%	20%	10%
평 균	53%	16%	18%	13%

특히 건설사업과 식료품생산에 있어서는 동독이 단연 더욱 많은 선호를 가지고 있다.

Roland Berger & Partner 회사가 조사한 서독기업인의 동독투자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앞으로 2년이내 어떤 분야에서 어떤 형태로 동독에서 활동할 예정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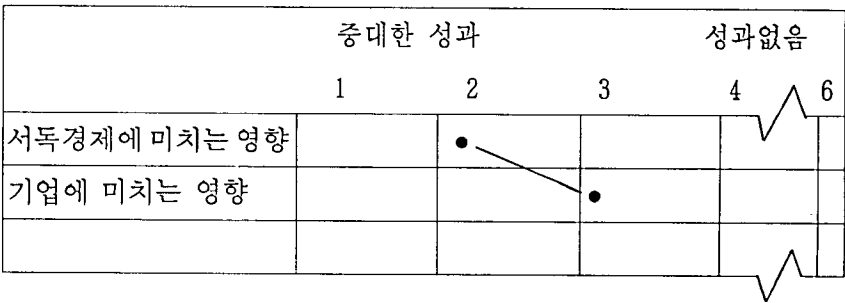
	산 업	무역+서비스	기 타
합 작 투 자	62	50	57
수 출	70	29	54
수 입	45	43	42
기타협력(예:특허위임)	49	7	36
직 접 투 자	21	14	20
F+E와의 공동사업	28	-	19

② 과거 어떤 분야에서 어떤 형식으로 동독과 교류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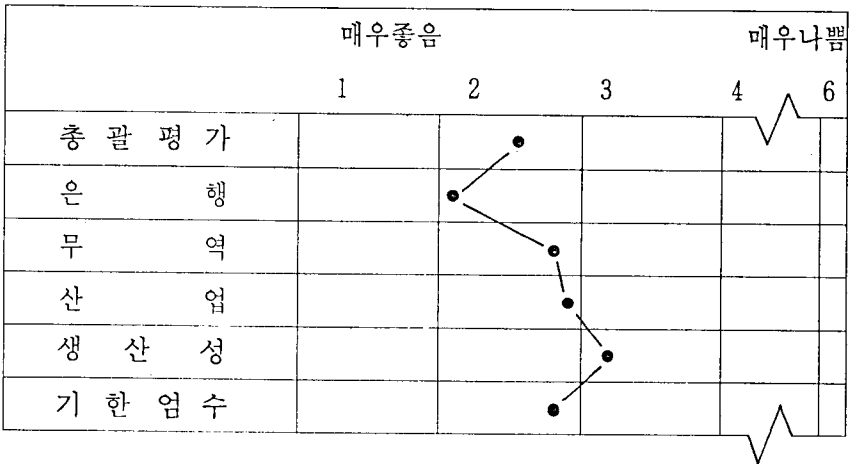
	지속성교류	일회성교류	합 계
수 출	42	16	58
수 입	41	17	58
대 상 기 업	10	9	19
F + E 협 력	4	7	11
생산에서의 능력	13	3	16

- 직접투자는 큰 선호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합작투자, 특히 수출은 대단히 높은 선호도를 갖고 있다.
- 과거의 경험은 '1회거래'보다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오히려 파급되어 있다. 여기서도 결국 '수출입'이 가장 큰 항목을 이루고 있다.

③ 동독의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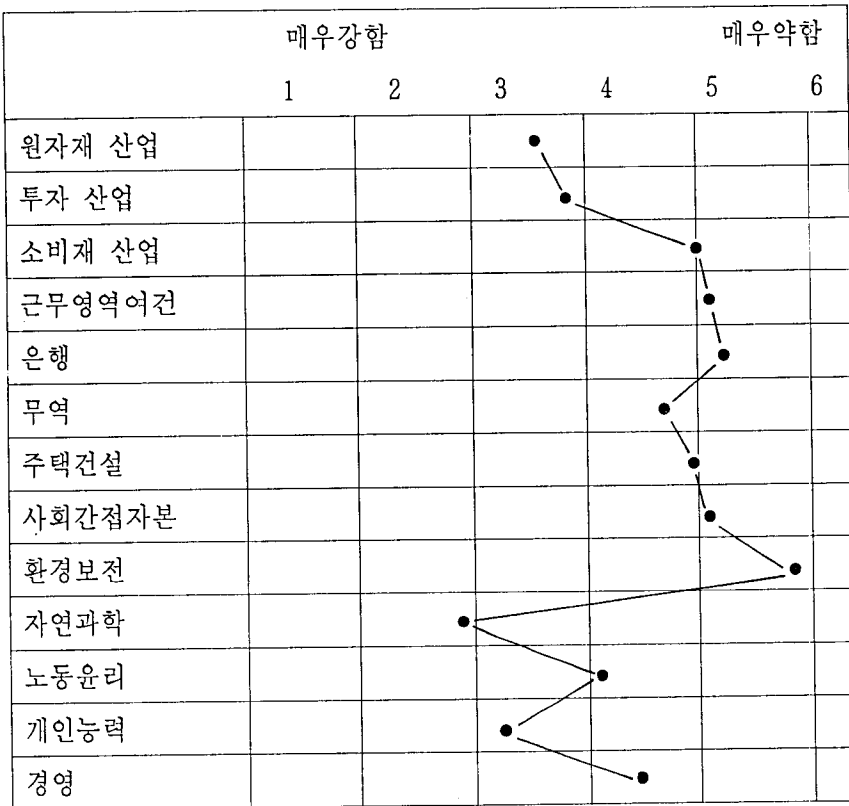


④ 동독 거래에서 얻은 경험은?



- 개인기업 차원에서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지 않으나 거시적 입장에서는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 지금까지의 경험은 은행분야에서 좋은 경험이 있었다고 본다.
- 동독의 경제력에서 가장 중요시할 수 있는곳은 '자연과학'계통이며, 다음은 '인력의 질'이라고 보고 있다.

⑤ 동독 경제력은 어느 정도인지요?



【동서독의 생필품 가격 비교】

		서 독			동 독		
품 목	수 량	가격 (DM)	노동시간		가격 (M)	노동시간	
			시간	분		시간	분
빵	1 kg	3.18	0	10	0.52	0	5
버 터	250 g	2.15	0	7	9.60	1	27
설 탕	1 kg	1.91	0	6	1.55	0	14
우 유	1 l	1.20	0	4	0.68	0	6
계 란	1 개	0.25	0	1	0.34	0	3
소 고 기	1 kg	9.79	0	32	5.80	0	52
돼 지 고 기	1 kg	10.67	0	35	8.00	1	12
감 자	2.5kg	2.47	0	8	0.43	0	4
치 이 즈	1 kg	11.98	0	39	9.40	1	25
원 두 커 피	250 g	4.47	0	15	17.50	2	38
맥 주	0.5 l	0.95	0	3	0.72	0	7
브 랜 디	0.7 l	14.62	0	48	14.50	2	11
갈 탄	50 kg	20.55	1	7	1.70	0	15
가 정 용 전 기	1 kW	0.31	0	1	0.08	0	1
칼 라 T. V	1 대	1,539	83	30	4,900	739	4
냉 장 고	1 대	559	30	20	1,425	214	56
세 탁 기	1 대	981	53	13	2,300	346	54
우 편 료	1 장	0.80	0	3	0.20	0	2
라디오 청취료	1개월	5.16	0	17	2.00	0	18
시내전화통화료	1통화	0.23	0	1	0.20	0	2
산업노동자의 시간임금		18.43 DM			6.63 M		

출처: Koln 독일경제연구소, 1988년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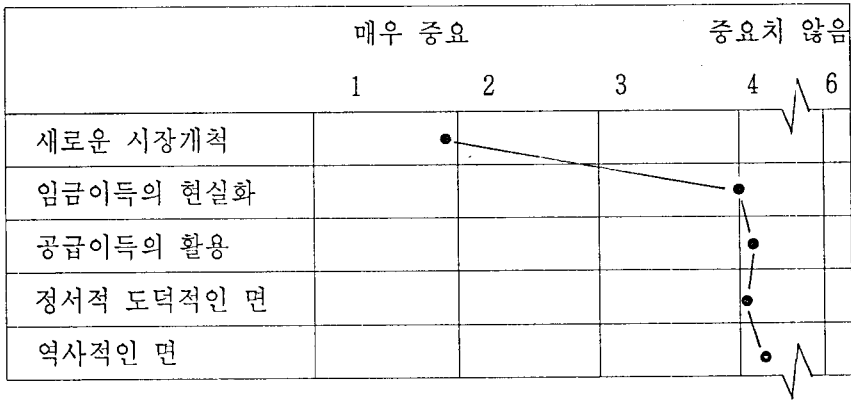
그러나 일반적으로 동서독의 생산성을 비교하고 동독의 저조함을 명확히 하면서도 동독에 투자를 증용하고 있는 형편인데 우선 서독 기업이 동독에 투자하는 동기를 조사하기 전에 구매력을 비교해 본다.

앞의 표에서 보면 빵(Mischbort), 돼지고기, 감자, 치즈, 블랜디 등 노동집약적 분야를 제외하고는 동독이 훨씬 고가의 수준이다.

특히 칼라TV, 냉장고, 세탁기는 일반적으로 두배 이상이며 제조 시간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인이 동독에 투자하는 동기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신시장개척이다. 감정적 도덕적 동기, 역사적 동기는 아무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⑥ 동독에 투자하는 동기



보스톤 컨설팅 그룹(자문회사)은 동독에 빨리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도표화 하였다.

【동독에 대한 투자동기】

	생산에서 오는 장점	신 시장 획득
지역 비지 네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독에서 잠재수요 * 시스템 비즈네스를 그냥 이전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구에 미리 진출 * 일본경쟁 방어
국제 비지 네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now-how의 이전이 쉽다 * Synergy 효과 (물자, 상품의 구입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이 풍부함 * green field 통과 * 투자지원금 이용

(5) 통화통합으로 가는 길 : 1 : 1과 1 : 2

동서독 통일달성의 삼위일체를 경제통합, 통화통합, 사회통합이라고 한다. 현재 가장 심각하게 토론되고 있는 것은 통화통합이다. 서독정부는 통일일정을 발표하면서 7월초에 통화통합을 달성할 것이라고 명백히 선언하였다.

그러나 지금 토론되고 있는 통화통합 달성은 상당히 곤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지금까지 동독인이나 서독인들은 동서독 화폐태환율은 1 : 1로 변경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서독측에서는 종전에 학자간, 정당간, 제의견이 대립되어 1 : 1의 태환률은 많은 문제를 동독에서 야기시키게할 것이라고 논의했으나 결국 서독정당의 강력한 태도와 더욱이 동독선거전에서 콜 수상은 빠른 시일내 1 : 1로 태환율을 정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이후 통화통합에 관한 많은 토론이 진전되더니 지금 서독 중앙은행에서

발표하기를 1:2로 태환률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함으로써 큰 정치문제가 일어났다.

1:2 태환률은 서독중앙은행이 서독정부에 비밀리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인 즉 통화통합시에 동독화를 서독화와 2:1로 교환(일반적)하며 동독인의 2천마르크까지 저축액은 1:1로 교환해 주도록 추진하자는 것이다.

서독연정의 자민당(FDP)계의 정치가들과 야당의 사민당(SPD)은 물론이지만 동독의 연정성립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기민당(CDP), 사민당(SPD) 및 현재 과도정부를 이끌고 있는 모도로우 수상(PDS 당) 등은 이구동성으로 통화통합이 1:2조건하에 이루어지는 것은 콜 수상의 공약위반이라고 했으며 콜 수상은 그러한 공약을 한 기억이 없다고 한다. 서독 재무부장관 바이겔씨도 물론 중앙은행의 제안을 지지하고 있다. 물론 통화통합에 관한 토론이 이 상태로 지속되지 않았다. 이유인즉 첫째 만약 2:1의 태환율이 확정된다면 그간 저조해진 이주자수가 다시 증가할 것이다. 둘째 5월에 동독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이 선거는 3월 18일 선거와는 판이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되며 더욱이나 기민당의 낙승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1:1의 공약위배가 선거전의 이슈가 될 때 전번 선거시의 40%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통화통합의 근본 구상은 무엇이었던가?

첫째, 임금과 월급

현재 동독의 임금수준은 1,250마르크, 임금추가액(휴가·성탄절 보조)을 50마르크로 보면 전부 1,300마르크인데 이것은 서독 임금수준(4,000마르크)의 32%이다. 1:1로 했을때 동독의 임금수준은 단 시일내 2,000마르크까지 오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서독수준의 50%

를 달성하게 된다. 이런 수준은 현재 동독수준의 생산성으로서 도저히 감당해 나갈 수 없다.

만약 1:2태환율을 도입한다면 서독임금의 4분의1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사정에서는 동독기업자체로서는 임금인상의 능력은 희소하지만 정부보조금과 더불어 결국 서독수준 40%까지 따라올 수 있게 될 것이다. 고로 1:2태환율은 어느 정도 현실적이라고 본다. 둘째, 연금

현재 동독인의 연금수준을 480마르크로 본다. 서독은 1,600마르크이다. 고로 동독수준은 서독의 30%정도이다. 만약 서독사회노동장관의 공약대로 한다면 동독수준은 880마르크까지 올려 서독수준의 56%까지 올리게 된다. 이것은 1:1로 보았을 때이다. 만약 1:2를 기준으로 하면 상기계산의 결과는 서독수준의 불과 36%로서 현재 형태보다는 약간 좋아진 것이다.

그러나 문제점은 동독인의 저축금과 연금이다. 자민당 당수 Graf Lambsdorff에 의하면 “동독인은 동독의 연금제도가 보잘것 없으므로 대부분이 열심히 저축해왔다. 따라서 저소득자의 저축액을 1:2로 태환해 준다면 이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공약의 위배이다”라고 했다. 동독의 사민당 부당수 Meckel씨는 1:2가 발표되자 간단하게 말하기를 1:1과 사회보장제가 동시에 달성되어야만 한다고 요구하였다

엠니드 여론조사에 의하면 1:1을 주장하는 쪽이 39%, 반대하는 쪽이 60%이다. 2월과 3월의 여론변화를 비교하면 통화통합이후 마르크가 안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47%에서 52%로 증가하였다.

4월 중순 서독정부는 이미 (제1차)국가조약의 초안을 작성하여 제

한된 기관과 인물들에게 벌써 전달하였다. 이 문서는 초안이라는 명칭이 없었고 동독에 제출하는 제안을 하기 위한 몇가지 요소라고 칭하였다.

본 정부는 제발 성급한 인상을 없애고, 또 동독에게 강제하는 인상이 생기지않도록 대단히 유의하는 점에서 이 문서를 다루었다. 이 문서는 7월초부터 발효할 것을 예측하여 많은 관리 연구가들이 성급하게 한 작업이었고 사실상 동서독간의 협상을 위하여 아주 긴박한 타임스케줄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8주간은 양독의 중앙은행, 재무관리, 노동청, 은행 등등의 작동 준비를 하는데 필요함으로 미리부터 상세하고, 구체적인 양독간의 토론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독국회가 만약 이 조약을 승인한다면 지금 동독에서 유효한 많은 법규를 폐지하고 심지어는 국제조약까지 폐기하는 결과가 되며(부록Ⅲ), 부록Ⅳ에서는 서독의 모든 조약, 은행, 연금법 등등을 무조건 받아들이게 된다. “제출된 서독 제안에 불가피하게 동의함으로써 경제분야에서 동독은 자기주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다(Mit einen unausweichlichen Ja zu dem Vertrag gibt Ost-Belin auf wirtschaftlichen bebiet seine Souveranitat auf)”

모든 경제주권을 동독은 포기하나 서독은 동독의 부채상환 부담을 이양받는다고 하는 조문이 들어 있어, 이것은 재무상 바이켈씨의 특별양보로 알려졌다.

동서독 마르크 태환율에 있어서는 더 메지어의 포지션이 약간 우세하도록 해주었다. 즉 임금은 1:1, 임금에 의해서 연금이 이전되게 하고 있으며, 저축금에서는 중앙은행이 주장하는 2,000마르크이상 1:1로 태환해 준다는 조항이 들어있고, 결국 5,000마르크 혹은

8,000마르크 최고수준만이 미확정이었다. 그 이외 동독정부에게 주는 몇가지의 「과자」(Bonbon)들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 「문서」가 점차 알려짐과 동시에 연방재무상 바이겔씨는 통화통합, 경제통합이 이뤄지면 동독예산적자가 35-50billion마르크 생길 것이라고 말하면서 특히 서독연방주들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돕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고 연방정부는 자본시장에서 33billion마르크 부채를 얻어 예상치 않은 1990년도 갭을 막으려 했다.

한편 상기의 「문서」는 공식으로 서독야당들도 손아귀에 넣지도 못하고 신문지상, 혹은 비밀채널을 통하여 얻어 「문서」의 내용을 점차 알게 되자 서독야당 사민당은 ‘콜’수상이 「통일문제」를 「자기 개인문제」로 간주하고 야당 및 제민주기관을 의사결정에 전혀 참여시키지 않는다고 12월 총선의 도전자 오스카 라폰텐은 신랄히 비판하고 나섰다. ‘콜’수상은 「통일비용」이 얼마다라고 솔직하게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4월초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콜’수상이 추진하는 「통일정책」에 대해 65%의 서독인은 너무 성급하게 한다고 했으며 단지 31%만이 통일추진속도가 적당하다고 했다.

서독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콜’수상의 급행열차식 경제, 통화통합에 관해서 크게 만족하지 않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우선 앞의 「통합」을 위한 「문서」에서도 나타났지만 1:1이라는 태환율은 동독선거전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다. 다음 두가지 설문 결과에 잘 나타나 있다.

- ① 동독국민 중에서 ‘콜’수상이 선거운동중에 「1:1」태환제를 실현할 것이라고 한 것을 기억하는지?

- 동독인 45% : 일반적으로 「1 : 1」로 태환한다고 했다.
 - 동독인 23% : 단지 저소득저축자에게만 「1 : 1」로 태환한다고 했다.
 - 동독인 16% : 모른다.
- ② 선거전에서 '쿨'수상의 약속이 「1 : 1」이라고 기억하면서 선거 이후는 다른 제안을 듣는 바 이것은 「사기」인지?
- 동독인 55% : 사기다.
 - 동독인 13% : 사기가 아니다.
 - 동독인 17% : 모른다.

또한 「통합」에 관한 「초안」이 나타나 일반여론 속에서 토론이 시작되자 특히 동독인은 앞으로 일어날 대실업에 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동베를린 우수마(usuma)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실업증가를 믿는 사람이 65%, 약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9%이므로 앞으로 「실업증대」에 대해서 우려하는 자가 94%로 거의 대부분의 동독인이라고 볼 수 있다.

5. 제1차 통합조약과 정당간의 논쟁

(1) 경제 · 통화 · 사회통합

5월 18일 양독재무상(서독 : 바이겔씨, 동독 : 림베르크 교수)간에 일단 상기통합에 관한 조약이 서명되어 양국의 국회의결기관으로 넘어갔다. 우선 '폴'수상이 서독에서 야당의 거의 참가없이, 더욱이나 국민의 여론을 전혀 듣지않고 급행열차식으로 강제적으로 끌고 나가는 「통일정책」에 관해서 동·서독 반대여론은 비등하기 시작했다. 앞장에서도 보았으나 동독의 지방선거에서는 낙승할 것이라고 생각한 기민당은 대단한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됐다. 더욱이나 서독의 지방주 선거에서도 그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누르드라인, 베스트팔렌주에서 라우씨는 다시 사민당 절대다수(50.0%)를 확보하는데 성공했고, 니이다삭센주에서는 슈뢰다(사민당)씨는 기민당의 장기 집권을 붕괴하여 주정부를 맡게됨으로써 서독의 상원(지방정부 대표기관)의 다수(23 : 18표)는 사민당쪽으로 넘어갔다. 따라서 모든 입법과정에 있어 상원의 다수동의가 없으면 '폴'수상은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독에서는사민당이 대연정에 참가하여 「제1차 통합조약」조인에 필요한 국회의 3분의 2를 확보시키지만 서독국회(하원)은 여당이 3분의 2를 갖고 있지 않고 더욱이나 상원에서는 사민당이 다수를 차

지하고 있는 이상 「사민당의 통합조약」에 대한 태도는 아주 흥미스러운 논쟁거리였다.

‘쿨’수상의 라이벌인 라폰텐씨는 「통합조약」이 서독국회에서 통과되면 안된다고 주장했으며, 사민당당수 포겔씨는 역사적인 순간에 역사적 조약에 사민당은 빠질 수 없다고 해서 「라폰텐파」와 「포겔파」로 갈라졌다.

‘쿨’수상의 전략은 사민당은 반드시 「통합조약」에 찬성할 것이라고 전제하여 만약 통합조약조인이 늦어져서 통일이 늦어질때는 소련의 고르바초프체제가 아직도 계속될지 의문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 호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내세웠다.

그러나 라폰텐씨는 만약 사민당이 자기노선을 추종하지 않을 때는 ‘쿨’수상의 라이벌로서 입후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 종래부터 있던 당수 포겔씨와 부당수 라폰텐씨간의 갈등이 표면화됐다. 포겔씨는 청렴한 법률가로서 당을 정확하게, 고지식하게 이끌어 가는 장년파의 기수인데 반하여 라폰텐씨는 40대중반의 젊은 세대의 사민당의 기수 「브란트의 손자중의 일인」으로 Power Politics에 능숙한 정치가이며, 「듣기 싫은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터부시되어 있는 사회관습, 법규를 비판적으로 이슈화시켜 많은 갈채를 받고 있으며, 동독에서 많은 이주민이 넘어올때 「통일의 사회적 차원」이라고 해서 통일은 반드시 정치적,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여 많은 인기를 얻고 그가 다스리고 있는 샤프주 지방선거에서 왕년의 절대다수를 훨씬 능가하는 낙승을 한 정치가로서 Populism이 대단하다고 보고 있다. 물론 라폰텐이 입후보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포겔당수와의 갈등 뿐만 아니라 노르드라인, 베스트파렌주 선거때 정신병 여환자의 사살미수를 당하여 죽느냐 사느냐

하는 지경에 빠져 (4월 26일) 6주간을 고생하여 회복했던 만큼 심리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처지였다.

포겔씨(사민당 원내당수)는 국회내에서 통합조약을 거부하고 상원에서 사민당이 동의하는 라폰텐씨 전략을 따를 수 없다고 자기자세를 완고히 했다. 포겔씨는 나아가서 라폰텐의 12월 선거전략은 동독의 경제혼란의 뒷받침으로 쓸 수 없다고 생각했다. 고로 포겔씨는 오히려 준여당적 입장을 취하려 했다.

사민당 당수 포겔씨는 관용을 보여 라폰텐씨도 다음과 같은 사민당 전략을 구상했다: 첫째, 서독마크를 동독에 도입하면서 기업인을 위한 아무런 보호, 적응조치를 미리 하지 않는다. 둘째, 사회경제를 시장경제체제에로 변혁시키는데 동독기업이 서독기업과 경쟁할 때 경쟁력을 갖게 하는 아무런 준비도 않는다. 따라서 상원에서 사민당다수가 조약에 추가수정을 가미하는 것이다. 가미되는 조항은 조세감소를 포기, 지방정부의 제1차 전독일선거일 결정에 참여 등등이었다. 결국 포겔노선이 득세하게 되는데 표면적으로는 독일통일의 역사적 현실에 사민당은 다른 전략을 택할지라도 통일과정을 정체시킬 수 없다는 논리였다. 연방국회에서 사민당에게 보낸 제안에서 라폰텐은 '통합조약을 거부하라'를 철수시켰고 그리고 상원에서조차 다만 샤프트주와 니이다작센주만이 거부하여 통합조약은 6월 23일 통과되었고, 사민당주의 조약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추가결의로써 남게 됐다. 결의내용인 즉 "연방정부는 통합조약준비과정에서 정치적 도전에 감당할 수 없었다. 그리고 통일과정을 혼자서 모든 민주세력과 아무런 협의없이 추진 노력해왔다. 연방주는 아주 불충분하게 통일과정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연방원칙을 위배했다". 라폰텐은 짧은 기간에 다시금 포겔파로부터 패배를

당한다. 문제는 9월말 동서독사민당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수가 되느냐 하는 것이다. 라폰텐과 그의 추종자(전당내의 좌파)들은 라폰텐이 전독일사민당 당수가 됨으로써 세대교체를 실현할 수 있고 12월 2일 총선에 있어서도 '콜'기민당당수 대 '라폰텐'사민당당수의 경쟁으로 대의명분이 설 수 있다는 것이었으나, 포겔파들은 우선 포겔씨가 통합된 사민당의 당수로서 활약한다고 결의함으로써 라폰텐파는 또 패배를 당하게 됐다. 그러나 라폰텐씨는 그 스스로의 전략으로 12월 2일 총선에서 '40% + α'를 득표할 때는 전독일 사민당 당수직에 후보할 것이라고 결심하고 또 다른 결심은 '제2통합조약' 작성과정에는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2) 경제 · 통화 · 사회통합의 내용

이 세가지 통합을 내용으로 하여 동서독간에 7월 1일 발표된 조약을 '제1국가조약'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협상중인 '제2조약'은 8월말까지 내용상 전부 합의를 보아 9월중으로 양국간에 조인될 예정이다. 그럼 그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살펴보기로 한다.

① 경제통합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서독 연방공화국의 경제체제인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를 도입하는 전제조건을 형성하는 것인데,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유재산제도 허락

둘째, 자유시장경제체적 가격형성

셋째, 경쟁원칙 도입

네째, 상업자유제 도입

다섯째, 상품, 자본 및 노동의 자유이동

여섯째, 시장경제체제에 합당하는 조세, 재정, 예산제도 도입

일곱째, 동독 농업체제를 EC농업체제속으로 이끌어 넣는다.

② 통화통합

위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통화통합'을 두고 가장 논의가 많았다. 결국 '콜'수상의 '정치우선주의'는 다음과 같은 통화통합의 내용을 가져왔다.

첫째, 서독 도이치 마르크(DM)를 유일한 통화로서 도입한다.

둘째, (서)독일 연방은행(Deutsche Bundesbank)이 유일한 중앙은행이다.

셋째, 동독화폐와 서독화폐와의 태환율은 다음과 같다.

- 임금과 월급, 연금, 월세, 소작금, 장학금에 관해서는 1 : 1
- (자연인의) 저축금은 확정된 최고수준까지 1 : 1
- 모든 부채와 채권에 관해서는 2 : 1로 한다.

③ 사회통합

동독은 서독연방공화국의 사회제도에 상당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한다.

첫째, 연금보험

둘째, 건강보험

셋째, 실업보험

네째, 사고보험

다섯째, 저소득자 부조제(Sozialhilfe)

동독은 서독을 모방하여 다음과 같은 사회보장 및 사회안정기금

보조제를 도입한다,

첫째, 노사단체 교섭자유성

둘째, 단체기관간의 단합/연립의 자유

셋째, 파업권리

넷째, 공동결정권

다섯째, 기업내 민주주의

여섯째, 해고방지법

④ 사회통합실현과 동독예산불균형 조정을 위하여 '통독특별기금(Sonderfonds Deutsche Einheit)'에서 출발자금으로써 115 billion DM 을 지원한다.

⑤ 토지구매자유(추가조항)

사실상 조약내용이 완전히 결정된 이후 추가조항(IX)으로 채택된 것인데, 골자는 서독인 및 외국인의 고용창조 효과를 가지는 투자를 위해서는 토지 및 생산수단 소유를 허락한다는 것이다.

(3) 경제·통화·사회통합 이후의 '통계'

통일독일 경제통계는 1991년부터 있을 것이다. 1990년 3월 서독연방통계국 베를린지부 '독일통계연구단'이 작업에 착수한 이래, 제1국가조약(경제·통화·사회통합)에 관한 기본자료가 우선적으로 다뤄졌으나 결국 여기서 밝혀진 수치도 예측과 추정치였다. 처음으로 8월중 '독일통계'가 출발될 것이다. 정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경제, 통화통합 발표전야의 '동서독 경제비교'는 다음과 같다.

【보 급】

【인구와 노동】

	서 독	동 독
자 동 차 (100가구당)	67.8 (1988)	54.3 (1989)
전 화 (100가구당)	93.2 (1988)	17.2 (1988)
냉 장 고 (100가구당)	70.4 (1988)	47.5 (1988)
칼 라 T V (100가구당)	87.4 (1988)	57.2 (1988)
주 택 (1,000명당)	430 (1987)	420 (1988)
1인당 주거면적 (㎡)	37 (1987)	27 (1988)
화 장 실 (100명당)	98 (1987)	72 (1988)
호 텔 침 대 수	564,814 (1989)	15,466 (1989)
의사1인당 주민수	356 (1987)	400 (1988)
어린이 100명당 영아원(0~3세)	2 (1986)	80 (1988)
어린이 100명당 유치원수(3~6세)	81 (1986)	94 (1988)
어린이 100명당 유치원수(6~10세)	4 (1986)	82 (1988)
1만명당 학생수	237 (1988)	79.4 (1988)

	서 독	동 독
인구의 남성비 (%)	48.0 (1987)	47.8 (1988)
1,000명당 출생	11.0 (1989)	12.0 (1989)
1,000명당 유아사망	7.6 (1988)	8.1 (1988)
1만명당 이 혼	20.9 (1988)	29.6 (1988)
인구비 외국인 비율 (%)	7.3 (1988)	0.9 (1989)
평균가족수	2.24 (1989)	2.5 (1981)
연금생활자 (전체인구당)	18.5 (1988)	16.0 (1988)
전체경제활동인수 (천명)	27,729 (1989)	8,885.8 (1989)
직업인구비 (%)	44.5 (1988)	53.5 (1989)
경제활동인구 여성비 (%)	38.8 (1988)	48.6 (1989)
평균주간노동시간	38.5 (1989)	42.9 (1989)
연중휴가일수	30.7 (1990)	21.9 (1990)
산업재해수 (노동자천명당)	54.1 (1988)	22.6 (1988)
인구 10만명당 국내의 연간 특허신고	52 (1988)	61 (1989)

[면 적 과 인 구]

신 독 일			
	서 독	동 독	전 독 일
면적 (km ²)	248,621	108,333	356,954
인구 (백만)	62.1(1989)	16.5(1989)	78.6
전독일인구의 분포 (%)	79	21	100
인구 (km ² 당)	251.4	150.5	220.8

(4) 경제 · 통화 · 사회통합 이후의 평가

7월 1일 아침 0시 동백림 중심부 알렉산더 광장의 독일은행 앞에는 장사진이 이뤄졌다. 많은 동독인은 수 시간을 기다린후 마침내 밤 12시가 되자 도이취 마르크(DM)를 손아귀에 쥐게 됐다. 마침내 옛날 독일 국가 'Deutschland uber alls'를 바꿔 'DM uber alles'(도이취 마르크는 어느 화폐보다도!)라는 구호가 터져나오고 지금까지 통용되는, 소위 말하던 '알루칩(Alu Chip: 동독돈의 별명=알루미늄으로 만든 칩이라는 뜻)'은 사라지고 말았다. 7월 1일을 기념하는 사람들은 샴페인을 마시는가 하면 동시에 이 '샴페인'이 '좋은 샴페인'인지 많은 고심을 하게 되었다.

그럼 경제, 통화, 사회통합의 의의는 무엇이며 앞으로 구주통합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첫째, 이번 경제, 통화통합은 독일 민족이 통일로 가는데 현실적

인 성공의 제1단계로써 앞으로 남아있는 정치적 단계의 절대적인 첫 발디딤이다. 사실상 금년 말까지만 해도 '콜'수상의 '10개 조항' 등이 있었으나 경제, 통화, 사회통합의 아무런 구체안이 없었고 크리스마스 전후(년말) 양독정부 재무부의 일개 국장의 아이디어가 구체화된 것이며 사실상 야당인 SPD는 금년 3월달에 사민당의 결의 「독일 통일에도 가는길」 속에 7월 1일의 구상이 처음으로 내제되어 있었다.

수많은 경제학자, 은행가, 경제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1 : 1(임금, 월급, 연금 등) 비례를 관철한 것은, '콜'수상의 정치우선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취약한 동독경제를 앞으로 여하히 개발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입각하여 '콜수상'은 주어진 호조건을 활용하는 정치우선원칙을 선택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제2차적으로 했다.

세째, 경제, 통화통합이 됨으로 사실상 동독의 경제주권은 서독으로 이양됐으며 서독의 중앙은행이 동독통화에 대한 모든 관할권을 갖게 됐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동독은 임금, 월급, 집세, 연금 등 그 대부분에 일률적으로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됐다. 이는 종래의 사회경제체제의 완패를 나타내는 것이다. 나아가서 '동독시장경제체제' 실험이 성공할 경우, 동독의 'Perestrojka'에 대해서는 너무나 고무적일 것이라고 본다.

네째, 이번 경제, 통화, 사회통합은 분단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통일정책에 많은 시사를 준다고 볼 수 있는 바, 자본주의 경제의 우위, 동일민족의 통일 필요성 등은 물론 말할 것도 없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독의 경제력이 막대했다는 것이다. 우선 서독경제가 소련·동독경제를 지원할 수 있고 특히 동독경제를 흡수, 개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이다. 독일처럼 인접국가(폴란드, 체코, 프랑스 등등)로부터 제2차 세계대전의 죄과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통화통합을 지원 혹은 묵인받은 사실은 서독의 경제력이 그만큼 막강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우를 본다면 남북통일의 첩경은 우리 남한이 우선 경제대국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느낀다.

그럼 7월 2일 분위기는 어떠하며 앞으로 어떠한 전망을 예측할 수 있는가? 아주 흥미스러운 사실은 250억 DM을 지불준비했으나 거의 반 정도 지불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앞으로 동독경제가 어떻게 발전할지? 어느정도 실업증가가 생겨날지? 예측못하는 형편에서 오히려 절약, 검소한 태도, 내일을 위한 절약이라는 아주 극단으로 조심하는 사정이다.

물론 7월 1일까지만 히도 텅텅 비어있던 백화점과 상점에 지금은 서독상품, 과일, 식료품이 거의 독점하고 종래의 동독상품(농산품)은 한쪽 구석으로 초라하게 몰려가고 말았다. 물론 동독인의 저축율은 지방에 따라 다르다. 동부 썩센은 1인당 평균저축금이 현재 12,000 DM이며, 부란덴 볼크 지방은 1,000DM정도라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 시장경제의 현실적인 효과를 측정 못하는 입장에서 아주 절약, 검소한 시민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가장 동독인에게 인기를 주고 있는 것은 서독 자동차(벤쯔, BMW, 골프)이다. 서독의 자동차 판매회사는 50,000마르크까지 Credit를 주면서 5년내 상환형식으로 동독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동독인의 검소성이 나타나 앞으로 동독 상품시장에서 동독인의 소비성향을 여하히 추정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 디백화점(칼스탁트)은 물론이나 소매상에서도 예를들면 열대지방 과실수요(오렌지, 바나나 등)가 어떻게 변화할지 추정하기 힘들다고 한다. 많은 동독인은 여행(서독)에 있어서는 검소하지 않고 종래 강제적으

로 갔던 동구(체코, 루마니아, 헝가리 등등)는 선호하지 않은 현상이 일어났고, 체코인들은 옛날에 동독에 관광 여행을 여러계약을 통화통합 이후 너무나 비싸게 되어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무엇보다도 서독인은 경제통화 통합을 '헤엄칠 수 없는 아기를 물속에 던져 버렸다'고 비유하고 있다. 동독에 있는 자동차공장(주비카우공장)은 서독의 폴크스바겐 회사에 의하여(50억 마르크 투자) 완전히 근대화, 자동화 되어 매일 500만대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미 조업이 단축됐고 이 공장에 종사하는 750명의 노동자는 7월중에 귀향하게 됐다.

부나 화학공장은 루-르 지방의 페바회사에 의하여 근대화, 합리화되어 18,000종업원 중 조만간 1,000명이 해고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실업자가 각처에서 많이 생겨나고 서독기업의 제조업투자 부진으로 서독정부는 대단히 근심하며 서독경제상은 '디 짜이트' 주간지에 대서특필로 '동독에 투자하자'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큰 성과를 얻지 못하므로 경제, 통화통합 속도가 너무 빨랐다고 비평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생기고 있다.

또 근심스러운 것은 '인플레'이다. 이것은 특히 통일비용에서 올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정확한 통일비용 추정은 불가능하며 매일 다른 숫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과연 서독은 '경제, 통화, 사회통합'을 위하여 지원할 예정인가?

서독정부의 계산은 농업지원 62 Billion DM, 수출지원 5 Billion DM, Special Fund 115 Billion DM등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상기의 액수는 여러해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조세 면에서 특혜등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것은 아니다. 서독연방정부의 동독지원 추가예산은 (1960년) 420억 DM으로 동독 일인당 2,600

DM이며, 자본시장에서의 차관은 430억DM으로 보고 있다. 물론 '장벽파괴비용', '경기회복 지원비용'등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서독중앙은행 총재는 비관론적으로 과연 동독경제가 조만간에 회복하지 않을 때는 더욱 서독측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더욱이 서독은 동독의 소련에 대한 '수출계약 체결이행'을 지원해야 하며 또한 동독기업 부채(118 billion DM)등도 아직 그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여하간 서독정부의 공식적인 '통일을 위한 비용'의 계산에서는 금년도 하반기 430억 DM, 내년(1991)에는 약 700억 DM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이 숫자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

여하간 '7월 1일'을 기념하는 독일 수상들의 기념사의 핵심이 흥미스럽다. '콜'수상은 서독인에게 '어느 국민도 어떠한 물질적인 것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한 반면, '더 메지어'수상은 동독인에게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용기를 가집시다'라고 외쳤다.

6. 경제 · 통화 · 사회통합 이후의 상황

(1) 동독의 상황

가. 동독인의 소비성향

(가) 동 · 서독인의 소비성향 비교

B. A. T 자유시간연구소 연구에 의하면 동서독 간에 근본적으로 상이한 소비자 태도를 찾아볼 수 있다. 이와같이 상이한 소비자 태도의 근본이유는 국민의식 속에 심어진 '소비자유'와 '경제행위자유'의 인식차라고 볼 수 있다.

【동서독인의 소비생활 비교】

	서 독 인	동 독 인
필수품 소비	42%	53%
저축의욕	12%	6%
생활운택을 위하여	24%	25%
오락행위	10%	6%
가끔 새로운 것을 구입	7%	5%
고급 사치품	4%	3%
註: 동독인 1,000명(14세 이상), 서독인 2,000명(14세 이상)을 인터뷰한 결과이다.		

이 표에서 보면 알다시피 동독인은 생활필수품에 서독인보다 10% 이상 증점을 두고 있다. 또 흥미스러운 사실은 동독인의 저축율은 서독인보다 훨씬 낮다. 이것은 역시 서독인의 자본주의 경제적 생활을 잘 반영하고 있다. 나아가서 서독인은 '오락행위'에 증점을 두는가 하면 동독인은 '고가사치품'에 열의를 보여주고 있다.

(나) '저축하는 동독인'?

통화통합이 발효한 이후 예상외로 동독인들은 태환하지 않는 경향이다. 절약하는 습성에서 온 것인지? 혹은 미래를 걱정하여 낭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지?

베를린 일간지 '타게스 슈피겔'이 여론조사를 해 보았다. 더욱 절약하고 검소한 부인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방세(월세)가 심하게 올라갈지 모르므로 저축해야 한다', 또는 '앞으로 실업자가 될지도 모르니까!', 등의 이유로 일부 금액만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새 자동차와 칼라 텔레비 구입에는 절약성보다 사치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일부 동독인은 그간(40여년간) 누리지 못한 (고급)소비생활, 자유스러운 여행을 위한 지출을 위해서는 연불조건이라도 수락하는 형편이다.

일반적으로 '상품가격을 정확히 비교하자', '실업자가 될 것을 예상하여 저축하자'라는 검소동기를 이해하는 반면, 많은 동독인은 너무나 갑자기 부닥치는 통합에 관한 불평불만이 고조되어 오히려 통합에 관한 회의심을 가지는 자가 많아졌으며, 아무리 사회통합을 한다 해도 결국 실업자가 되면 월 495DM을 얻게 되는데 이것으로 전혀 생활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와같은 '검소생활'에서 화폐량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즉 인플레

를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동독인 스스로가 보여 준다고 외국인들은 '겔만민족의 특성'이라고 보고 있으나, 이것은 반드시 민족성에서 오는 것보다 경제적 현실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자동차 선호

동독과 서독을 연결하는 트란싯트 아우토반에서 최근에 100km 이상 속도를 내는 동독차가 갑자기 많아졌다. 서독·서구제 자동차를 사서 신나게 달리는 동독인을 자주 보게 된다. 흥미스러운 것은 동독의 도로사정은 너무나 나쁘다. 수십년 전에 포장한 도로를 전혀 보수하지 않아 많은 구멍이 나 있어 사실상 50~60km 속도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교통사고가 대단히 많아졌다. 7월말 현재 동독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는 거의 1,400명에 달하여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던 숫자에 달하고 있다.

여론조사(응용 경제연구소)에 의하면 동독의 가계 10분의 1(63만)에서는 금년에 자동차를 사겠다고 했으며 그중 40%는 완전히 새자동차를 구입하겠다고 했다. 자동차 선호도를 본다면 25%가 폴크스바겐, 오펠이 22%, 11%는 동독재 트란반드, 7%는 마르트블크를 각각 선호하고 있다. 59%는 현금으로 단지 17%만이 월부로 지불할 용의를 갖고 있다. 7월 1일까지 동독인에게 판매된 자동차 수는 15만대인데 과거 20년간 동독의 연간 판매대수와 꼭 같다.

독일 모 주간신문은 대서특필하기를 '오늘은 콜프(자동차 이름), 내일은 가구(한 벽쪽을 전부 가구장으로 매꾸는 형식), 크리스마스 때는 비디오(Heute einen Golf, morgen die Schrankwand, zu Weihnachten ein Videogerat)'로 동독인의 내구재에 대한 소비성향을 썼다. 가장 잘 판매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서독의 중고차다.

현재 독일의 중고차시장은 완전히 텅텅 비어 있는 형편이다. 화란, 벨지움, 프랑스에서 중고차를 동독으로 운반하는 것을 자주보게 된다.

문제는 다음과 같다. 자동차 구입시에 선금을 대체로 5천마르크를 지불하고 월 350마르크를 갚아야 한다. 그러나 동독인 평균 월급이 얼마인지? 대체로 1,200마르크로 보면 월세, 생활비, 의료비 등에 지불하고 나면 350마르크는 너무나 높은 부담이지만, 2~3년 이후에는 지불이 가능하다고 자동차 소유자는 말할 것이다. 사실상 동독인은 동독차는 선호하지 않으면서 이 차들은 박물관 혹은 가정부인들에게 선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여하간 동독 교통국에서는 금년에 동독에서 중고차 50만대, 신차 527만대가 등록될 것이며 이 경향은 내년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동독 자동차 번호는 아직 동독표시로 되어 있으나 얼마있지 않아 서독번호로 통일되면 자동차 운전자를 동독·서독 출신으로 구분하기 힘들 것이다. 일반적으로 희롱적으로 이야기하기를 교통위반, 특히 속도위반을 하는 자는 대개 동독인일 것이라고 하고 있다.

(라) 동독상품을 싫어하는 동독인

자기나라 상품을 싫어하는 것은 가끔 후진국에서 볼 수 있다. 동독에서 품질나쁜 상품만 경험했던 동독인은 무조건 자기 나라 상품을 싫어하며 심지어 야채, 과일까지도 국산을 사지 않는 경향이 일어났다.

특히 동독정부에서는 동독 상품을 애호하자는 'Buy DDR'라는 운동까지 전개했다. 예를들면 동독산 야채, 과일을 선호하는 동독인이 적기 때문에 초과공급으로 그냥 쓰레기 같이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

있다. 서베를린의 유명한 백화점 '카. 대. 배'에는 동독의 야채, 과일, 달걀, 생선, 소, 돼지고기 등을 가져와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온실에서 재배된 야채, 과일이 아니라고 해서 대단히 큰 수요가 있다. 서베를린 시칭앞에는 '동독산 야채, 과일 등 농산물 시장'을 열게 해서 일부러 서베를린 시민들이 사게끔 하고 있다.

나. 통합 10일 이후

7월 1일 '경제, 통화, 사회통합'이 시행된 후 벌써 10일이 지났다. 서독 연방 중앙은행을 위시한 모든 은행들은 통화통합의 태환문제 등에 관한 무사고 업무집행에 관해서 자화자찬 하고 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 생기는 모든 경제, 사회, 정치문제는 대단히 착잡하다. 아무리 '게르만 민족성의 장점'을 열거해도 사회경제체제를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이 점차 입증되고 있다. 조국에는 기업인의 자발심을 절대 대체할 수 없다. 많은 실업자가 생기고, 노동자가 농성을 할 것이고, 많은 기업체가 파산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한 바, 그대로 속속 그 현상은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독기업체의 투자의욕이 부족하다. 몇개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고용효과를 창출하는 중소기업들이 제조업 분야에 전혀 투자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서독 연방 경제상은 서독기업인들은 단기이익만을 추구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기업인들은 '숙련노동자의 결핍', '비탄력적 노동시간', '개선의욕의 결핍', '노후화한 생산시설', '대학 시설' 등이 투자의욕을 저하시킨다고 말한다.

재정적 지원이 중장기 투자유치를 촉진할지가 의문이며 서독기업은 오히려 통합이후 임금수준이 높아진 동독보다도 남부의 포르투갈, 스페인 등에 투자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둘째,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변혁할 때 절대 점차적 단계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 경제변혁은 정말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40년 이상 고질화되고 관료화된 경제체제는 나름대로 거대한 권력 구조를 형성하여 정보 및 경영을 독점하고 있다. 현재 동독에서 국영기업을 민영화 하고 있는데 대단한 애로를 보여주고 있으며 바로 이점이 동독경제재건의 가장 큰 장벽으로 인정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간단한 공식은 '사유재산+자유경쟁'이라는 것만으로 경제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한가지 근본요소가 바로 '급한 속도'라는 것은 서구·서독기업의 저조한 투자의욕에서 능히 알 수 있다.

세째, 통화·경제통합이 실시된 후 동독인들은 '동독 Identity'와 동독상품을 싫어하고, 서구·서독의 과일, 상품만을 선호하여 가게의 진열장에는 거의 동독산 과일, 상품을 찾아 볼 수 없는 현상이 생겨 라디오를 통해서 "동독상품을 구매하지"는 구호를 부르짖고 있다. 공산주의 동독을 철저히 싫어하는 동독인은 오히려 더욱 '민족주의적', '국수주의적'이며, 7월 9일밤 서독이 세계축구선수권을 획득했을 때 동베를린에서는 극우국수주의 구호가 나타났고, 거리에 지나가는 외국인을 성가시게 했다.

네째, 동독인이 서독상품을 선호하는 다른 이유도 있다. 경제통합 이후 서독·서구상품이 동독에서 판매되기 시작하자 (큰)도시 지방에서는 서독과 큰 가격차이를 볼 수 없었으나, 시골·농촌지방에서는 같은 상품이라도 2.3배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그리고 상점

개점시간도 엄수하지 않았다. 무법천지였다. 이것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게끔 한 것은 바로 종전의 국영판매망의 공산당 지방관리의 권력구조가 아직도 지방에서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으며, 서독의 판매대리점 등의 동독거래상은 결국 종전의 국영기업직원 또한 공산당원이기 때문이다.

동독수상은 7월 6일 동독국민에게 '절대 가격을 높여서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호소하기까지 했다. 서베를린과 동서독 국경지방의 상점, 슈퍼는 동독인이 대량으로 쇼핑하러 왔으며 '동독상품시장'을 보이콧하는 현상을 보여 주었다.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제현상은 독일국민과 특히 정치가, 정당, 외국인에 의하여 대단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통합조약을 '제1조약'이라고 하며 8월말까지 '제2조약'의 내용이 확정되리라고 보고 있다. '제2조약'은 '7월 1일의 제1조약'과는 달리 많은 진통을 겪을 것 같다. 우선 '콜'수상의 '정치선호방식'에 의해서 밀어부치는 식은 통용되지 않으며 사민당은 스스로 제안을 작성할 것이라고 보며 '제2조약'은 '동서독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통일'되는 원단으로 가는 구체적 단계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월초에 있을 '전독선거'를 위한 현실적인 토대이다.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서 서유럽과 일부 소련에서 '동독을 삼켜 먹었다'는 설이 자꾸만 대두되고 있다. 사실상 경제·통화·사회통합은 동독이 경제주권을 상실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통일의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 동서독의 통일방안을 모방해 간다면 우리는 북한 공산주의 경제체제의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서독처럼 동독경제연구가 잘 되어 있었던 곳도 없었는데 막상 동독경제의 '시장경제화의 과제'에 입각해서 지금까지 못한 것이 너

무나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민영화문제'가 그렇게도 어렵다는 것, 그리고 '국영기업체 경영관리'도 철저히 분석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결국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조국에만 가지고서는 절대(중소)기업인은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 통합 한달 이후

'경제·통화·사회통합조약'이 발효한지 한달이 지났다. 동독에서 처음있는 하기세일(Sommerschlussverkauf)이 월요일(30일)부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밀려와 '쇼핑광증'에 얽매인 사람들처럼 허덕이며 많은 보따리를 가지고 헤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서베를린 백화점 '카대배'에는 동독의 먼 시골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눈에 띄었다.

이와같이 피상적인 번성과 소비경제의 시나리오 이면에는 동독경제의 일대 위기가 잠재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신자본주의자'는 이 구동성으로 "투자보다는 임금을 지불해야 하고, 임금지불을 위해서는 은행에서 차관을 받아야 한다"고 불평이 고조되고 있으며 왕년의 유명한 회사들은 예외없이 '단시간 노동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조만간 대량해고를 모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본다.

통합 이후 동독의 서서비스(상업)계통은 완전히 서독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우리가 투자한 돈은 결국 우리가 뽑아간다"고 자동차 판매대리점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예상과는 정반대로 동독에서 고용감소를 예측하는 사람이 4분의 3을 훨씬 넘고 있다.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불과 6%뿐이다.

① 동독에서 투자장애는 무엇인가?

순 위	내 용
1 위	자 본 부 족
2 위	경 제 법 규
3 위	관 료 제
4 위	임 금 수 준
5 위	노 동 의 욕 저 조

자본부족이 가장 큰 투자장애라고 하면 약간 역설적이다. 사실상 서독에서 중소기업투자를 위한 제기금(통독기금 등)을 설치하고 있으나, 동독인은 감히 이것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있다. 이 자지불, 수속절차 등이 장애가 되고 있으나 무엇보다 '신자본주의자'들은 회사의 경영지식도 없고, 모험심이 결핍되어 있다. 그리고 경제법규의 초점은 민영화 속도가 너무 늦다는 것이다. '아직도 옛날 공산당 당원들이 Power Elite로서 각각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공산당의 뿌리'를 뽑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최근 노사간의 임금협상에 의한 임금수준 25% 인상은 투자의욕을 갖고 있던 서독기업들을 주저하게 한다. '노동의욕'에 관해서도 일반적으로 비관시키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숙련노동자의 저질'이다.

② 동독국민들은 경제발전을 어떻게 보는가?

항 목	비 율
낙 관 적	2%
비 관 적	52%
기 다 려 본 다	44%
모 른 다	2%

동독경제전망을 낙관시하는 자는 아주 적은 2% 정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의 경제사정을 좋게 보지 않는다.

동독 통계국에서 최근 발표한 경제수치에 의하면 1989년 전반기(6월말)에 비해서 1990년에는 생산이 7.3%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에서만 7% 감소했고 작년 6월과 금년 6월을 비교하면 15.1% 하락하고 있다. 농업에서는 과잉생산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왕년의 생산조직과 판매조직이 원활히 체계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시장경제적 메카니즘에 의하여 수요·공급 균형으로 옮겨지고 있기 때문에 육류, 우유, 야채, 과일생산은 과잉을 이루는가 하면 동독인이 '동독생산물'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과잉생산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공업에서도 69업종중에서 단지 13종만 작년 수준을 유지하고 24업종에서는 10%이상 생산감소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과자, 카카오, 커피, 차 생산에는 40%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은 경제저조 현상은 취업, 고용현상에 직접 나타나고 있다. 현재 실업자수를 약 25만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비해서 취업 가능한 자리는 불과 3만 정도

이며, 동독 노동상은 앞으로 공업부문에서 약 1백만인이 해고당할 것이며 농업에서 25만명 등으로 150만 실업자를 예상하고 있다고 고백한데 반하여 서독경제상은 앞으로 투자증가에 의하여 그렇게 심한 고용상실은 없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통합 1개월 이후 동독경제의 성적평가는 좋다고 볼 수 없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투자증가이다. 투자를 시행하고 기업체를 경영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신자본주의자'는 아직도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의 의견이다.

(2) 서독인의 투자

가. 비판론

서독의 경제지 '한들스 블랏트'등 여러기관에서 동독에 투자촉진을 위해서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서독 정부경제상은 거의 매일 동독 도시를 순회하면서 현지인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주간지 '디 자이트'에 대문짝만한 한 페이지를 할애해서 동독에 투자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동독에의 투자 의욕이 대단히 저조한 것을 고백하고 있다. Forsa(서독) Gera(동독) 연구소는 공동으로 202개의 동독기업체 중역들의 '동독 경제사정에 관한 앙케이트'조사를 했는 바 그 결과는 한마디로 '대단히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금년 서독이 동독에 지원하는 총액을 최저 70 billion DM으로 예측하여 동독인 일인당 4,500DM을 받게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독인 기업체 중역들은 낙관시 하지 않는다.

① 금후 12개월내 투자에 관해서

	4 월	5 월	6 월
증가한다	38%	23%	30%
증감없다	31%	39%	13%
모른다	31%	38%	57%

② 금후 2년간 종업원 수

증가한다	3%	5%	6%
증감없다	17%	21%	76%
감소한다	70%	71%	78%
모른다	70%	39%	0%

③ 투자 장애는 무엇인가?

제경제 범규	56%	42%	47%
관 료 제	50%	35%	32%
임금/월급수준	48%	35%	31%
종업원의 노동의욕	78%	14%	73%
자본결핍	35%	57%	63%

④ 국민들의 심정

낙관적	11%	5%	2%
기다려본다	56%	56%	44%
비관적	32%	38%	52%

● 투자의욕 :

금후 1년내 투자 증감에 대해서 아무런 예측을 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반을 훨씬 넘는다. (57%) 증가할 것이라고 4월에는 다소 예상했으나 그간의 투자부진은 비관론자를 더욱 강하게 했다.

● 고용증감 :

다시 상세히 기술하겠으나 고용감소를 예측하는 의견이 절대적이다. (78%) 그리고 사실상 많은 취업자가 이미 해고되어 30만 실업자수를 돌파했다. (7월 26일 현재)

● 투자장애 :

종래 생각하기를 근본적인 투자장애는 경제법규, 관료조직, 특히 임금, 월급수준이라고 보아왔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 의하면 '자본부족'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으며 나아가서는 근로자들의 '노동의욕'이 저조한 것을 들고 있다.

● 경제전망 :

동독 고급 경영자로서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는 단지 2%이며 98%는 관망하던지 비관적이다.

지금까지 제조업 투자는 거의 전무상태라고 한다. 이미 가계약으로 결정됐던 투자까지도 철수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회사 '벤쯔'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 회사는 최근 튜링겐쪽에 거의 확정적이던 프로젝트를 철회함으로써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이유인즉 숙련 노동자의 부족, 소유권문제 해결 미비, 사회 간접자본 미비 등이라고 한다.

최근 비밀리에 보관해 왔던 서독 경제인연합회의 보고서 서장에는 '동독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쓰여져 있고, 현재까지 미비한 투자 저조를 다음과 같은 이유에 두고 있다.

첫째, 소유권 문제 미해결상태, 둘째, 높은 임금수준 및 비싼 사회보장제도, 셋째, 현존하는 기업체 및 사회간접자본 미비, 넷째, 아직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경영인은 동독 공산당 당원이라고 지적하면서 서독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서독 정부는 동독 토지소유자의 로비(동독에 재산을 갖고 있는 서독인)의 압력에 의하여 동독 소유권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데 서서히 움직여 갔다.

둘째, 신탁회사는 통화통합 이후 무계획적으로 양호한 기업, 불황 속에 빠져 있는 기업의 차관을 공여했다.

셋째, 아직도 사회간접자본 개발에 관한 아무런 구체안이 없다.

그 이외 나머지는 투자 리스크에 관한 기업인의 과감한 용의이다.

나. 낙관론

동독 경영인과는 달리 서독기업인들은 낙관적이다. 최근 총독일상공회의소와 독일 경제연구소가 실시한 1114개 회사의 투자의욕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1990—1992년 사이에 독일 기업은 EC통합과 동구 동독 시장경제화에 받을 맞춰 56% 투자를 증가할 것으로 발표했다.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동독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44% 기업체는 동독이라고 일목요연하게 밝혔다. 그 다음이 헝가리(20%), 소련(15%), 폴란드(10%), 체코(9%)의 순이었다.

서독인의 동독 투자를 보면 지금까지 서서비스 계통에는 약간의 움직임은 볼 수 있으나 제조업 투자는 당분간 시간을 요할 것이다. 외국인들의 투자도 활발하지 않다. 프랑스, 미국, 이태리, 일본 기업체들에게 투자를 종용하고 있으나 아직 이렇다 할 프로젝트는 볼 수 없다.

최근 독일 신문에서 '한 인간은 얼마나 비싼가?'라는 문구를 읽을 수 있었다. '중국인'은 일인당 300 million DM이라고 가격을 부쳤다. 사실의 이면은 홍콩계 중국인 52명이 동독 국적을 신속히 획득할 수 있을 경우 15 billion DM을 동독에 투자할 것이라고 정식으로 제의했던 것이다.

1997년 홍콩이 중국에 편입되는데 홍콩 사업가들은 공포감을 느낀 것이다.

이 곳 신문들은 '동독은 인간교역에서 긴 전통을 갖고 있다'고 희롱한다. 이 말은 동서독간에 서독의 정치범을 동독에서 석방시켜 데리고 올 때('사서 데리고 올 때') 수천마르크씩 동독은 받았다. 그리고 최근에는 동독에서 취업중인 외국인 노동자 특히 베트남 노동자 5만명은 몇백 마르크씩 지불하여 귀국시킨다. 역시 인간과 인간사이에는 그 가치가 다르다는 한탄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논조이다.

같은 아세아인이지만 중국인과 베트남 사람 간에는 이와같은 가격 차이가 있으므로 '옛날 공산정부나 지금 민주 동독정부는 인간을 사고 파는데 도덕성과 인간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평하고 있다.

사실상 동독이 서독으로 흡수되는 것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상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서 동독은 서독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했으며 외국인 투자를 고려하면서 동독정부 내무부장관 디스텔(Diestel)씨는 이것이 큰 외국인 투자라고 과시하고 있다.

(3) 협력형태

동서독간에는 경제통합속의 협력 목적이 다음과 같이 상이하다.

① 서독인이 선호하는 협력형태

- 상품을 동독에서 판매 (53%)
- 판매 제휴 (38%)
- 협력참가 혹은 M&A (33%)
- 합작투자 (32%)
- 동독에서부터 조달 (21%)
- 동독에서 반제품 생산 (14%)

② 동독인이 선호하는 협력형태

- 판매 협력 (44%)
- 서독에서 수입 (33%)
- 서독, 서구 기업을 위한 생산 (24%)
- 합작투자 (16%)
- 협력참가 (14%)
- 서독으로 수출 (13%)
- 서구회사에 의한 M&A (5%)

흥미있는 현상은 생산제휴보다 판매협력이 동·서독 양쪽에서 선호되고 있으며 많이 논의되고 있던 합작투자는 그렇게 큰 선호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사실상 가장 큰 기대를 갖고 있는 투자는 서독중소기업의 투자이다. 중소기업협회(ASU)가 여론조사 한 결과를 보면 상기한 동·서독인의 협력 선호도를 다시금 확인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차원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① 지금까지 서독기업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접촉이 있었나?

(동독기업에게 설문)

- 한번도 없었다 (2%)
- 1 - 2차례 (26%)
- 3 - 5차례 (26%)
- 5 - 10차례 (27%)
- 10 - 15차례 (19%)
- 15 - 20차례 (12%)
- 20차례 이상 (9%)

② 협력형태의 대상은 무엇인가? (순위)

1. 판매협력, 서독기업체의 동독에서 대리점 혹은 지사
2. 서독에서 상품 공급
3. 생산협력(부품생산·서독기업을 위한 가공생산)
4. 합작투자
5. 서독인의 투자
6. 서독기업의 M&A

③ 서독 기업과의 지금까지 접촉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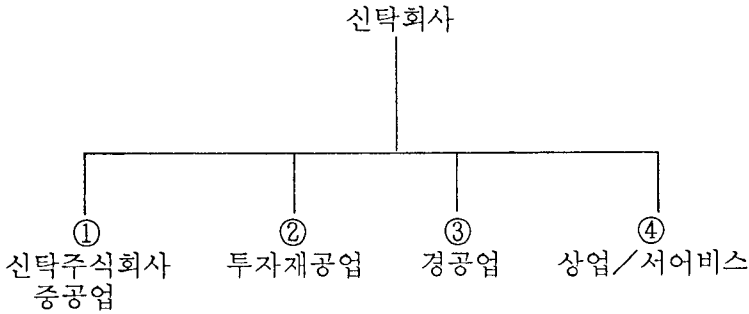
(순위)

1. 통화문제

2. 투자환경(여건)
3. 동독기관의 관료주의
4. 동독기업의 경영 및 기술사정
5. 서독 기업인의 큰 기대

(4) 신탁회사

종래의 8,900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위한 신탁회사가 신설됐다.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갖는다.



또한 농업분야를 위하여 공기업체를 특설할 것이다.

신탁회사의 목적은 상기한 주식회사에 이양된 또는 현존하는 국민 소유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이다.

신탁회사의 최고 집행기관은 2년 임기로 임명된다. 서독연방철도회사 책임자였던 골케(Gohlke) 씨가 사무국장이 되고 회씨(Hoesch)

회사 사장 Rohwedder씨가 최고 감독인으로 임명됐으며 14명의 경제전문가(동서독 각 7명)와 2명의 동독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최고의결기관으로 각각 신탁주식회사의 이사회를 구성한다. 흥미 있는 사실은 신문광고에 이 이사회에서 일할 경영자를 공개채용할 목적하에서 “Profis für die DDR”(동독에 기용될 경험있는 경영자)를 찾고 있는 것이다.

9월1일부터 상기주식회사 집행기관들은 업무를 개시했다. 집행기관을 구성하는 각 5인은 다음과 같은 직책을 수행한다.

- 제1인의 업무 : 비교적 안가 수준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기업체 재산 재평가
- 제2인의 업무 : 회복 가능한 기업체의 유지 및 지원을 위한 조치
- 제3인의 업무 : 회복 불가능한 기업체의 재산 및 도시, 건물을 평가, 활용방법을 구상, 시행
- 제4인의 업무 : Controlling 전문가이며 전자 계산에 능한 사람으로 재정업무를 담당함.
- 제5인의 업무 : 인사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물론 신탁회사 설립과 동시에 가장 바라는 것은 신속한 정보 교환과 민영화의 적극적 시행에 관한 보도이다. 둘째로는 민영화 되는 기업 자체가 스스로 ‘재기전략’을 작성, 시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체의 부채에 대한 보증을 설 수 있는 것이다. 7월 초에 관계자들이 모여 상의한 결과 5,000기업체가 신청한 부채 보증액 15.7 billion DM 대신 단지 5 billion DM 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따라서 확실성, 현실성이 있는, ‘재기방안

이 없는 기업체'는 결국 탈락되고 말 것이다.

아주 주목할 사실은 민영화 신청기업체 수는 8,933인데 민영화 된 기업체는 1,102이다.

줄 지방은 144기업체로 수위를 달리고 있고, 드레스덴 135, 할레 133 인바 그러나 신청수로 보면 켐니쯔 지역은 2,610이며 라이프찌히는 1,400, 드레스덴은 1,296이다. 역시 동독의 남부공업지역이 압도적이 었다.

신탁회사의 주도권은 사실상 서독에 있다. 물론 형식상으로 동독 중앙은행장, 재무상, 경제담당관과 8인의 동독국회의원들은 실무적 인 중요한 임무를 갖는다.

첫째, 8천 국영기업 중에서 어떠한 기업이 파산되어야 하며, 어떠한 기업은 부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지를 결정한다.

둘째, 누가 어떠한 가격수준에서 기업투자에 참가해야 하며 어떤 기업을 완전히 매입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세째, 어떻게 지금까지의 콤비나트를 쪼개야 할지?

네째, 국가소유의 재산(상품과 산림)을 어떠한 형식으로 민영화 해야 할지?

다섯째, 기업이익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리고 국가 예산적자 에 충당되어야 할지, 혹은 동독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할지?

여섯째, 국영기업에 종사하는 6백9십만 고용인구를 어떻게 그들의 장래취업을 해결해야 할지?

신탁회사의 업무수행이 시작되자마자 여러가지 비판이 생기기 시작했다.

첫째, 동독출신 신탁회사 멤버들은 시장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

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 인사들은 과거 국가안전기구(Stasi)와 밀접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무런 조희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 수상은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틀림없이 공산당 당원이었을 것이다'라고 했다.

둘째, 서독출신 신탁회사 멤버들은 서독 대기업의 중역들이기 때문에 신탁회사 내에서 그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로비'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내재되어 있다. 예를들면 로베다 자신의 회사 회수가 루르개스와 사업관계가 돈독하며 루르개스 회사와 또 밀접한 사업관계를 갖고 있는 페바회사 사장 필쯔(Pilz)씨는 또한 신탁회사의 멤버이다.

셋째, 신탁회사의 멤버중에 노조세력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서독 노조총연맹(DGB) 위원장 마이어(Meyer)씨, 금속노조위원장 슈타인쿨러(Steinkuhler)씨를 노조측에서는 추천하였으나 동독수상은 치보회사(커피계통)의 노동관리관이 들어있다 하여 거절하였으나 사실상 이 사람은 경영자측이 임명한 인물이다.

네째, 중소기업대표는 한 사람도 들어있지 않았다.

그러나 신탁회사가 설립되고 난 이후 5주만에 골케씨는 자진 퇴진하고 로베다씨가 총사무책임을 맡았다. 골케씨의 사임은 일부 측에서 그의 철도계통의 경험은 신탁회사와 완전히 상이하다고 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결국 로베다씨와 의견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는 설이 있는데 대개 두사람 간의 권력투쟁을 골케씨의 퇴진이유로 보고 있다.

신탁회사업무가 시작한 후 지금까지 세 가지의 민영화, 서독기업에의 매도 때문에 여러가지로 착잡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세가지건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 세가지 건은 세멘트공장, 동독호텔체인인 인터호텔, 국영항공 회사 인터플러그인데 이들의 공통점은 신탁회사의 기능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 상기 회사 중 후자의 경우는 독점기업이므로 서독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 등등의 근본적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서독 혹은 다른 외국기업인들의 구입정책을 실현하는데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

(5) 상공회의소 설치

동독에는 현재 서독식의 지방상공회의소가 속속 생기고 있다. 그리고 상업계 기업은 반드시 여기 회원이 되어야 한다. 상공회의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진다.

- ① 상인들의 로비활동을 하며 경제정책결정과 의사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
- ② 회원들에게 여러가지 협조를 제공하는데 특히 외국기업과 사업을 전개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을 때와 그리고 근로자 재교육을 시행할 때
- ③ 공적인 과제로서는 여러가지 시험시 감시, 혹은 외국무역시 상품을 동반하는 제서류를 제공한다.

동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직업교육, 재교육, 기업입지조건 선정 및 확정, 기업창립, 외국무역시 자문제공이다. 지금까지 동독 상의설립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은 서독 상공회의소 연합회(DIHT)이다.

(6) COCOM 규제 자유화

경제, 통화, 사회통합과 동시에 7월 1일부터 동독 상품, 기술 수입규정이 바뀌었다.

특히 COCOM리스트 중 하이테크 분야에서 상당한 분야가 금지조항에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엠바고에 해당하는 것은 다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상품과 기술로서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동독은 나아가 하이테크가 재수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모든 이에 해당하는 수출상품기술이 통제를 받고 허가를 받을 필요를 갖고 있다.

1990년 5월 23일 동독정부는 외국무역청(AAW)을 설치하였다. AAW는 1990년 7월 1일부터 발효하는 외국무역법 규정에 의하여 외국무역에서 모든 법규를 엄수하는 것을 보장해야 하며, 허가를 받을 수출입상품에 대하여 콘트롤해야 한다.

그러나 COCOM 규정은 사실상 동독이 10월 3일 서독으로 합류됨으로 말미암아 동독에 관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7) 통합 두달 이후

가. 경제적 효과

서베를린 독일경제연구소(DIW)는 경제, 통화통합이 18개월 이후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항 목	1990	1991
취 업 인 구	8, 875, 500	862, 500
실 업 자	300, 000 (3. 4%)	1, 415, 000 (16. 4%)
단 시 간 노 동 자	420, 000 (4. 7%)	1, 080, 000 (12. 5%)
서독에 취업하여 통근하는자	95, 000 (1. 1%)	235, 000 (2. 7%)

그러나 사실상 동독의 경제사정은 예상외로 더욱 악화되어 있다. 동독 통계국 국장 돈다(Donda) 교수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발표하였다.

① 1989년 전반에 비하여 금년도 6월 말까지 생산이 7.3% 저락하였다. 제조업에서는 7%감소하였고, 작년 6월과 금년 6월을 비교하면 15.1% 저락하였다. 이유로서는 고용인의 감소, 기업간의 협력부족, 계획된 생산시설 완성에서 생기는 문제, 판매곤란 등이다.

② 농업에서 과잉생산이 현저하다.

	1990 (반년)	작년과 비교
도 살 육 류	11, 000t	0. 8%
우 유	122, 000t	3%
달 갈		+ 315million

③ 공업에서는 69개 업종중에서 13개 업종에서만 작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예를들면 조선, 폴리그래픽 인더스트리, 선로이용차량

등) 24개 공업종에서는 10% 이상 생산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특별히 침체된 공업분야인 과자, 커피, 차, 카카오 분야는 40%, 사탕, 전분은 25%, 식료품은 23% 하락하고 있다.

④ 건설사업에서는 작년 반년에 비하여 7% 저조하다. 금년에 들어와 단지 28,425 아파트만 완성되었다. 이것은 작년 수준에 비하여 3분의 1정도 감소된 것이다.

⑤ 무역에 있어서도 선진국과 제3세계로부터 수입초과는 3.2 billion valuta mark이었고, Comecon 국가와 다른 나라들에서 수출증가를 보여 6.1 billion valuta Mark 실적을 올렸다. 서독과의 내국무역에서는 6.7% 수출증가, 17.1% 수입증가를 보여주었다.

⑥ 고용인구는 6월에 5월과 비교하여 9만명(3.1%) 감소되었다. 6월 현재 등록된 실업자 총수는 142,096인이었고 5월말과 비교하여 47,289인이 증가한 셈이다.

⑦ 6월에 설립된 신기업 수는 47,000이었고, 금년 반년 동안 100,500 기업체가 새로 등록되었다. 그중 반은 상업과 식당이며 5분의 1정도가 수공업이다.

그러면 현재 동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실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① 과연 동독의 실업자는 얼마나 되는가?

최근 사퇴한 사회노동당 힐데브란트씨는 150만 정도의 실업자를 발표하였다. 이 숫자는 등록되어 있는 실업자가 약 35만이며 단시간 노동을 하는 사람은 120만 정도라고 보고 있으며 금년말까지는 2백

[1990년 반년동안의 경제발전(동독통계국 수치에 의함)]

	1985년=100	1989. 6=100	1989. 5=100
국 민 총 경 제	95.9	84.0	93.5
공 업	96.2	84.9	93.3
건 설 업	123.9	101.3	121.2
소 매 상 (단위: 백만동독마르크)	9,883	90.6	87.5
식료품/기호품	5,600	103.7	99.6
공 업 제 품	4,283	77.7	75.6
외 국 무 역 (단위: 백만동독마르크)			
수 출	12,949	101.2	117.9
수 입	11,266	85.7	101.8
노동자 및 고용인 (월평균)			
공 업 1000	2,850	92.3	96.9
실 업 자	142,096		149.9

만 정도의 실업자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② 동독의 물가상승율은 7.5%로 보고 있다.

6월을 기준하여 7월달 물가상승을 보면 우편업무는 228.9%, 과자, 빵 등은 121.8%, 식당 88.0%, 유치원대 79.1%, 육류 39.5%, 가정 전기기계 기구 33.4%, 가구는 25.7%, 커피 57% 등등으로 상승하였다. 물가상승의 이유로서는 정부보조비가 없어진 것을 큰 원인으로 들고 있다. 1989년에 비하면 5.5% 물가상승율을 보여주고 있다.

③ 통화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콜 수상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였다. “아무도 지금보다 더 못살지는 않고 많은 사람들은 더욱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동독인들은 단지 소수 동독인만 더욱 “잘 살게 되었다”고 여론조사에서 대답했다. 여론조사는 다음과 같다.

【중전보다 더 잘 살게 되었는지?】

	지 금	일년전	일년후
잘 산다	40%	28%	50%
부분적으로	49%	56%	30%
잘살지 못하게 되었다	11%	16%	20%

이 표에서 나타나는 사실은 동독인들이 자기들의 생계에 대하여 낙관적 태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동독인이 서독인의 생활수준까지 올라가려면 몇년 정도가 필요한지를 조사해 보면 5년 정도로 보는 사람이 38%, 10년으로 보는 사람은 10%, 결국 5년 이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76%이다. 고로 동독인은 통일독일 속에서 빈곤자로 전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 사회적 효과

(1) 통화통합 이후 제1차 국가조약 내용에서 예비조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보험과 건강보험지불에 거액의 공백이 생겼고

또한 8월치 연금지불액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서독정부에 재정지원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

사실상 제1차 국가조약에서 예상한 것은 44만 실업자를 기준했었다. 그러나 현재 등록된 실업자수가 12만 3천명, 단시간 노동하는 취업인구가 22만 3천명인 바 8월부터 사실상 국민 경제구조적 변혁에 따른 실업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독정부는 다시 재정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왔다.

(2) 동독정부는 물론 3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사회보험에 관해서 숙달 되지 않았고, 또한 현대 신계산 방법을 습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혼잡성이 있기 마련이다.

서독은 동독정부가 8월치 연금지불을 위한 요청에 의하여 2.04 billion DM 상환을 제공했다. (이것은 8월치 연금이다) 그리고 동독에서는 아직 연금 월분담금 납부성적이 대단히 미흡한 형편이다.

사실상 국가조약 속에 750 million DM은 연금에, 2billion DM은 실업보험에 지불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7월중에 이미 250million DM을 실업자를 위해서, 연금을 위해서 2.1 billion DM을 지불해 버렸다. 그리고 400 million DM은 아동수당에 지불됐다(물론 국가조약에서는 이 분야지불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3) 사민당 주장은 동독은 이미 재정력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다. 동독예산의 적자 3.4billion DM은 어떤 부서에서도 절약될 수 없으므로 앞으로도 쉽게 10billion DM까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동·서독정부는 조속히 제1차 국가조약 추가 조약을 위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한다.

(4) 동독 재무상(룸. 벨크)은 앞으로 장기간 서독으로부터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다. 농민생활의 악화

동독농민은 파산 직전이다(DDR-Landwirte stehen vor der Pleite)라는 말은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표현이나 가장 큰 문제는 생산과잉이다(다음표 참조). 물론 생산과잉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동독의 농산물 생산, 판매조직이 거의 완전히 붕괴됐다. 둘째, 동독인들이 동독의 농산물을 선호하지 않는다. 셋째, 동독의 농업은 지금까지 정부보조비 덕택으로 지속해 왔다. 따라서 시장경제체제로 옮겨지자 동독 농산품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게 되었다.

앞으로 8월 1일 이후 동독농업이 EC권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관세장벽 없이 EC농산품이 동독으로 들어와 현존하는 농산물 과잉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당연하게 보인다.

【동독 생산 소비 사정(1988—1989)】

	일인당 생산 단위	일인당 소비 단위
돼지고기	84 kg	62 kg
달걀	359 kg	262 kg
곡물	599 kg	437 kg
우유	505 liter	389 liter

과잉공급은 농산물 가격을 급락시켰다. (예 : 돼지고기 kg당 가격

이 일주일 내에 3.85DM에서 3.25DM으로 하락) 농산물협동조합(LPG)은 농업취업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너무나 갑자기 시장경제체제가 들어오고 정부보조비가 삭감됨으로 말미암아 정부가 시도하는 농업협동조합의 민영화, 자영화에 대하여 동독농민은 대단히 싫어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지경에서 농민들의 시위는 곳곳에서 일어났고, 농업상의 퇴진을 요구하여 수상 더메지어 자신이 농민을 종용하는 대화를 갖기도 하였다. 그간 동독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약간 진정된 상태를 볼 수 있고 최근에는 농업상 Pollack씨가 사면당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동독의 농업은 앞으로 통일이후에도 '문제아 제일호'라고 생각할 수 있다.

라. 상업조직 독점해체

동독에는 지금까지 HO (Handelsorganisation : 소매상 체인) 과 Konsum 두 국가 기업체가 소매상을 독점하고 있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괴이한 현상이 통합 이후에 일어났다.

① 동독(특히 지방) 상점에서 판매되는 생활필수품은 일반적으로 고가였다.

② 동독의 HO와 Konsum에의 상품 조달이 아주 늦었다.

③ 동독인이 서베를린과 서독으로 밀려와 쇼핑을 했으므로 이곳의 상점들에는 장사진을 흔히 볼 수 있고 교통은 대단히 혼잡하게 됐으며 서베를린과 서독에서는 훨씬 값싸게 쇼핑을 하고 있다.

④ 동독 상품을 선호하지 않고 서독, 서구 상품만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 심지어는 동독산야채, 과일을 사지 않아 동베를린 중심

지에서는 동독산 야채 과일시장을 일부러 개설하고 서베를린의 백화점 카데배(KADEWE)에서는 일부러 동독생산품을 구입 판매했다.

사회주의 유물로서 존재하는 HO와 Konsum을 없애기 위하여 7월 25일 추가 규정과 같이 발효된 「상업독점 해제법」의 골자는 더욱 공정한 경쟁과 더욱 신속한 상품지급이다. 이 규정에 의하면 어떠한 기업체도 당해 지역에서 25%이상 시장점유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만약 이 점유도 이상을 능가하면 신탁회사 설립규정에 의하여 민영화 되어야 한다. 각 지역 자치단체는 독점해체를 시행하며 기존하는 기업체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를 공모하며 추가적으로 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토지를 개발하여 특히 신탁회사 설립을 촉진한다. HO를 가능한 그 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판매 이양되도록 하며 HO해체과정에서 실업자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본다

서독 정부 경제상은 이 법령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면서 이 법령중에는 투자를 억제하는 요소가 다분히 내재하고 있으며 예를 들면 투자희망자를 공모하는 방식, 결정과정 방법은 전연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33% 시장점유도를 갖고 있는 Konsum의 경우에는 협동조합 아니면 그 구성원이 공모에 참가하기 때문에 불균등한 대우가 처음부터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상업독점 해제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동독 전국에서 일어났다. 소매상에 종사하는 수만명이 앞으로 다가올 실업에 불안하여 동독 국회의사당 앞에서 성토를 하고 상업상의 사퇴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소매상 대변인의 의견에 의하면 소매상의 상품이 더욱 비싼 이유는 정부보조금이 삭제된 것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마. 임금교섭과 임금수준

동독은 서독의 모형에 따라 산별노조를 결성하고 산별노조차원에서 임금협상을 금년 처음으로 하였다. 이것을 처음 시작한 노조가 금속노조이다. 물론 이 협상에서 이루어진 협약은 다른 산별노조가 협상하는데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우선 작센지방 금속노조가 달성한 첫단계교섭의 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7월 7일부터 1인당 250DM을 추가 지불하고 이것은 10월 1일부터 300DM으로 올리기로 하였으며 늦어도 10월 1일까지 주 40시간 노동제를 실시한다”고 합의를 보았다. 그리고 상업분야에서도 8월 한번 300DM 추가 지불하는데 합의를 보았으며 나아가서는 해고 전 노동자 재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무원 노조(OTV)이다. 이 노조는 출발과 동시에 서독의 OTV가 동독권내로 확대될 때는 자기 해산(11월초)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최근에 160만을 대변하는 OTV는 임금상승 및 가능한 조속한 임금협약 해결을 요구하였다. 최근에 이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단시간(2시간) 경고 농성에 들어가서 큰 도시의 교통은 마비상태로 들어갔다. 다음협상 때 (OTV)는 월 임금상승을 350DM정도, 그리고 소아 1인당 보조금 50DM을 요구하였다. 나아가서는 점차 동독의 임금수준이 서독의 임금수준에 달하도록 요구하였다.

일반적으로 동독에서 저조한 투자를 설명할 때 흔히 협상된 임금수준이 갑자기 너무 높아졌다고 한다. 더욱 구체적으로 논한다면 금년 상반기에 이미 앞으로 있을 7월 1일 경제통화통합을 예기하며 임금인상(제조업과 건설업에서 1월부터 4월까지 10% 인상했다)이 있

었다. 그러나 약 300DM (28%)를 커버하는 생산성 향상은 없었다. 따라서 동독경제의 경쟁력 및 직장 안정성은 저조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사실은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의 대단히 평준화 된 임금구조는 상이한 임금협상을 통하여 다양화 된 서독의 임금구조에 접근하는 경향은 없다. 오히려 그의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현상은 동서독간의 경제 적응을 곤란하게 한다. 결국 서독에서는 임금수준은 노동자의 실적, 자격, 탄력성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여하간 최근 동독의 단체교섭에서 발표된 동독 임금구조의 서독 임금구조에의 적용은 많은 시간을 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물며 동서독의 임금수준의 평준화는 더욱 시간이 흘러야 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그러나 임금수준의 동서독간 평준화에 관하여는 동독인은 최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단히 낙관적이며 또한 적극적이다. 14%의 동독인은 2-3년 동안 임금격차를 감수할 것이다. 86%는 조만간 같은 임금수준을 요구할 것이라고 하였다.

바. 시행착오

제1차 통합조약이 발효된 이후 두가지의 평가방향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통합이 아무런 준비없이 급행열차 속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모든 부차적 현상(대량실업, 기업파산, 노동의욕 저조, 경영자, 숙련 노동자 결핍등등)이 일어나 더욱 많은 통일비용이 필요하며 심지어는 통일에 관하여 환멸을 느끼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의 방향은 결국 통일은 정치적 합리성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분위기로 본다면 사민당 수상 입후보 라폰텐씨의 통일외 사회적 차원설이 자꾸만 맞아 들어간다고 중간노선에 서 있던 주간 '디짜이트'도 동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판적 의견이 압도적인 바 그 의견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화통합이 정치적 합리성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때 '본'정부는 경제통합 형성을 위한 계획과 구체적인 조치가 전혀 없었다. 즉 경제정책적 공백상태가 나타났다. 이것은 서독 경제상의 책임이다. 물론 사회주의 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변형시키는 데 아무런 교과서나 학설도 없으나 한가지 사실만은 확실하였다. 즉 사회주의체제를 통화권에 통합시킴으로 생길 경제적 부작용은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동독인에게 이 부작용에 대하여 미리부터 계몽을 했어야 했는데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

둘째, 서독 경제상은 최근 중소기업진흥에만 열중했고 거시적 차원의 경제정책은 경험없는 동독 정부에 맡겼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설명하겠으나 동독 정부의 경제담당부서 책임자는 시장경제체제를 체험한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연립 정부라는 조건하에서 거의 무명인사들에게 갑자기 이러한 중대한 부서를 맡기고도 서독 정부는 그냥 방관하였다. 또한 동독 수상 자신이 이 방면에 대단히 무능하여 최근에 들어서는 중요 경제담당부서 3장관(경제, 재무, 농업)을 파면시키고 차관들로 하여금 맡게 하였다. 그리고 신탁회사가 민영화 하는데 아직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도 이러한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럼 어떠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보는가?

첫째, 지금 바로 이야기한 8천 이상의 국영기업을 하루라도 빨리 민영화시키는 작업이다. 또 중요한 사실은 아직도 이 국영기업의 경영자들은 공산당 당원 아니면 국가 안전기구(Stasi)와 밀접히 관련

된 사람들이다.

둘째, 많이들 약속했던 투자는 아직도 대단히 미흡한 상태이다. 아직도 동독의 토지건물의 소유권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사유 재산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세째, 투자유치를 위하여 근본적인 것이 사회간접자본이다. 특히 통신, 도로, 하수도 등이다. 가장 문제되고 미개상태에 있는 것이 전화시설이다. 아직도 동-서 베를린간의 전화소통이 대단히 미흡한 상태이며 하물며 동-서독간은 더욱 그러하다. 말로는 앞으로 동독의 전화시설은 세계에서 최첨단일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사실상 아무런 개선을 느낄 수 없다.

네째, 지금까지 서독의 동독 국경지방개발 지원금 제도가 유효하여 이곳에 투자하는 기업인은 총투자의 23%를 정부지원으로 받게 된다. 그러나 동독에서는 단지 12%이다. 그러나 지금은 동서독 국경이 없어지고 오히려 국경지방이 미래의 휴양지(예를들면 하르쯔 지방) 자연공원 등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따라서 미래의 휴양지로서 중요한 소득 원천지로서 유망시 되고 있다.

다섯째, 동독기업의 부채가 약 85billion DM정도이다. 대부분이 부실화 된 기업으로 언제 이 부채를 상환하고 재기할지 아무도 헤답할 수 없는 입장에서 조속히 이 기업부채를 무효화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부채상환의 의무가 있는 이상 동독기업들의 새로운 출발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여섯째, 동독기업의 경영자는 절대 다수가 공산당원이었다. 물론 과도기에 있어서 이러한 경영자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은 다소 수궁이 같지 모르나 시장경제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새로운 경영'과 '새로운 경영철학'이 절실하다. 이를 위하여는 서독의 경영자가 일시

동독기업에서 종사해야 할 것이나 아무런 계몽사업이나 트레이닝이 없다. 다만 이 모든 것을 기업차원에만 맡기는 실정이기 때문에 동독 경영철학이 일대 변혁하는 경향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

일곱째, 너무나 오랫동안 통일 독일의 수도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있다. 본이나 베를린이나 하는 입장에서 지금 가조인된 제2차 통합조약에서 베를린을 독일 수도로 확정하고 있으나 독일대통령이외의 행정부 입법부는 우선 본에 남겨진다. 이것은 본 정부의 큰 실책이라고 본다. 통일전 독일의 수도로서 동독의 중심지였고 동-서 유럽 중심지에 있는 베를린에 행정, 입법부가 있다면 동독재건, 나아가 동구재건을 위한 상징적 의미만 아니라 사실상 로지스틱의 센타로서 정신적으로 훨씬 박차를 가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흔히 미개발 지역을 개척한다는 데는 창시자적 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재건에 앞장설 동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통합 2개월 동독인의 82%는 여하튼 동독지역에 남겠다고 하였으며 절대로 동독에서 살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동독인은 동독거주를 선호하고 있으나 사실상 동독인의 미래에 대한 불안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동독인의 53%가 자기 직장을 상실할 것을 예상하고 있으며 다만 7%만이 자기 직장에 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동독의 발전에 관하여는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다만 37%이지만 28%는 불안감을 갖고 있고 35% 동독인은 낙관과 비관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리고 통화통합 이후에 동-서독인의 독일 통화안정성에 관한 입장은 서독 통화를 처음으로 만져보는 동독인 82%가 독일통화는 앞으로도 안정성을 가질 것이라고 하며 오히려 41% 서독인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동독인이 경제, 통화통합 이후 자기 직장에 관한

불안, 임금에 관한 불만이 자자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체제에 관하여는 다만 8% 정도가 부정적이고 나머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최근 콧트부스시 실업자 여론조사에 의하면 실업자이지만 정치변혁의 바퀴를 다시 돌리기는 싫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그럼 동독 경제부흥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연방정부 내독연구소 및 자유베를린대 동독연구소팀의 연구결과를 종합한다면 '경제주체들에게 경제 혁신을 위한 정신적인 전제조건이 전적으로 결핍하다' 다시 말한다면 시장경제운영에 필수조건인 자율적 결정을 하는 능력부족과 부족한 지식과 경험은 무계획한 동분서주, 나아가서 모든 경제 조직을 마비시킨다. 그간 무혈혁명이 동독에서 성공리에 이루어진 이후, 불행스럽게도 왕년 공산당 정권하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엘리트들이 다시금 자기들의 위치를 공고히 확인한 것이다. 흔히들 말하기를 '상징만 바뀌었지 옛날의 관료경제구조는 그냥 남아 있다'. 그 전형적인 예로서 앞으로 없어질 동독 경제성의 3,100명의 관료 중에서 서독정부가 흡수할 400명은 거의 대부분이 공산당원이었다. 이러한 배경을 감지하면 수일전에 왜 동독신탁회사(민영화 책임기관) 사장이 사퇴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사. 동-서 베를린인의 상호간의 평가

처음으로 8월에 동-서 베를린인간에 어떻게 서로 생각하는지 여론조사를 시행하였다. 이 결과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동-서 간의 이미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환경, 생활수준 등등 물질적 요소가 다분히 내재되고 있는 분야에서는 서베를린이 우위에 있고 사회문제, 체육에서는 동베를린이 우위에 있다. 이 여론조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서베를린(서독)이 모든 분야에서 우위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더욱이나 동독 아이덴티티(DDR-Identity)를 통일 독일에 꼭 심어야 한다는 동독인의 자부심이 여기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독인은 지금까지 서독이 모든면에서 동독보다 좋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으나 여기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서베를린의 상대방에 대한 평가"어느쪽이 더욱 우위에 있나?】

	서 베 를 린 인			동 베 를 린 인		
	서베를린	동베를린	동등함	서베를린	동베를린	동등함
환 경 보 호	96%	1%	3%	90%	1%	7%
생 활 수 준	95%	1%	3%	92%	2%	5%
공 업	91%	3%	6%	88%	4%	5%
과 학 기 술	88%	3%	8%	77%	4%	16%
건 강 태 도	88%	2%	9%	61%	18%	14%
공 중 교 통	78%	8%	13%	79%	6%	15%
오 락 시 설	73%	7%	20%	60%	12%	25%
성 인 교 육	67%	14%	18%	45%	21%	30%
직 장 안 정	62%	23%	14%	27%	31%	39%
예술문학극장	57%	15%	28%	29%	26%	42%
범죄와 검거	52%	25%	22%	16%	42%	38%
남 녀 동 권	52%	20%	26%	5%	72%	21%
주 택 사 정	48%	28%	23%	11%	39%	46%

서로간을 분리시키는 요소에 관해서 동베를린인은 57%, 서베를린인은 59%로 보고 있다. 30세 이상의 베를린 시민은 상호간 공통점이 많다고 본다. 그리고 정당선호에 따라 또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기민당 선호자는 4분의 3이 공통점이 많다고 보나, 사민당은 단지 3분의 2이며 공산당(PDS)은 37%, 녹색정당 선호자는 32%이다. 다시 말한다면 좌익쪽에 있으면 있을 수록 조국애가 적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동베를린인은 서쪽에서 많은 상품공급에 감명받았다고 하였으며 나쁜 인상을 받은 것은 구걸하는 자, 주택없는 자, 방랑자라고 하였다. 서베를린인들은 동쪽의 경치가 좋다, 친절하다 이며 좋지 못한 인상은 노후화 된 주택, 파괴된 도로, 악취, 오물, 텅빈 가게를 지적하였다.

7. 동서독 통일의 제2단계

(1) 내적 측면

가. 선거법 문제

가장 격심했던 첫 당파싸움의 대상은 서독의 선거법을 동독에 그대로 적용시키느냐 하는 문제였었다. 동서독의 사민당(SPD)과 자민당(FDF)은 '서독선거법을 동독에 그대로 적용시켜서 통일된 독일 국회의원들이 모두 동등한 선거절차를 거쳐야 나중에 동등한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써 활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서독의 선거법에 의하면 한 정당의 득표수가 총투표수의 5%선을 얻어야 국회에서 정당활동을 할 수 있다. 5%선은 서독에서 바이마르제국때에 수많은 군소정당이 등장함으로써 의회정치에서 대단한 불안정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서독선거법을 동독에 무조건 적용하는데 반대하는 정당들(서독의 기민당, 기사당, 녹색당; 동독에서는 대부분의 정당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열거했다.

첫째, 동독에서는 많은 군소정당이 있는 바, 특히 그 중 몇개 정당들(Bundnis 90 등)은 작년 11월 동독의 무혈혁명을 성공리에 치뤘기 때문에 이러한 정당들은 통일된 독일국회에서 반드시 활동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둘째, 동서독에서의 5%선은 대단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만약 5%

선을 유지한다면 동독에서 한 국회의원이 얻은 득표수는 서독의 국회의원 득표수의 4분의 1정도이다. 따라서 같은 국회의원 사이에서 국민들의 지지선은 대단히 큰 차이를 보여준다.

그러나 사실상 가장 큰 문제는 서독의 기사당(CSU)이다. 기사당의 동독 파트너는 DSU이다. 서독의 기사당, 동독파트너는 절대 5% 선을 달성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현재 서독 연정의 파트너인 기사당은 기민당에게 자기들의 노선을 강요했다. 사민당과 자민당의 복심은 물론 기사당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데 있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공산당(PDS)과 공화당(Republikaner)을 가능한 한 약화시켜 통일된 국회에서 무력화시키려는 것이었다. 기민당과 기사당은 동서독 정당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의미에서 5%선에서 3%선까지 저락시킬 제안도 했다. 이렇게 되면 또한 공산당과 공화당의 세력이 국회에서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정당간의 논쟁은 과열해져서 다음과 같은 '비난'과 '위협'이 비등했다.

- ① 기민당은 선거법을 이렇게 적용함으로써 좌파세력을 완전히 파괴하려 한다.
- ② 평소 서독연정 중에서 의견충돌이 잦은 기사당과 자민당 간에 이 선거법 때문에 상호 비난이 비등하여 자민당은 기사당을 완전히 붕괴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 ③ 만약 두 가지의 선거법에 의하여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질 때는 자민당과 사민당은 헌법재판소에 소송할 것이다 라고 발표했다.

상당히 오랫동안 논쟁이 계속되다가 마침내 다음과 같은 합의를

연게 되어 소위 말하는 선거조약(Wahlvertrag)이 동서독 양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첫째, 서독에서 지금까지 유효한 선거법을 적용한다(단일선거구 원칙).

둘째, 군소정당 입후보자가 대정당의 입후보자로 등장할 수 있는 정당간의 입후보연립제도를 허락한다. 이런 방법을 '엮고가는 방법'(Huckepack)이라고 부른다.

이로써 선거법을 둘러싼 당쟁은 일단락 지워졌다. 국회에서 선거법이 통과될 때 흥미스러운 사실은 동독연정이 3분의 2의 의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독국회에서 심야토론 끝에 투표에 부친 결과 3분의 2를 득표하지 못하는 괴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8월 9일) 따라서 다시 한번 국회에서 논의되어 결국 8월 중반에 통과됐다. 서독연방국회에서는 8월 3일 통과됐다.

이와같이 서독·동독 단일 선거법 유효지역원칙과 득표수 5%원칙이 결정되자, 동·서독의 정당간에 상호 협조하여 각각 1개 단일 정당으로 총선에 참가하기 위하여 정당통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미 동·서독 자민당은 통합했고, 사민당은 9월말, 기민당은 10월 중 통합될 것이다. 그리고 동독공산당은 서독에서 여러 파트너를 구하여 Linke Liste/PDS(좌익표/동독공산당)라는 연립전선을 구축하였다.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5%선을 능가할 것이며 최소한도로 3개 선거구는 따낼 것이라고 한다. 녹색정당은 총선후 통합할 것이다. 동시에 공산당과의 간격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총선에는 녹색정당, 연맹90년 등이 연립하여 참가했다. 자민당이 가장 먼저 정당통합을 8월에 시행했다. 당수는 오토 람스도르프 백작(서독 당수), 부당수는 동독 오르트랩, 맨젤로 확정됐다.

나. 총선거와 병합(Beitritt)

총선일자 및 병합일자에 관한 치열한 논쟁이 동독연정내에서 일어났다. 7월 17일 동독 자민당은 동독국회의 하기휴가가 시작되기 전인 12월 1일 병합할 것을 결의하도록 요구했다. 이 요구를 동독사민당은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더 메지어 수상은 이 요구를 거절했다. 그가 거부하는 이유는 동독이 총선일자와 통일정부 성립기간 사이에 정식 정부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7월 20일 동독국회는 일대 드라마가 전개됐다. 사민당·자민당이 제출한 '동독의 서독으로의 12월 1일 병합안'을 기민당은 다른 정당, 특히 공산당(PDS)과 같이 절대다수로써 거부했다.

사민당, 자민당은 기민당과 공산당의 동조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사민당 당수 포젤씨는 '동독 수상이 이성의 길에 다시 돌아올지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논했다.

동독 자민당, 사민당은 동독 수상이 빠른 시일내에 병합을 선언하기를 요구했으며 총선거 직전에 병합이 실행되기를 다시금 강조하면서 만약 이 요구가 달성되지 않을 때 연정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동독 수상은 이 요구를 거절했다.

7월 22일 사민당, 기민당은 공동으로 상기의 요구를 다시금 동독국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병합에 관한 규정은 제2통합조약에 성문화하도록 주장했다. 7월 25일 자민당은 결국 연정을 탈퇴했다. 사민당은 당분간 연정에 잔류하기로 결정했다.

여하간 동독의 정당간에 어느 시기에 동독이 서독에 합류될 것인가 하는 시점에 관해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선거일과 병합시기를 중심으로 한 당쟁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한편 동독의 경제사정은 점차 악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동독내에서 기민당의 선호도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므로 지금 상태가 계속하여 12월 2일에 총선이 시행되면 기민당이 과연 예상하는 득표를 획득할 수 있을지 하는 의아심이 있다. 콜수상과 더메지어수상이 콜수상의 오스트리아 휴양지에서 이루어진 밀약으로써 선거일을 당겨 동독 총선거일 '10월 14일' 동시에 총선을 실시하고 또한 동독이 서독으로 병합하자는 복안이었다. 서독의 연정은 절대찬성, 야당 사민당과 녹색당은 절대 반대이었고, 동독의 기민당, DA, 자민당은 콜수상의 제안을 찬성했으나, 사민당, 공산당, 대부분의 연맹90의 국회의원은 반대했다. 그리고 사민당이 오히려 즉시 병합을(9월 15일)을 주장했으나 부인당했다.

사민당(서독)은 이와 같이 선거일을 앞당기는 것은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사실상 서독기본헌법(39조)에 의하면 '차기 국회의원 선거는 빨라도 신국회의 회의가 시작한 후 45내지 47주 사이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성문화 되어 있다. 따라서 12월 2일이 가장 빠른 선거일이다. 왜냐하면 지금 서독연방국회가 1987년 1월에 성립했기 때문이다.

만약 선거를 앞당기려면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있다. 첫째, 헌법 개정에 의하여 실현시킬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서독에서는 상원·하원 3분의 2표수가 필요하다. 현재 사민당이 10월 14일 총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 둘째, 1982년에 한번 경험했던 서독기본헌법 제68조에 의하여 수상 불신임 결의에 의하여 실현하는 것이다. 만약 국회가 해산되면 60일내에 재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콜수상이 연방국회에서 사실상 절대 다수의 신임을 받고 있는 이상,

연방대통령이 과연 국회해산에 동의할지 의문이며 나아가서는 헌법재판소에 고소할 수 있다.

결국 연방정부의 이러저러한 전략모델은 성공적인 실현성이 대단히 의문스럽고 헌법상 아무런 위헌이 되지 않는 방법은 동독 국회의원이 서독연방국회에 파견(Entsendung)되고 12월 2일 총선을 실행하는 것이다.

서독의 사민당 라폰텐은 콜수상의 선거를 위한 위헌적 조작을 절대로 지지하지 않으며 콜정부의 통일정책이 실패할 것을 증명하고 정권연장에 오용되고 있다는 맹렬한 비난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미 상기한 제2의 전략을 이용할 때 연방대통령은 절대로 감수하지 않겠다는 암시를 던져 주었다. 결국 사민당은 상기한 제1의 전략을 이용할 때는 연방국회에서 헌법개정을 동조하지 않는다 하여 콜수상의 선거 조기실시 전략은 포기되고 말았다.

이렇게 조기선거와 병합의 동시실시 작전이 실패함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시급한 문제는 병합의 조기시행을 둘러싼 논쟁이 시작되었다. 이미 서술한 바 동독에서는 매주 2만 내지 2만5천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단시간 노동자는 막대한 숫자에 달하고, 따라서 실업보험지불을 위한 재정상의 궁핍화, 많은 기업의 파산, 가속되는 파업 등의 동독의 몰락상태는 동독국민들로 하여금 동독 연정내에서의 당쟁을 주시하는 것보다 오히려 빨리 서독속으로 흡수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고조되었다.

다른 한편 제2통합조약을 둘러싼 당쟁 역시 고조화 되어 과연 바라는대로 빨리 양독간에 조인될 수 있을까 하는 데 많은 의문이 제기 시작했다. 제2통합조약에 관해서는 다음 조항에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기사당과 사민당은 12월 초순보다도 더욱 빨리 병합을 실시하기를 주장했다. 기사당은 즉시 병합을 선호하고, 사민당은 9월 15일 '병합을 하루라도 유예시키면 동독의 경제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이로 인하여 더욱 막대한 통일비용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입장으로써 합리화시키려 했다. 따라서 서독정부는 조기 병합 반대태도를 포기하기를 촉구했다.

이러한 강력한 촉구는 병합 조기실시로 여야당의 입장이 수렴됐다. 동독국회는 10월 14일 동독 지방선거가 끝난 즉시 병합하기로 결의했으나 폴수상은 또 다른 제안을 했다. 그것은 10월 6일이다. 결국 병합시기는 다음과 같은 여러 모델로 나타났다. '12월 1일', '10월 15일', '10월 14일', '10월 6일', '9월 15일', '즉시', 이와같은 다양한 병합시기의 착잡한 현상을 made in Germany라 불렀다. 여하튼 통일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서독정부는 10월 초순으로 낙찰시키고 다음과 같은 이유를 밝혔다. 10월 7일은 동독 탄생 41주년이다. 그러므로 이전인 10월 6일 동독은 서독으로 병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월 22일 동독국회에서는 결국 상기의 여러 모델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어 야간토론을 마친 8월 23일 새벽에 동독국회는 10월 3일 동독이 서독으로 병합됨으로써 독일통일을 수행할 것을 결의했다.

이 결의 조건은 이 시기까지 제의한 통합조약에 관한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야 하고 '2+4'회담이 10월 2일까지 성공적으로 통일의 외교적·안보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하며, 나아가서는 동독의 5개주가 그동안 성립과정을 거쳐 10월 14일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기본헌법 23조에 의하여 동독의 존재는 이날 완전히 소멸된다. 그

리고 동독국회는 잠정적으로 '144명'의 국회의원을 서독연방국회로 파견함으로써 12월 2일 총선까지 서독정부는 '과도기의 통일정부'로써 역할을 하게 된다. 독일은 10월 3일을 새로운 국경일로 확정했다.

다. 제2차 통합조약(통일조약) 성립과정

9월 1일 동서독은 제2차 통합조약을 서명(가조인)하고, 앞으로 양독의 국회를 통과하면 발효한다. 약간의 수정이 추가되겠지만 이 조약이 발효함으로써 사실상 독일통일의 완성은 더욱 목전에 달하였다. 약 900페이지에 상당하는 텍스트는 24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2개 추가조항과 각 추가조항은 수개 부항이 포함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단일 법질서 형성을 위한 과도 및 적응규정을 작성하며 현실적으로 동독의 제 법규를 수정할 뿐만 아니라 서독연방법규 및 서독기본헌법의 일부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발효조인을 위해서 양독국회 각각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가) 서독의 일방적인 조약?

'통합조약'은 과연 두 국가가 동등한 입장에서 체결된 합의였던가? 혹은 서독의 일방적인 강요였던가? 독일의 일반여론은 '일방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이것을 표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실상 통합조약 성립과정을 '굴욕'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많다. 처음 굴욕은 소련의 동독에 대한 지배를 의미하여, 둘째 굴욕은 두 말할 것 없이 서독의 동독에 대한 지배를 표현하는 것이다.

제1차 통합조약에 관한 야사가 점차 나타나기 시작했다. 동독인은

자신이 서독인과 협상할 때 경험과 준비없는 초년생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다. 독일의 새로운 정치 스타라고 불리어지는 동독협상대표 크라우즈교수는 물론 Artificial Intelligence의 전문가이다. 그러나 정치협상에서는 아무런 지식과 경험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선 제1차 통합조약서문작성에서 동독쪽은 ‘동독에서 1989년 11월 민주주의적 무혈혁명이 전개됐다……’는 구절을 집어 넣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다.

사회주의체제속에서 살아온 협상대표가 시장경제속에서 살아온 사람과 시장경제요소에 관해서 토론하자 동독인이 시급히 탐독한 전문지식은 충분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경제적 요소를 은행 화폐제도 등 법적인 조항으로 옮겨갈 때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동독인은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 최초의 전략구상은 가능한 global framework를 만들 때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자는 데 합의를 보았으나 예를들면, 최저연금계산에 있어서 동독인의 생활필수비용이 구성은 대단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하간 나름대로 집계한 것이 495DM평균으로 나타났다. 동독인은 이것이 결국 조약속에 고려된 것에 많은 만족을 하고 있으나 현실상으로 최저빈곤도 수준을 기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독인의 무제한한 자부심, 나아가서는 자기 혼자만이 아는 ‘시장경제 전문가적 태도’는 제1차 통합조약 협상 중 동독인을 대단히 모욕하는 지경으로 이끌고 가서 그들은 당장 일어서서 회의장을 떠나고 싶은 감정이었다고 한다.

이와같은 제1차 통합조약협상시 경험은 제2차 통합조약협상시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통화통합 이후 악화되는 경제사정은 동독인으로 하여금 더욱 굴욕적인 자세를 취하겠끔 했다. 특히 동독

재무상은 서독정부로부터 공공연하게 비난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협상중의 불미스러운 현상은 제2차 통합조약협상이 시작할 당시 합의본 '동독의 병합조건은 동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또 이것은 성문화되어야 한다'는 내용과는 정반대였다는 것이 점차 공개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이면사는 평소에 어디까지나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던 통일반대자에게 (Nie Wieder Deutschland) 좋은 근거를 주는 계기가 되었다.

(나) 통합조약의 중요점과 의사결정

① 서 문

통일독일은 법치국가, 민주국가, 사회연방국가 (Rechtsstaatlich Geordneter, Demokratischer und Sozialer Rechtsstaat)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기본헌법과 같다. 독일통일정신 고수에 대한 전통과 동독의 민주 무혈혁명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나아가 독일역사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독일통일은 유럽의 평화체제속에서 이루어져 현존하는 유럽 모든 국가의 주권과 국경을 존중한다고 성문화 하면서 폴란드와 통일 독일간 국경의 영구성을 강조하였다.

서문에 관한 비평이 자자하였다. 이것은 앞으로 수정될지 모르나 '독일민족은 나치시대의 유대인 학살을 회개하고 다시는 이러한 처사를 앓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특히 미국과 세계유대인 연합회 및 독일 야당에서 비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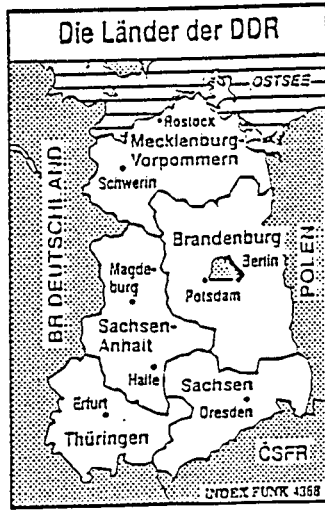
② 연방주

동독은 7월 22일 연방주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연방주 형성을 보았다. 10월 14일 시행되는 연방주 선거는 이러한 단위에서 서독

연방주와 꼭 같은 연방주정부, 의회가 형성되어 연방 상원에 각각 연방대표를 파견하게 된다.

5개의 연방주는 다음과 같다(지도 참조)

튀링겐(Thüringen), 작센(Sachsen), 작센 안할트(Sachsen-Anhalt),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메켈렌부르크(Mecklenburg).



중요한 사항은 독일 수도는 베를린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의회와 정부의 소재지는 독일통일이 이루어진 이후 결정되기로 성문화되어 있다(베를린 혹은 본이 수도가 되느냐에 관해서 다음에 상세히 논하기로 한다.)

여하간 통일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서독 기본헌법은 동독 5주와 전 베를린에 적용된다. 따라서 기본헌법 23조는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1995년까지 동독주가 서독기본헌법에 완전히 적용되지 않을 때는 다른 법규정을 제정할 것이다(기본헌법 제194조에 추가조항).

③ 기본헌법개정추가

통일과 함께 2년간의 적응기간을 두면서 통일 이후 2년간 발생하는 제문제에 관하여 독일 국회는 다시금 기본헌법 수정 추가작업을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것은 기본헌법 146조에 규정되어 있다.

특히 이 통합조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헌법개정 중점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관계
- 베를린과 부란덴볼크주 신구성과 그 가능성
- 국가목적을 기본헌법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관한 조항
- 상기한 기본헌법 제146조

④ 재정·예산제도

사민당의 요구가 어느정도 이곳에서 관철되었다. 사민당은 통합조약 동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조건중의 하나가 동독주 지방재정을 강화하며 동독인에게 더욱 좋은 경제부흥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연방재정제도는 동독지방에 확대 적용된다. 특별조항은 연방, 주, 면의 조세수입 배분문제이다. 그리고 특히 책정기준이다. 1996년까지 소득세 수입에 있어서는 미개발 지역에 특혜를 주기로 하고 있다. 그리고 1994년까지는 공공단체세, 지방세 부분에서도 특혜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리고 서독의 연방주(부유한 주와 빈곤한 주) 간의 재정상호지원(Landerfinanzausgleich)에는 참가 않는다. 그대신 1994년까지 특별지원조치에 의하여 재정지원이 시행될 것이다.

사실상 통합조약성립단계에서 그 연방주 재정문제는 동독정부를

위기로 몰고갔다. 동독의 롬베르크재무상(사민당)은 물론 서독 사민당과 동조하여 통합협상에서 동독지방 재정상태 및 동독정부 재정상태에 대하여 항상 강력한 입장을 공공연하게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화통합 이후 생긴 동독예산적자(특히 사회보험 때문에)충당을 위한 서독의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등으로 서독정부로부터 신랄한 비평을 받아왔고 다른 한편 '독일통일기금'을 롬베르크 재무상은 동독에서 거출하지 않았다고 했으며 그 대신 재무상은 통일기금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기업인의 차관부여 조건이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여하간 동독수상은 롬베르크 재무상과 함께 농업상 폴락(Pollack), 폴(Pohl)경제상, 분세(Wunsche)등 4인의 각료를 한꺼번에 사면시켰다(사실상 수상은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격적 사면은 사민당소속 Romberg 및 Pollack에 해당함으로 사민당은 외무상 Meckel과 노동상 Hildebrandt도 자진 사퇴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동독정부는 의회에서 절대다수를 상실하게 되었다.

동서독간의 논의를 좀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또한 동독 연립정부내의 싸움이었다. 동독 재무상은 서독과 협상에 임하여 아주 구체적인 계산과 데이터를 제시하였는데 반하여 더 메지어, 크라우제(통합조약협상 동독대표)는 아무런 숫자상의 근거가 없었다. 결국 문제는 동독 5개 연방주의 국가재정을 어떻게 빨리 서독에 적용시키느냐? 혹은 1994년까지 특혜를 받느냐? 하는 문제였다.

동독 재무상과 사민당의 입장은 동독이 앞으로 4년간 매상세수입 49 billion DM 전액을 동독이 보유, 재건사업에 투자하게끔 하자는데 대하여 연방정부는 이에 반대하였다. 동독 정부, 특히 크라우제의 입장은 동독이 가능한 빨리 서독재정제도에 통합이 되면 될수록 동독

경제부흥이 늦어질 때 서독에서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롬베르크씨는 가능한 한 동독은 동독자체의 재정적 발전을 도모하였다. 여기에 연방주의에 관한 이해에서 근본적으로 상이한 점이다. 만약 크라우제 모델을 추종한다면 앞으로 동독 5주는 1994년까지 90billion DM의 부채를 가질 것이다(동독의 지출을 2% 증가시킨다 해도). 따라서 1인당 5,500DM의 부채가 생긴다. 고로 이것은 서독연방국민에게 1인당 750DM 정도이다. 롬베르크씨의 결론은 “동독주의 막대한 부채와 부족한 재정능력은 앞으로 장기간 회피할 수 없다. 여하간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을 위시하여 롬베르크의 입장이 옳다고 하였다.”

이러한 롬베르크의 입장은 서독 사민당도 통합조약협상에서 관철할 수 없었고 다만 ‘여건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을 때 동독 5주의 재정능력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다’라는 점에서 합의보았다.

⑤ 임신중절

임신중절문제에 관하여는 동서독이 상이한 모델을 가지고 있다. 간단히 말한다면 서독은 임신중절이 형법상 금지되어 있다(형법 제218조). 동독은 이것이 임신 3개월내에는 허용된다. 통합과 관련하여 사민당, 자민당은 동독 모델을 선포하고, 기민당, 기사당은 구태의연하게 서독모델을 고수하려 하였다. 자민당이 정당의 기존 입장을 연정내 협의에서 포기하자 자민당 내에서 뿐만 아니라 사민당, 재야 여성단체는 자민당의 변심을 맹렬히 공격하고 이로써 일단 끝났다고 생각한 논쟁은 재연되기 시작하였으며 사민당은 동독 모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2통합조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였

고 서독 자민당은 동독자민당을 종용하여 통합조약속에 반드시 일률적인 임신중절 규정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케 하였으나 동독정부는 부동상태였다. 디짜이트지는 임신중절문제에서는 동독은 외국으로서 취급된다고 회롱하였다.

사민당은 통합조약에서 다음과 같은 규정에 동의하였다. 1992년 12월말까지 새로운 일률적인 임신중절법 제정을 할 것이며, 그 때까지 서독인이 동독에서 임신중절을 할 때는 형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서독은 동독의 모델을 시인한 결과가 되었다.

⑥ 독일수도문제

이 조약에서는 독일수도는 베를린으로 하되 입법부 행정부의 이전문제에 관하여는 다음에 국회에서 결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동독정부는 시종일관 베를린을 독일 수도로 하고자 하였으나 서독은 이에 완강히 반대하였다. 그러나 수도문제에 대한 그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베를린’ 선호파는 연방대통령 바이체커씨와 사민당 명예회장 브랜트씨 등의 독일 정치의 거물이 앞장서고 있고 ‘본’ 선호파는 노르트라인 베스트파펜주(본이 위치하고 있는)와 바이에른주인 바그 전자는 사민당(SPD)정부가, 후자는 기사당(CSU)정부가 집권하고 있으며, 정당소속 관계없이 기민당원 현 연방정부 노동상인 부림씨도 본 선호파에 합류하였다.

‘본’ 선호파의 요점은 무엇인가?

첫째, 전후에 있어서 독일(서독)민주주의가 처음으로 독일 역사상에 성공한 곳이며 성공한 이유중의 가장 큰 이유는 서구민주주의에 지역적으로 가까웠고 서구측과 화해하는데도 상징이 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본이라면 독일민주주의의 모범이라고 보게 된다.

둘째, 베를린은 히틀러 독재의 상징이며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의 근본적인 발상지라고 간주되고 있어 독재에 관한 인상이 강하게 남아 있다.

셋째, 만약 본에서 베를린으로 수도를 옮기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게 된다. 노르드라인 주지사인 라우 박사는 수도 이전에 드는 비용은 약 80billion DM 정도 들 것이라고 계산하면서, 이와같은 거액은 차리리 동독재건을 위해 투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베를린’ 선호파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49년 서독연방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통일독일의 제연방기관(국회, 행정부 등등)은 베를린으로 옮긴다고 했으며, 이 결의가 철회되지 않은 이상, 당연히 베를린으로 옮겨야 한다.

둘째, 상기의 법적 근거보다도 역사적 사실로서 베를린이 히틀러 주의의 발상지가 아니고 오히려 반항운동을 한 곳이 베를린이었다. 오히려 베를린은 독일민족의 ‘자유’의 상징’이었다. Kennedy 대통령도 베를린에서 말하기를 “자유를 사랑하는 자는 베를린으로 오기 마련이다. 따라서 나도 베를린 시민이다”고 말한적이 있다.

셋째, 동독의 수도는 베를린(동베를린)이다. 아직도 모든 정부청사, 관청, 각국 대사관 등이 이곳에 설비되어 있으므로 수도이전비용은 자가당착이며, 오히려 본에 살고 있는 관리들의 ‘에고이즘’때문이다. 그네들의 주택문제, 자제들의 교육문제 등은 능히 이해할 수 있는 바, 베를린 선호파는 연방기구 전부가 베를린으로 옮겨질 필요는 없고, 대통령, 행정부 일부, 국회만이라도 이곳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넷째, 서독이 모든 면에서 동독을 흡수해서는 안된다. 경제·통화

• 사회통합을 통하여 동독은 서독에 흡수됐다고 본다. 그럼 통일과정에서 동독이 통일속으로 가져오는 것은 무엇인가? 동독인의 Identity 만이라도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베를린은 문학, 학문, 예술의 중심지이다. 유럽에서 이와 같이 다종다양하고 양적, 질적으로 풍부한 도시는 없다. 지리상으로 유럽의 중심지이며 동구로 가는 문턱에 있다. 60~70km 거리에 폴랜드가 있다. 냉전해소, '유럽의 집', 나아가서는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이러한 도시로부터 자극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독일국가 자체를 여기에 기여하는 입장에서 '잠정적인 수도인 본'에서 베를린으로 옮겨야 한다.

여섯째, 베를린은 유럽의 100만 인구 이상의 도시중에서 가장 공업생산력이 높다. 그리고 고급인력이 가장 밀집해 있는 곳이다. 메르세데스 벤츠 회사가 앞으로 베를린시 한복판으로 옮겨올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일본, 대만회사, 은행들이 베를린에 진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단히 미흡한 상태이다.

이러한 국제화에 페이스를 맞춰가는 여러 형태의 활동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베를린의 세계적인 국제문화, 박람회 행사도 큰 이유로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베를린은 앞으로 수도가 될 것이며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질 것이다.

첫째, 유럽의 지역적인 중심지로서 동서구를 연결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다(냉전해소에 기여).

둘째, 유럽에서 가장 활발한 과학, 기술도시가 될 것이다. (사실상 현재 그러하다)

세째, 유럽에서 가장 활발한 문화, 예술도시가 될 것이다. (사실상

현재 그러하다.)

네제, 유럽에서 증대한 경제도시로 부각될 것이다.

여하튼 최근 독일 여론조사발표(8월 30일)에 의하면 대부분의 독일인은 베를린을 독일의 수도로서 연방대통령, 국회, 행정부 전부가 수도에 위치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2) 외적측면

지금까지 독일통일의 소위 말하는 외적측면은 예상외로 순조로왔다. 한때 영국의 Ridley 장관의 망언에 의하여 약간의 문제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순조로운 통일의 틀을 만들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요약에서도 설명한 바 있지만 첫째 서독동방정책이 70년대초에 시작하기 전에 서독은 소위 말하는 Atlantic Partnership이라는 틀에서 NATO의 믿을 수 있는 한 멤버가 되었으며 미국 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항상 페이스를 잘 맞추어 왔다. 그리고 유럽차원에서는 EC구축을 위하여 프랑스와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추진하였다. 고로 동방정책의 이면은 60년대 말까지 공공연히 쌓아온 서구 우방국가와의 우호관계였다. 둘째, 이를 위하여 서구내에서 어디까지나 히틀러의 추악행위에 대한 과거청산을 잘 하여 왔다. 서독이 전쟁 배상금만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히틀러 정권에 공조한 것을 후회하면서 민주주의 문화를 정립하는데 시종일관 노력해 왔다. 사실 동방정책의 의미는 단순히 과거청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구지방국가와 우호 관계를 만들어 냉전해소에 이바지 하겠다는 저

의를 동구국가에서 보았을 때 대단히 고무적이었다. 따라서 동독정권의 붕괴과정에 임하여 이러한 동서관계에서 받을 수 있는 보너스는 큰 역할을 한 것이다.

1989년 12월 11일 동서독 주재 4대 연합국(미, 소, 영, 불) 대사회의가 18년만에 처음 모임을 가졌다. 11월 9일 이후 일어난 동독사태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특별한 결의는 없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냉전이 해소되는 입장에서 전미국대통령 레이건의 제안(베를린시를 국제모임의 대광장으로 만들자)를 간략하게 검토하였을 뿐이었다. 이 회의가 끝난 즉시 베이커 미국 국무장관은 모드로우씨와 만나 미국에서는 동독이 민주개혁을 하는데 포괄적 지원을 하겠다고 표명하였다. 12월 15일 NATO외상회의에서는 동독과 동베를린에 민주주의와 자유를 도입하는데 고무적인 지원을 보내면서 양독간의 협력을 적극지지하였다. 독일민족의 자결권을 강조하면서 동독 민주개혁은 평화적, 민주주의 방식에 의하여 수행되며 헬싱키체제원칙속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협정과 조약을 준수해야 하며 나아가 유럽통합전망과 페이스를 맞추어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동서독 접근에서 가장 예리하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주시하고 있던 나라는 인접국가 중에서 물론 프랑스였다. 프랑스의 반통일 여론은 비등하여 왔고 대통령 미테랑은 크리스마스 직전 12월 21일 모드로우씨를 직접 방문하였다. 양국은 상호간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할 것을 합의하였다. 라이프찌히 대학에서 학생들과 대담하고 그는 독일통일문제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동서독 국가의 문제라고 강조하였다. 미국, 프랑스를 따라 영국은 1990년 2월 22일 비로소 모드로우씨를 방문하면서 영국정부의 동서독 접근에 대한 동의를 표명하면서 무엇보다도 빨리 동독이 EC와의 교류를 강화하는데 협조할 것이라

고 하였다.

이와같이 서방 3전승국가와 접촉이후 1990년 1월 30일 모드로우씨는 고르바초프를 방문하게 되었다. 이미 이 회담이 시작되기 전 고르바초프는 “소련은 독일통일에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독일이 통일한다는 데 대하여 아무도 한순간도 근본적으로 반대한 적은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전승국의 의무를 고려하여야 하고, 유럽통합과정에 있어……본인은 독일인의 이해관계가 저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언제나 현실적인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하였다. 모드로우씨는 이 회담이 끝난 후 말하기를 “우리는 통일 조국 문제에 치중하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수일후(2월 10일) 서독수상 콜은 고르바초프와 대담하고 난 후 말하기를 “지금 소련, 동독, 서독간에는 독일인 스스로가 통일문제를 해결하며 어떠한 형태의 국가, 어떠한 조건에서, 어떠한 시점에서 통일하는가에 대하여 의견차이가 없다”고 밝히면서 고르바초프가 모드로우에게 표현한 바와 같이 “독일통일은 유럽통합과정속에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냉전해소 속에 들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고 콜 수상은 재차 확인하였다.

이러한 청신호가 2월 13일 소위 말하는 2+4회담(양독 및 4개 전승국)을 가능케 하였다. 물론 폴란드는 2+4+1을 주장하면서 오더나이세 국경 때문에 꼭 참석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결국 오타와에서 열린 첫 2+4 회담에 참석하지 않았다. 여하간 이 회담에서도 근본적 합의가 독일통일에 관하여는 합의를 볼 수 있었으나 앞으로 현독일 국경문제 때문에 반드시 인접국가인 폴란드와 회담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 이후 논의된 것은 양독 스스로의 NATO 및 바르샤바 조약 회원국의 자격문제였다. 여러 모델이 등장하였다. 독일통일 후

중립론, NATO의 동독까지 확대론, 동독 중립론, 양독 각각 지금까지의 방위체제에서 잔류 등이 나왔으나 명확한 해답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양독접근은 가속화 되어가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났다. 모드로우는 3월초 소련정부에 호소하기를 독일이 통일된다 하더라도 전승국의 자격과 영향으로서 소련의 권리를 계속 보지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수일후는 EC와 동독이 정식으로 장기 무역협력 협정을 체결하며 동시에 양독의 경제통화통합이 이루어진 이후 이 협정은 새로운 정세에 적응되어야 한다고 EC는 발표하였다.

2+4회담이 다시금 3월 14일 동독선거 4일 전 본에서 개최됐다. 회담의 목적은 독일통일과 유럽인접국가의 안보문제였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절차상의 문제를 토론하고 결정을 내주었다.

3월 15일 고르바초프는 소련대통령에 취임하고 그의 취임연설에서 “독일통일이 이루어져도 독일땅으로부터는 영원히 다시 전쟁위협은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부연하여 4전승국의 권리, 현 국경의 항구성, 유럽통합체와 독일통일의 연관, 통일독일이 NATO 가맹국이 될 수 없다는 것과 2차대전 결과에 대한 평화조약의 필연성을 강조하였다. 다시 그는 말하기를 “동구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통일독일을 고려하여 집단 안보, 협조, 협력체제로서 지금까지의 블록시스템을 대체하는 데 관하여 토론할 때가 왔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거의 때를 같이하여 3월 17일에는 바르샤바 가맹국들이 프라하에 회담하여 독일인의 통일주권을 인정하였다. 즉 “통일은 독일민족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차대전의 결과를 감안하여 통일독일은 반드시 유럽통합속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통일독일의 군사적 지위에 관하여는 의견차이가 있었다.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은 통일독

일이 NATO가맹국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소련은 독일의 중립성을 고집하였다.

그러나 가장 획기적인 것은 7월초순 콜 수상이 코우카서스에서 고르바초프를 만나 독일통일에 대한 최종적 약속을 받은 것이다.

첫째, 통일독일은 완전히 주권을 회복받는다.

둘째, 통일독일은 NATO가맹국이 된다.

나아가 동독주둔 소련군은 1994년까지 완전히 철수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 다른 한 문제는 오더 나이세 국경인정이었다. 3차 2+4 파리회담에서 4전승국은 4전승국의 “독일에 대한 책임은 전부 해소한다”고 합의를 보고 “오더나이세”를 독일과 폴란드의 국경으로서 독일측은 승인함으로써 사실상 “통일의 외적 측면”은 종료되었다. 나아가 9월 12일 뉴욕에서 있을 제4차 2+4회담은 지금까지의 합의를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함으로써 그 과제를 끝낼 것이다. 그리고 오더나이세 국경에 관하여는 2+4 회담에 처음으로 참석한 폴란드 외장 스쿠비스쩍스키는 대단한 만족감을 표명하면서 머지 않는 장래에 국경조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11월 19일 파리에서 거행될 헬싱키 체제회담에서도 다시 한번 2+4 회담 결과를 확인할 것이다.

흔히들 소련의 양보이유를 묻는다. 왜 소련은 그렇게도 빨리 독일통일의 “외적 측면”을 해결하는데 기여하였을까? 물론 정치적 이유로서는 Perestrojka를 들 수 있겠으나 더욱 큰 수궁이 가는 이유는 “소련 국내경제사정의 가속적인 악화”라고 볼 수 있다. “독일인이 바쁜 것이 고르바초프에게는 유리하다. 오래동안 계산할 필요없이 수표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서독이 소련에게 얼마나 큰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지 그리고 할 것인지 미지수이다. 여하간 서독은 여러 형태의 지불 의무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우선 동독의 소련에 대한 지불의무, 무역협약에 의한 상품수출의무, 서독자신의 제차관, 동독에 주둔하는 소련군의 재직업교육, 주택건설 등등의 부담을 전부 맡았고, 이외 기술원조·공여 등도 추가하면 서독과 앞으로 통일독일이 소련에게 “지불할 금액”은 막대하다고 보며, 또 폴란드에 공여할 차관 및 무상원조는 어느정도인지 정확한 숫자를 얻을 수 없다.

여하튼 통일의 ‘외적 측면’의 급속한 체결이 가능하였다는 사실은 서독이 그간 서방통합을 통하여 서구제국의 친밀한 우호국가가 되었으며, 나아가서는 동구국가에게 가장 중요한 경제파트너로서 역할 해 왔던 것이 그 촉진요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2부 남북한 통일정책에 주는 시사점

1990년 10월 3일 동독이 서독에 병합(Beitritt) 됨으로서 독일은 사실상 통일을 이룩했다. 같은 분단국가인 한국의 개천절날 동·서독은 새 「개천」을 했으나 남북한의 새개천은 아직도 이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역사적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동·서독의 무혈통일 혁명은 남북한이 통일 과업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배우고 따라야 할 많은 시사점과 교훈을 그리고 미리 예방하고 예비해야 할 숭한 난관과 난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을 우리보다 먼저 이룩한 앞서가는 독일에의 부러움 그리고 뒤쫓아 가는 부끄러움을 우리는 통일독일이 지금 겪고 치르고 있는 온갖 비용과 손실을 최소화하고 통일이 가져다 준 이득과 효과를 최대화 할수 있다는, 해야한다는 이른바 “후발자의 이득”을 십분 발휘하는데서 — 즉 『자괴』를 『자위』로 지양·승화시키는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1. 본질적인 차원

(1) 상대적 불변요인

가. 영토 및 국경문제

영토, 궁극적으로 나라도 불변요인일 수 없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변화가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영토 그리고 영토를 확정하는 국경이다.

영토의 경우 독일은 과거역사는 따지지 않더라도 2차대전을 전후해서도 많은 변동이 있었다. 1945년 대전뒤 독일이 4분단되고, 그리고 독일제3국의 수도였던 베르린 역시 4분단 되었다. 소련군 주둔지역인 동독, 미, 영, 프랑스군 점령지역인 서독의 영토는 1945년 4분단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면 동독이 107,870km 이고 서독이 247,954km 이다. 즉 서독이 동독보다 2.3배가 된다.

한반도의 경우는 1945년 4분단이 아니고 2분단된 것이다. 38선을 경계선으로 했을때 남한은 93,364km 이고 북한은 122,391km였으며, 남쪽이 4,866km 을 전쟁으로 더 얻은 것으로 보이고 북한은 그만큼 (4,815km, 똑같은 숫자가 아닌 것은 의문)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서독과는 달리 오히려 북한이 남한의 1.2배가 된다. 1988년 Encyclopaedia Britannica Year Book 자료에 의하면 동독의 총면적은 108,333km 이고 서독의 총면적은 248,717km 로 동·서독이 약간 커진 것으로 기록되고 있으나 큰 변동은 없다. 같은 자료로 보면, 북

한의 총면적은 122,400km 이고, 남한은 99,143km 으로 역시 약간의 변동이 있을 뿐이다.

동·서독의 경우는 통일실현과정에서 영토문제가 하나의 큰 잠재적, 현재적 이슈로 등장하여 이른바 국제적 차원에서의 2+4(동·서독 및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형 협상과정에 폴란드가 옵서버자격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전후 폴란드에 흡수된 이른바 Oder-Neisse 강(전후 포츠담 합의에 의해 1951년 Zgorzelec조약으로 확정됨)과 체코슬로바키아와의 변경등을 「불가침」조약이 아닌 영토불변경, 불침해(inviolability) 라는 개념으로 명문화한 1990년 8월 31일 GERMAN UNIFICATION TREATY(독일통일조약)에 동·서독이 조인함으로써 일단락을 지었다. 남북한의 경우 통일전 또는 통일후 또는 통일과정에서(필자의 생각으로는 통일후) 역시 북한이 체결한 중국과의 국경문제, 소련과의 국경문제가 거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백두산 문제, 나아가서는 연변문제등도 충분히 거론될 소지를 안고 있다. 물론 현대기술, 과학, 통신, 교통, 통상 발달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국가변경」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적, 기술적 차원에서 재조정되어야 하며 이는 남북한 통일에 있어서 잠재적 문제임이 상기될 필요가 있다.

나. 인구

독일의 인구는 2차대전전인 1937년 통계에 의하면 6천 700만이었으나 전쟁직후인 1946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200만이 줄어든 6천 500만이었다. 그 가운데 동독이 1,700만, 서독이 4,400만이었다. 분단 당시 서독은 동독이구의 2.5배이었다. 동독의 인구는 1950년에도

1,700만, 1960년엔 오히려 줄어들어 1,600만이었고 1990년 현재에도 1,600만으로 그동안 거의 늘지도 줄지도 않고 1,600만명선을 유지해 온 것이다. 그러나 서독은 1950년에 5,000만, 1960년에는 5,300만, 1990년 현재는 6천 100만으로 그동안 꼭 동독인구수인 1,700만명이 증가한 것이다. 즉 그동안 인구가 서독은 38%나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분단직후 동·서독은 서독인구가 동독의 2.5배이었으나 1990년 통독당시는 서독이 동독의 4배가 된 것이다.

남북한의 경우 2차대전전인 1937년 2,100만이 , 분단뒤 첫통계자료인 1947년의 경우 남한이 1,900만으로 북한통계는 없으나 1947년 전한국인구인 2,700만에서 남한인구를 뺀 숫자를 북한인구로 추정한다면 1947년 북한인구는 800만이 된다.

1948년엔 전한국인구가 2,820만이고 남한인구가 2,020만이므로 북한인구는 800만이 된다. UN통계자료가 북한인구를 추산한 것이 1960년으로 그때 북한인구를 825만으로 보았다. 따라서 1948년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남한인구는 북한인구의 2.5배였다. 1987년 기준으로 남한인구는 4,200만, 북한인구는 2,100만으로, 남한은 2배가 늘었고 북한은 2.6배가 늘었다. 그러므로 현재도 남한인구는 북한인구의 2배가 된다. 따라서 동·서독과는 달리 남북한인구는 지난 45년 동안 모두 2배로 늘어났으나 상대적 비율엔 큰 변화가 없다. 물론 북한인구 증가율이 남한을 훨씬 능가하고있는 추세가 주목된다. 북한인구는 29년마다 배가하는 추세이고 남한은 46년마다 배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서기 2,000년이면 남한은 4,990만, 북한은 2,816만으로 추산된다. 또 하나 특기해야 할 사항은 아래표가 보여주는 바와같이 서독인구연령분포는 선진국형으로 15세미만이 적고 고령화현상이 두드러진 반면, 한국은 30세미만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직도 전형적인 후진국형인 것이 지적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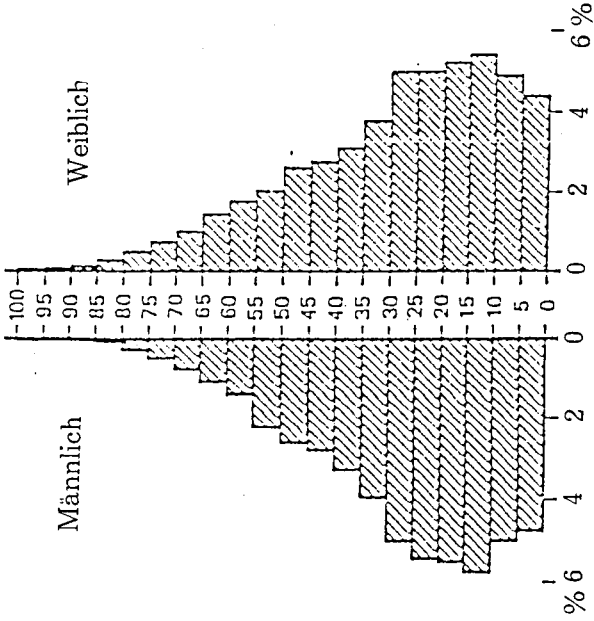
ALTERSAUFBAU DER BEVÖLKERUNG DER REPUBLIK
KOREA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ltersgruppe in % der Bevölkerung

REPUBLIK KOREA

Stand: 1.11.1985¹⁾ 40,47 Mi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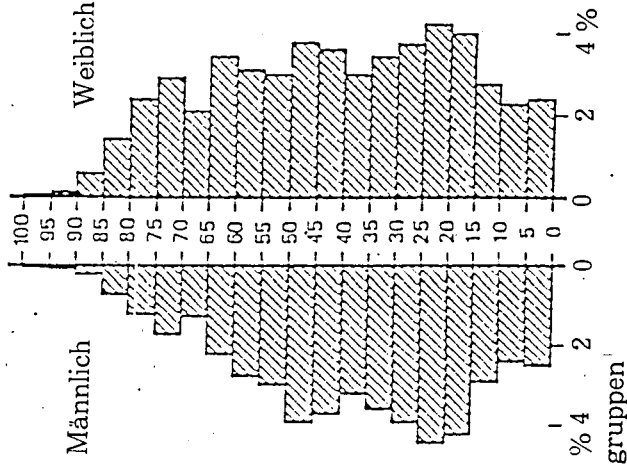
Alter von...bis unter...Jahren



BUNDESREPUBLIK DEUTSCHLAND

Stand: 31.12.1985; 61,02 Mill.

Alter von...bis unter...Jahren



Maßstab bezogen auf Altersgruppen¹⁾

von jeweils 5 Jahren

1) Ergebnis der Volkszählung

Statistisches Bundesamt 87 1062.

【 1985년 기준 대한, 서독 인구연령별 분포상황 】

【독일, 한국 인구 및 영토비교, 1937 - 1948】

면적단위: km²

	조사년도	인 구	1937	1947	1948	국토면적	인구밀도
전 한국	1944	25,120,174	21,528	27,700	28,200	220,840	128
남 한	1949	20,188,641		19,764	20,200	93,634	216
북 한							
전 독일	1946	65,150,932	67,831		67,346	353,436	191
베를린	1946	3,199,938	4,284		3,279	890	
서베를린				3,224			
동 독	1946	17,313,734				107,173	
서 독	1946	44,637,720		45,343	46,749	245,373	191

자료: 1949년, 1955년 UN Statistical Yearbook 통계자료에 근거해서 작성한 것임.

【독일, 한국 인구 및 영토비교, 1953, 1954, 1960】

	인구조사년도	인구	1953	1954	1960	국토면적	인구밀도	현재인구
남한	1960	24,994,117	21,440	21,687	21,687	98,500* [*]	250	42,082('87)
북한						8,250*	67	21,390('87)
동독	1950	17,199,098	17,001		16,164	107,870	150	16,640('87)
서독	1956	50,963,500	49,153	49,516	53,373	247,954	215	61,136('87)
동베를린	1950	1,189,074	1,177		1,077	403	2,672	1,215('86)
서베를린	1956	2,223,777	2,233		2,204	481	4,582	1,878('87)

* 비공식추계

** 1949년 UN자료에는 전한국 국토면적을 220,840㎢로 기록했으나 1955년 UN자료는 220,792㎢에서 48㎢ 줄어든 것으로 적고 있다. 전국토면적은 줄었으나 남한 면적은

93,634㎢에서 98,500㎢로 늘어난 것은 한국전쟁뒤 38선을 휴전선(DMZ)이 대체하는데서 온 것으로 사료된다.

자료:1955년 및 1966년 UN Statistical Yearbook에서 자료를 모아 작성함.

다. 역사, 문화적 배경

독일의 역사는 6세기에서 9세기까지, 특히 9세기 중반 이른바 케롤링기안 제국의 패망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케롤링기안 제국의 살아망(742—814)의 계승자인 루이스1세(파이우스)의 아들인 루이스(Louis the German)가 825년 바바리아를 지배한 것에서 독일국가의 기원을 찾는다. 그러나 독일민족 문화권은 수시로 변해왔다. 독일민족의 새로운 부흥은 18세기 중순부터 비엔나를 중심으로 오스트리아 제국을 500년 가까이 지배해온(1276—1740) 그리고 한때는 스페인(1516—1700)까지도 흡수 통치하던 독일계 합스부르크(Hapsburg) 왕가에 도전하는 또 하나의 독일계 왕가인 호헨졸레른(Hohenzollern)의 부상이다. 브란데블그(1415—1919), 프러시아(1701—1871), 그리고 프러시아의 제2제국(The Second Reich, 1871—1918), 이른바 독일 바이말공화국(1919—1933), 히틀러의 독일 제3제국(The Third Reich, 1933—1945)으로 이어진다. 특히 실레시아(Silesia) 통치관할 분쟁으로 프러시아의 프레데릭 대왕(Frederick The Great)이 시작한 오스트리아와의 7년전쟁(1756—1763)의 승리로 프러시아는 전쟁 후 유럽대국으로 등장한다. 프러시아의 제2도전은 빌헬름1세가 비스말크(Otto von Bismarck)를 1862년 제상으로 임명, 보수강경정책을 채택한데서 부터였다. 이른바 오스트리아와의 1866년 7월전쟁(June-August, 1866)에서 오스트리아를 패배시키고 북독일연방을 창설함으로써 프러시아가 그 주도적 지배세력으로 등장한다. 프러시아가 주도한 독일연방창설은 프랑스에의 큰 위협이 된다. 스페인 왕위계승의 피제로 프러시아와 프랑스간에 마찰이 생기고 이는 1870년 7월

19일 프랑스 나폴레옹3세와 프러시아 빌헬름1세간의 정면 무력충돌로 치닫는다. 이 전쟁에서 프러시아는 1871년 1월 28일 프랑스군을 격파, 항복시키고 같은해 이른바 프랑크푸르트조약을 체결, 프랑스로부터 알사스-로레인(Alsace-Lorraine)지역을 점유하게 된다. 1871년 1월 18일 프랑스의 패전과 함께 빌헬름1세는 남독일계까지를 포함한 제2제국(4개의 왕국, 5개의 대공국, 12개의 공국과 왕자국, 3개의 자유시-Hamburg, Lübeck, Bremen)창설을 선포한다. (제1제국은 보통 신성로마제국기, 962-1802를 뜻한다) 따라서 독일민족의 대통일을 보통 1871년이 그 첫기원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독일 제2제국은 빌헬름2세하에서 세계제1차대전의 패자가 되었고 1차대전을 종결짓는 1919년 5월 베르사이유조약은 제2제국이 얻어낸 영토의 대부분을 다시 반환하는 굴욕적인 것이었다. 이 조약은 알사스-로레인을 다시 프랑스에, 북시레시아와 대부분의 포센(Posen) 그리고 서프러시아 지역은 폴란드에, 북슐레스비그(North Schleswig)는 독립된 자유시로, 메멜(Memel)지역은 리투아니아에 반환하고 오스트리아와 프러시아의 통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 라인강 좌우의 50km 지역은 영구 비무장지대로 만들었다. 더구나 풍요한 산업지대인 사르(Saar)는 15년간 프랑스의 관장하에 국제연맹이 통치하기로 되어 있었다. 또 전독일군은 장교와 사병을 포함해서 10만으로 제한했다. 또 베르사이유조약 제231조는 독일을 제1차대전의 침략자로 규정하고 모든 연합국의 손실에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이 굴욕적인 조약을 거부한 샤이드만(Scheidmann)정부는 붕괴되고 바우워(Gustav Bauer)정부가 들어서 1919년 6월 28일이 조약을 받아 들인다. 1920년 3월 다시 뮐러(Herman Muller)정부

가 들어섰고 1920년 6월 선거를 거쳐 중도파의 페렌바하(Konstantin Fehrenbach)정부가 출범했다. 1921년 4월 27일 연합국보상위원회는 132,000,000,000마르크를 금으로 보상하도록 결정, 요구한다. 이에 항의, 페렌바하정부가 총사직하고 빌트(Karl Joseph Wirth)정부가 들어선다. 1923년 1월 프랑스군은 독일목재운동의 기술적 차원에서 시비를 걸고 독일 룰(Ruhr)지역을 점령한다. 빌트정부는 1922년 4월 소련과 별도로 독·소 우호조약, 이른바 라팔로(Rapallo)조약에 서명하는데 성공한다. 이로서 양국은 서로간의 청구권을 포기한다. 한편 독일경제는 급속도로 악화, 마르크의 가치도 땅에 떨어진다. 1922년 11월 빌트정부는 중도파, 인민당, 민주파 연립정부인 쿠노(Wilhelm Cuno)정부에 의해 대체된다.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급진세력들이 부상하기 시작한다. 공산권세력은 Saxony, Thuringia, Hamburg 지역에서,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는 뮌히히(Munich)에서 강세를 보인다. 함부르크에서는 1923년 10월 공산당 봉기가 일어난다. 같은해 11월 8-9일엔 뮌히히에서 히틀러에 의한 이른바 맥주홀 쿠데타(the Beer Hall patsch)가 불발한다.

1925년 2월 힌덴부르크(Hindenburg)를 대통령으로 선출한다. 한편 쿠노정부는 슈트레세만(Stresemann)정부에 의해 유지되다가 다시 1925년 1월 마르크스(Wilhelm Marx)중도세력이, 1928년 선거에서 다시 사민당세력을 엮은 뮐러(Herman Muller)정부가 들어선다. 그러나 1929년 10월 뉴욕증권파동→경제공황은 나치세력의 급성장과 독세를 부추켰다.

1932년 7월 선거에서는 나치가 제국의회(Reichstag)에서 230석을 획득했다. 따라서 파펜(Franz von Papen)정부를 해체하고 긴급명령권에 의한 통치를 일시적이거나 실시한다. 그뒤 1933년 1월30일엔

히틀러가 제국수상으로 선출되어 이른바 독일에서의 나치시대—제3 제국(1933—1945)이 출범한다. 1932년 2월 27일 제국의회 의사당 방화사건이 공산당의 집권모의로 비롯된 것이라는 구실로 긴급대권을 히틀러가 얻게 된다. 또 히틀러는 제국의회나 제국대통령과는 독립적으로 긴급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이른바 발동권(The Enabling Act)을 찬성441, 반대94로 통과, 히틀러는 사실상 제3제국의 헌정독재자로 부상한다. 1934년 8월 2일 힌덴버그대통령의 사망으로 히틀러는 수상직과 대통령직을 합쳐서 8월19일 통제된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 및 국가원수(Fuhrer und Reichs Kanzler)가 된다. 히틀러는 또한 유태인 학대를 시작한다. 1933년 4월부터는 유태인이 정부기관원, 대학등 공직으로부터 배제된다. 1935년 9월 뉴런버그법은 유태인과 독일인의 결혼을 불법화한다. 히틀러의 SS(Schutzstaffel)은 힘러(Himmler)의 판장아래 유태인학대 및 재산몰수 등에 앞장선다. 한편 1933년 10월 히틀러는 국제연맹에서 탈퇴한다. 1936년엔 1925년 12월, Alsace-Lorraine, 독일과 프랑스와 벨지움과의 국경은 무력에 의해 변경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른바 로카르노협약(Locarno Pact)을 무효화시키고 라인지역(The Rhine Land)을 재무장시킨다.

히틀러는 이태리의 파시스트 뭇소리니(Benito Mussolini)정권 및 일본군국주의 정권과 긴밀히 제휴하기 시작한다. 1938년 3월 12일엔 독일나치군이 오스트리아를 침공, 독일에 합병시킨다.

위에서 간략히 살펴본 독일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한국의 그것은 너무나도 본질적으로 다르다.

먼저 역사가 길고 짧다는 차이가 두드러진다. 설령 통일의 역사를 독일의 제1제국 신성로마제국(962—1802)까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도 한국의 신라통일기(668—935)에 비하면 독일통일은 300년이나 짧다. 그러나 보통 통일독일을 비스마르크의 제2제국기(1871—1918) 출범에서 찾는 것이 상례이므로 그렇게 보면 통일독일의 역사는 통일한국의 역사보다 너무나도 짧은 것이다. 통일독일이 2차대전전까지 겨우 74년이라면 우리는 신라통일기(668—935) 267년, 고려통일기(936—1392) 456년, 이조통일기(1392—1910) 518년을 모두 더하면 통일조국의 역사는 무려 1241년이나 된다. 독일민족에게 「분단」이 그들 민족사의 대부분을 메꾸었다면 한국민족에게 「통일」이 한국민족사의 대종을 이루어왔다고 간단히 말할 수 있겠다.

더구나 독일민족은 세계 제1차대전, 제2차대전의 주역인 동시에 양차대전의 패자로서 줄곧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부상하여 그 위상이 오늘에 까지 지속되고 있다. “베르린을 가지면 독일을, 독일을 가지면 유럽을 갖게 된다.”는 레닌의 경구나 1944년 독일이 낳은 대작가 토마스 만이 “나는 「독일의 유럽」보다는 「유럽의 독일」이 되기를 바란다”는 경구도 모두가 이러한 독일의 유럽속에서의 상대적인 우위를 간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소련,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이라는 해양강대국 사이에 낀 상대적으로 「열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지정학적 군사안보적 배경에 있다는 것이 대조적이다. 이는 독일이 다른 유럽나라들에 군사, 안보적 위협의 대상으로 아직도 잠재적이거나 남아 있다는 것이고 한국의 경우는 이들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이들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들에게 결코 큰 위협이 될수 없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소련, 중국의 대륙세력과 연계될때 일본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칼)이 되고, 일본이나 소련과 제휴, 동맹관계를 맺어 중국의 머리를 치는 망치가 될수는 있을지언정 한반도 그 자체가 이들 강대국에

안보전략차원의 위협이 될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적어도 동·서독은 전후 나름대로 정치적 안정이 그 근본기조를 이루어 왔다는 것이다. 동독은 1989년 공산정권이 파죽지세로 붕괴, 몰락하기 전까지는 집권공산당정권들의 공통적인 일당독재하에 정치안정기를 지속해왔다. 반면 서독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정치적 안정을 이끌어가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는 마치 1차대전후의 독일 바이말공화국에 못지않게, 아니면 훨씬 그것을 능가하는 극도의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5년 헌정사에서 여섯개의 공화국, 9번의 헌법개정, 두차례에 걸친 쿠데타, 12번에 달하는 위수령, 계엄령 등이 남한정치의 불안정성, 불가예측성 즉 정치빈곤-정치후진성을 잘 입증한다. 북한은 동독보다도 훨씬 강한 일당일인독재, 그리고 이미 이순간에도 김일성-김정일부자 후계체제가 구축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또 문화적으로도 독일은 기독교-카톨릭 및 개신교-종교권에 속하고 한국은 불교, 유교문화권에 속한다는 차이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서 보면 동·서독과 남북한은 본질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다. 이는 통일된 독일과 비교하여 분단된 한국이 앞으로 통일실현과정에서 항상 유념해야할 역사·문화·지정학적 차원의 두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상대적 불변 요인임이 강조되어야 하겠다.

(2) 상대적 가변요인

가. 경제규모

상대적 가변요인(변수)으로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경제력이라고 볼수있다. 한나라의 총경제규모 또는 경제력을 측정하는 개념이나 기준이 공산권국가와 비공산권국가간에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같은 기준으로 환원 환산하는 과정에도 여러가지 문제점과 제약점이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GNP를 서독이나 남한이 사용하는 반면, 동독과 북한은 사용하지 않는다. 더구나 GNP를 동독의 Ostmark나 북한의 원에서 미달러로 환산하는 과정에도 엄청난 왜곡이 뒤따를 수 있다. 보기를 들면 동독경제규모나 경제력은 과장된 환산·환원의 GNP숫자보다도 실제 경제력이나 경제규모가 독일 통합후 들춰본 결과 훨씬 작고, 낙후하다는 것이 판명되고 있다. World Development Report에서도 1980년 후반부터는 아예 동독, 북한, 소련 등 공산권국가 통계는 빼버리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통계숫자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으나 몇가지 분명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강조되어야 하겠다. 하나는 서독의 경제규모가 동독의 그것에 비해 10배가 넘는다는 사실이다. 1인당 국민소득도 기준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지만 대충 절반인 것으로 보아졌으나 실제로는 동독이 서독의 1/3이 못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삶의 질이란 측면에서 보면 동독은 서독에 비해 너무나 낙후되고 후진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동독이 공산권 국가 가운데 “가장 잘사는 나라”, “가장 모범적인 사회주의국가”라는 관념에 이제까지 사로 잡혀온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의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공산주의 국가의 정책과 선전의 주무기라고 할수 있는 평등원칙, 사회보장제도(연금)등에서도 서독이 동독을 훨씬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개인생활의 필수품목(감자, 빵, 쇠고기, 어린이 신발등)은 그 품목의 저질성을 제외하면 동독이 서독에 비해 훨씬 싸다. 그러나 칼라TV, 자동세탁기, 전화, 자동차 등에서 서독이 월등히 앞서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동독의 임금 그리고 연금자의 수가 서독의 1/3선이라는 것은 사회보장제도, 복지후생, 노후대책정책에 있어서도 서독이 동독을 앞서가고 있었다는 것을 실증해 준다.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남북한도 경제규모에 있어서 남한이 북한 GNP의 10배, 1인당 국민소득도 북한에 비해 5배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것이 거의 사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아마 동독이 서독에 통합·흡수된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북한도 위의 공식적 통계 숫자보다도 훨씬 후진·낙후된 경제력과 경제규모로 판명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남한이 서독과 다른 것은 바로 서독의 임금, 연금, 실업자정책, 전반적인 복지, 후생, 사회보장정책이다.

달리 표현하면 서독은 동독을 흡수·통합하기까지 공산권국가들이 주장하는 최고·최선의 정책선전무기인 사회복지정책과 제도를 동독의 그것보다 훨씬 앞서서 발전 성장시켜온 것이다. 만약 남한이 이러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이제까지 소홀히 해왔다면 이제부터라고 남한내에서의 경제성장에 버금하는 사회복지정책과 제도를 확실히 발전·성장시키는 작업이 통일에의 가장 급선무의 하나가 된다. 「통일」이 입씨름, 말싸움이 아니고 실제로 두개의 각기 다른 체제와 정책 그리고 지도자의 정책집행이 지난 40여년동안 어떤 실적(Performance)을 쌓아온 것인가의 경쟁이

【동서독 경제 구조 비교】

	동 독	서 독
인 구 (1950)	18.4 (백만)	50.0 (백만)
인 구 (1988)	16.7 (백만)	61.7 (백만)
15-65세 근로 인구	11.2 (백만)	42.8 (백만)
65세 이상 년금자	2.2 (백만)	9.4 (백만)
인구비 년금자	13.2 %	15.2 %
평균 수 명 (남)	69 년	70 년
(여)	75 년	77 년
출 생 율 (1987)	1.7	1.3
취 업 자 (1988) (군인포함)	8.6 (백만)	29.7 (백만)
인구비 취업률	51.5 (%)	48.1 (%)
남 자	55.1 (%)	60.7 (%)
여 자	48.3 (%)	37.0 (%)
산업별 취업률 (%)		
농 업	12 (%)	5 (%)
산 업	48 (%)	41 (%)
서비스	40 (%)	54 (%)
1 인 당 G D P	\$ 9,300	\$ 19,500

자료 : Deutsche Bank, The Economist, June 30, 1990, p.9.

【동서독 생활비교】

	동 독	서 독
가정생활용구(가호당 %)		
자 동 차	52	97
모 터 사 이 클	18	8
냉 동 기	43	77
세 탁 기 (자동)	99 / 10	99 / 76
텔레비전(천연색)	96 / 52	98 / 94
전 화	7	98
가족평균생활공간(평방 square)	27.0	35.5
보건(1983)		
의사 일인당 인구	472	431
병 실 당 인구	97	89
가호당 소득(1988)		
산업에서의 월평균 소득	\$ 735	\$ 2207
가호당 년저축 (총 액)	11.5 M	186.3 DM
(일인당)	680 M	3,020 DM
(저축율)	7 %	13.9 %
가호당 자산 (총 액)	184 M	2,515 DM
(일인당)	11,000 M	40,700 DM
물가 (1988)		
감 자 (5 kg)	0.85 (ostm)	4.94 DM
빵 (1 kg)	0.52	3.17
쇠고기 (1 kg)	9.80	17.19
커 피 (1 kg)	70.00	17.86
어린이 신발 한켄레	18.50	60.60
전차표 1회	0.20	2.07
세탁기	2,300	981
냉장고	1,425	559
천연색 TV	4,900	1,539
월 세 *	75	411
전기세 (1kW)	0.08	0.52

자료 : Deutsche Bank, The Economist, June 30, 1990, p.11.

* 방 두개, 부엌, 목욕실, 중앙난방 기준

라면, 이러한 실적위주경쟁에서 서독은 동독을 K.O했다면 남한은 아직도 그 실적경쟁에서 미흡·미달한 것들이 산적해 있으므로 시간과 자산을 이러한 실적 쌓아올리기에 돌려야지 추상적인 통일논의에만 낭비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서독은 통일이전까지 서구민주주의 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앞서가는 사회복지정책을 실현·실행해왔으며 그 주창자로서는 서독 초대 아데나워 정권하의 경제상이었고 아데나워를 이어 제2대 총리를 역임한 Ludwig Erhard를 손꼽을 수 있다. 그가 서독경제·사회정책의 기초가 되는 청사진을 1957년 출판(Prosperity Borall)한 것이 지적될 수 있다. 통독후 콜수상이 10월 4일 “맑스는 죽었고 에어하르트는 살아 있다.” (Marx is dead, Ludwig Erhard is alive)라고 역설한 것도 에어하르트의 이른바 “사회시장제도” (Social Market)가 서독에서 성공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겠다.

사회시장경제개념은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와 사유기업에 맡겨 시장경제력이 주축을 이루도록 하고 불필요한 정부(국가)간섭을 배제하도록 의도적인 노력을 한다. 따라서 국가의 역할(기능)은 시장요인(Market Forces)이 작동하고 자본의 과잉축적을 막는 경쟁의 일탈과 왜곡현상(Distortions)을 막으며, 무엇보다도 시장경제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사회불평등을 축소·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을 그 주요 골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951년에 노동자참여법(Law on Worker Participation)이 제정되어 석탄, 철강산업노동자들에 한해서는 회사중역과 동등대표권(Equal De Presentation)을 인정했다. 기타 산업에서의 노동자들은 1952년 회사법에 의해 1/3대표권을 갖게 되었다. 1957년에는 연금법안이 통과되어 소득증가와 함께 연금도 증가할 수 있는 조

[남. 북한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한 국	북 한
인 구	만 명	4,238	2,138
G N P	억달러	2,101	211
1 인 당 G N P	달 러	4,968	987
경 제 성 장 륜	%	6.7	2.4
재 정 규 모	억달러	328.4	149.7
군 사 비	억달러	91.8	44.9
수 출	억달러	614.1	19.5
수 입	억달러	568.1	28.5
외 채	억달러	294	67.8
발전 설 비 용 량	만kW	2,099.7	690.2
석 탄	만t	2,078.5	4,330
철 강	만t	2,220.6	594
비 철 금 속	만t	77	49.3
원 유 도 입 량	만t	4,043.7	260
시 멘 트	만t	3,625	1,178
화 학 비 료	만t	417.3	351.4
직 물	억㎡	52.6	6.8
곡 물	만t	716	548.2
수 산 물	만t	331.9	218.9
철 도	km	6,437	5,024
도 로	천km	56.5	23

※ 한국은 경제기획원, 북한은 국토통일원 (89년말 현재) 통계.

항이 삽입되었다. 또 주 40시간 노동의 점진적 추진과 주5일 노동실천도 이루어졌다. 1976년 3월에 개정된 노동자참여법안에서는 석탄철강회사뿐만 아니라 대규모 회사에서의 동등대표권을 삽입하고 있으나 분쟁상태에서의 주주(Share Holder)의 주도권도 동시에 인정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나. 정치체제

2차대전후 서독은 경제사회보장제도에서의 성공에 못지않게 자유민주주정치체제와 정치안정을 이룩하는데 성공했다.

1945년 6월 10일 점령국인 소련은 독일점령지역에서 정당·노조 활동을 허용했고 이에 뒤따라 미국과 영국도 점령지역에서 이를 허용했다. 그해 가을 프랑스도 점령지역에서의 정당·노조 활동을 허락했다. 독일 삼주(Lander)에서는 1946년 말이면 삼주의회 창설을 위한 삼주헌법이 제정된다. (Bavaria, Hessen, Baden-Wuittenburg)

1948년 7월 1일에는는독일 삼주정부지사들에게 서방3국 군사총독들이 이른바 “프랑크푸르트 도큐먼트”(Frankfurt Documents)를 준다. 그 주요골자는 9월 1일까지 의회위원회(Parliamentary Council)를 소집하고, 이 의회위원회는 삼주의회의원으로 구성하며, 서방3국 점령지역을 포괄하는 헌법을 제정할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 헌법이 제정된 다음 3국의 승인을 받고 국민투표로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였다. 또 하나 주요골자는 “긴급 상황이 발발한 경우엔 이 헌법과 점령법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총독들이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러한 서방3국 군총독의 제안에 독일 삼부지사들이 1주일뒤

Koblenz에 가까운 Rittstuz에 모여 독일연방위원회소집과 독일헌법제정을 전독일을 포함하여 타결하는 필요조건과 독일 주권의 충분조건이 회복될 때까지 지연하기로 결의한다. 이를 서방 3군총독은 거부한다. 이에 Rudeshlim의 근처 Jagdschlob Niderwald에서 삼주지사들이 다시 모여 의회정부를 수립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그 조건부로 헌법전문에 서독정부는 기본법(Basic Law)에 의해 수립되며 이것은 과도기동안의 국가생활의 새질서를 제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시할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1948년 8월 주지사들은 헌법초안전문인들을 Herrenchiemsee에 소집하여 이를 작성했다. 1948년 9월 1일 Bonn에서 의회위원회가 소집되었는데, 65인의 구성원은 CDU/CSU 27명, SPD 27명, FDP 5명, the Deutsche Partei, the KPD, the Centre Party 각각 2명 등이었고 또한 옵서버자격으로 5명의 베를린대표가 참석했다. 기본법은 1949년 5월8일 의회위원회를 통과했다. (53대 12, 반대 12표는 CSU, DP, KPD, the Centre에서 나왔다) 이 기본법을 5월 12일 3국 군총독이 승인하고 Cander의회가 곧 뒤따라 비준한다. (바바리아 Landtsrg는 너무나 중앙집권적이라는 것을 이유로 비준을 거부했다) 1949년 5월 23일 기본법이 정식으로 공포된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보장하고 전후 서독의 민주발전과 안정을 가져온 기본법이 실천된지 41년만에 서독은 동독의 흡수통합에 성공한 것이다. 한편 소련은 동독에 독일민주공화국(DDR)을 같은해 10월 7일 출범시켰다.

기본법 공포와 함께 1949년 8월 14일 첫 연방의회(Bundestag) 선거가 열렸다. 이 선거에서 CDU와 CSU가 29.2%, FDP는 11.9%를 얻는다. Konrad Adenaul는 초대연방수상에, Heuss는 초대연방대통령에 당선 서독연방정부가 출범한다. 1953년 가을 Bundestag 선

거에서는 아테나워 정부의 입지가 더욱 공공히 되고 1955년엔 서독이 NATO에 정식 가입한다. 따라서 서독군(Bundeswehn)이 재등장한다. 1957년 1월 1일자로 Sarr지역이 서독의 관할로 복원되고 1960년 서독과 프랑스간 친선조약이 체결된다. 그러나 1961년 8월 13일 동독과 소련의 베를린장벽 구축으로 냉전은 훨씬 심화되는 국면에 이르렀다.

한편 1951년 4월 프랑스, 이태리, 벨지움, 룩셈블크, 네델란드, 독일(서독)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를 결성한다. 또 서독재무상이 이들 6개국의 통합과정의 균부일환으로 시작된다. 1952년 5월 26일 서방3국은 서독의 주권을 보장하는 조약을 맺는다. 그 다음날 유럽국방공동체(the European Defence Community)를 통괄하는 조약이 체결된다. 그러나 1954년 8월 30일 프랑스국회는 유럽공동체안을 거부한다. 새로운 조약이 곧 수정·발족해서 1954년 10월 23일 파리에서 조인되고 서독은 이 NATO 회원국으로 허락된다. 1955년 5월 5일 서독은 주권국가로 명실공히 등장한다. (연합국은 독일과 베를린에서 특별한 권한만을 유보하는 것으로 그 권한이 사실상 상실한다)

1957년 3월 1일엔 유럽공동체(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가 창설, 서독은 그 회원국이 된다. 한편 1954년 10월 파리에서의 NATO조약에 맞서서 소련은 1955년 Warsaw Pact를 체결한다.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소련 소유 독일전쟁 포로석방 등을 빌미로 예외적으로 서독과 소련은 국교를 정상화한다. Hallstein Doctrine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면서 소련의 전독일 관련이라는 특수조건을 강조, 유일한 예외적 조치로 서독·소련 정상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서독은 1967년 루마니아 및 유고슬라비아와 정식수교를 수립함으로써

Hallstein Doctrine을 파기한다. 또 1967년 5월6일 서독수상 Kiesinger는 동독총리 Stoph와 공식서한을 교환한다. 1968년 5월엔 긴급권력령(the Emergency Power Act)을 연방의회 특선으로 통과시켜 기본법상의 연합국의 거부권과 군사 및 기타 긴급상황의 권한을 중지시킨다.

1969년 9월28일 서독 연방의회선거로 SPD의 Willy Brandt가 FDD와의 연정에 성공, 서독의 SPD수상으로 10월 21일 취임한다. 따라서 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는 현 통일독일의 기초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동방정책(Ostpolitik)을 추진한다. 1970년 8월 12일에 서독과 소련은 이른바 모스크조약(The Treaty Moscow)을 체결, 서로간의 불가침, 전후 국경인정을 골자로 하는 내용에 합의한다. 이는 그뒤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동독과의 조약에도 주요골자로 포함된다. 동·서독은 또한 동등한 지위를 상호 인정하고 1973년 9월 UN에 동시 가입한다.

이와관련 하나 강조되어야 할 것은 서독에서의 60년 중·후반 월남전쟁기간 동안의 청년저항(Youths Protest)운동의 심화다. 특히 대학생들은 낡은 대학구조, 열악한 학교연구 환경이라는 학원내적요인과 미국의 월남전개입, 제3세계의 독재정권등에 항의하는 외적요인이 결합, 데모와 시위가 잦아진다. 특히 이란의 샤(Shah Reza Pahlevi)가 서베를린 방문기간중인 1967년 6월 2일 시위하던 한 대학생이 경찰의 총에 맞아 쓰러지자 학생시위는 서독전역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 테러리즘이 또한 극심해진다. 1980년 10월 5일 연방의회에서는 SPD-FDP연립내각이 승리했으나 1982년에 이르러 예산안을 놓고 크게 이견을 노출, 9월 17일 SPD-FDP연립내각이 붕괴된다. 10월 1일 CDU/CSU와 FDP대연립내각이 성공, Kohl

내각이 출범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서독정치가 남한정치에 주는 시사점은 대단히 크고 많다.

첫째로 독일은 전형적인 연방국가(Federal state)인 반면, 남한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중앙집권적 또는 단일형국가(Unitary state)이다.

따라서 서독연방정부는 지방(삼주)정부가 먼저 세워지고 삼주(Land)정부에 의해서 연방정부(Bund)가 수립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는 중앙정부(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고 제헌헌법에 지방자치규정이 명시되었으나 실시되지 못했다. 제2공화국에 와서야 제2공화국 헌법(제92조2항)에 준해서 처음으로 시·읍·면 의회가 구성된 바 있다. 그후 제3공화국도 헌법 제7조 제3항에서 지방의회의 구성시기를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시·읍·면장의 주민 직접선거가 실시되지 못했다. 제4공화국에서는 헌법부칙(제10조)에서 지방의회구성을 통일이후로 미루어 사실상 지방자치제를 폐기시킨다. 제5공화국에서는 지방자치제를 다시 명시하고(제118조, 제119조) 부칙에서 지방의회 구성시기를(부칙제10조)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시되지 못했다. 제6공화국 현행헌법도 5공화국과 같고 다만 지방의회 구성시기조항(부칙제10조)은 삭제되었다. 아뭏든 오늘 이순간까지도 지방의회선거 나아가서는 지방자치는 제2공화국의 잠깐동안의 실시이외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요컨대 서독의 경우는 지방정부가 연방정부를 낳았다면 남한의 경우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출범을 헌법적으로는 약속을 했으나 아직까지도 낳지 못했다. 달리 표현하면 서독은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렸고 남한은 아직도 그 뿌리가 내리지 못한 과도기형이다. 더구나 현재와 같은 당수주도하의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 후보공천관행은 상향식 지

방주민 후보선출방식과는 정반대의 것으로 지방자치의 주목적과 상처·상반되는 반민주적 반지방자치의 표본이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후보나 지방의회의원후보를 뽑는 후보선정절차가 선행하지 않고 중앙당수 중심 「사근제」형식의 지방자치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반지방자치적이고 반민주적이며 오직 중앙당의 당수중심 핵심당원의 정치부패와 전횡만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꼴이 된다.

둘째로 서독은 양원제(BUNDESTAG, BUNDESRAT)이고 남한은 단원제(National Assembly)이다. 또 서독의 대통령은 재임이 허용된 5년 임기의 상징적 국가수반(서독기본법 54조)이다. 또 대통령은 독일연방하원의원(Bundestag)과 동독의 삼주정부 의회의원으로 구성된 연방대회(the Federal Convention)에서 토론없이 선출한다. 따라서 독일연방정부의 권력은 연방수상(the Federal Chancellor)과 그 내각이 장악하고 있다.(기본법 연방수상관계조항은 62조에서 69조까지)

그러나 남한의 경우는 전형적인 대통령중심제로 임기는 5년으로 재임할 수 없다. (70조) 그는 내치, 외교, 국방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대통령권한 규정은 헌법66조에서 85조까지 그리고 제88조 93조까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영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괄한다”(제86조1항)고 규정되어 독일연방공화국과는 대통령과 수상(총리)의 역할이 거의 정반대인 셈이다. 서독이 의원내각 책임제이고 남한은 대통령중심제라고 간단히 요약될 수 있다.

세째로 독일연방공화국은 지난 41년동안 정권의 평화적교체(집권기민당내 교체 3회를 거쳐 사민당정권 등장 사민당내 2회를 거쳐 다

시 기민당 연립내각)를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집권당이 반대당에 의해 교체되는 경우를 2회나 겪었다. 그러나 남한은 제6공화국에 와서야 최초로 정권의 평화적 교체를 이루었고 그나마 집권당내의 인물 교환이었다는 잠정성을 안고 있으며 아직도 집권당이 반대당에 의해 교체되는 민주적 정권교체행위는 경험하지 못한 상태다. 더구나 42년 헌정사에서 쿠데타 2회(1961년 5월 16일, 1979년 12월 12일), 헌법개정 9회, 계엄 및 위수령선포 12회, 1960년 4·19학생혁명, 1980년 5월 광주사건 등 정치적 불안정과 극도의 혼란이 주름잡아온 것이 대조적이다.

네째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서독의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Hagleeg와 Burton이 얘기하는 전형적인 국가통합형 엘리트(a Consensually Unified Elite)로 발전·성장해온 반면, 남한의 정치엘리트는 42년의 민주주의실험과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분열형 분단형 엘리트(Disunified on Divided Elite)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서독기본법은 지난 10월 3일 동독이 서독연방에 흡수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독일통일과정에서 이른바 헌법 제23조를 통일기준으로 삼자는 23조파와 새로 제정된 헌법에 의해 통일되어야 한다는 146조파로 통합이전에 한동안 논쟁이 분분했다. 서독연방헌법23조 전문은 다음과 같다.

“당분간 이 기본법은 Baden, Bavaria, Berlein, Hamburg, Hesse, Lower-Saxony, North Rhine-Westphalia, Rhineland-Palatinate, Schleswig-Holsteinn, Wuerttemberg-Baden, Wuerttemberg-Hohenzollen의 삼주민에게만 적용된다. 다른지역의 독일에도 그들의 수락(Accession)에 의해 이 기본법이 유효할 수 있다.”(1951년 5월4일 서독연방법에 의해 Baden, Wuerttemberg-Baden, Wuerttemberg-

Hohenzollern을 통합 Baden-Wuerttemberg가 생겨남, 1956년 12월 23일 연방법에 의해 Sarr지역이 연방에 흡수됨)

서독연방헌법 146조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이 기본법은 독일국민의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 채택된 헌법이 유효한 그날로 효력을 상실할 것이다.”

그러나 23조파가 이 논쟁에 승리, 지난 10월 3일 동독의 삼주들은 서독연방에 흡수형식으로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이 논쟁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흡수통합조항이 현행 남한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주목된다. 현행헌법(1987년 10월 29일 공포)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헌법상으로는 북한의 정권이나 실체가 무시된 것은 비현실적이고 또 앞으로 통합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도 큰 법적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지적될 수 있다. 더구나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한편으로는 한반도와 부속도서 전체의 영토권을 헌법에 명문화하고 있어 마치 법적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적 통일정책추구라고 명시하고 있어 영토문제가 미해결된 것처럼 되어있는 상호모순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문제가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 재조정되어야 할 것 같다. 참고로 북한의 1972년 12월 27일 공포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에는 영토권 조항이 없다. 다만 제5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초위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영토권 조항을 명문화하지 않은 대신 남한과 같이 「평화통일투쟁」을 명시하고 있다. 「평화통일」과 「투쟁」이라는 모순성이 실제 주장과 행동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적어도 헌법상으로는 북한은 남한과 같이 전한반도 영토권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지적될 수 있다.

다. 국제관계

서독은 1954년 10월 23일 NATO에, 동독은 1955년 5월 14일 발족된 Warsaw pact 회원국이 됨으로써 동서대결의 두 국제군사안보기구의 틀에 들어갔다. 마찬가지로 서독은 1957년 3월 25일 구주공동체(EEC)수립에 조인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역시 다국적 유럽경제협력기구의 틀에 들어갔다. 동독은 알바니아(탈퇴),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소련등 6개국 집단군사안보체제의 일원인 동시에, 또 서독의 EEC회원가입에 맞서 소련주도 경제협력기구인 Comecon 또는 Council for Economic Assistance, CMEA에 1950년 9월 가입했다(1949년 창설 당시 회원국은 소련,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위와 같이 동서독은 다국적 군사안보 및 경제협력체제의 틀에서 출범한 반면 남북한은 모두 다국적 기구가 아닌 쌍무협력 또는 양자간 동맹 틀을 갖추고 있다. 군사안보측면에서 남한의 1954년 한미상호안보조약, 북한의 소련, 중국과의 1961년 7월 우호, 상호협력원조조약이 그것이다. 또 공식적인 경제공동체기구가 남북한의 경우는 부재한 상황이다.

더욱 중요한 차이점은 독일은 2차대전의 전쟁주범으로서 4분단 및 연합군점령이라는 「죄과」의 결과로 동서분단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남북한은 대신 일본제국주의의 한반도 강점 철폐라는 과도기적 과정에서 연합전승국인 미소 군사역학관계의 「희생양」으로 분단된 것이다. 따라서 독일에서의 전승국인 미, 영, 프랑스, 소련은 「권리」를 앞세우는 반면, 미소 점령국을 비롯 일본 등 주변세력은 한반도에서의 「권리」의 주장보다도 「분단」의 공동 또는 개별 「책임」이 앞선다는 큰 차이가 있다. 또한 강조되어야 할 점은 베를린위기, 베를린장벽 구축등 동서독간에는 미소를 주축으로한 동서대결의 침예한 전운이 몇차례 감돌기도 했지만 동서독사이에는 분단이후 독일민족상잔의 전쟁은 겪지 않았다. 그러나 남북한은 동족상잔의 한국전쟁(1950-53)을 겪었고 최초의 UN집단안보 공동조치로 북한이 남침하자 남한은 미국의 주도하에 UN군의 도움을 받았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독일의 4분단 국제배경은 처음부터 독일문제의 독일화가 가능하지 않는 이중접근(Double-Track)을 선택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독일이 10월 3일 사실상 통일되는 날까지도 동서독은 미·영·프랑스·소련등 점령국문제를 통일문제 못지않게 함께 극복해야하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었다.

반면 한반도 문제는 일차적으로 한국민의 과업이므로 「한국문제의 한국화」가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대중·대소 동맹체제, 남한의 대미·대일 안보동맹 또는 협력체제, 주한미군 주둔등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Veto권을 갖고 있지 않다. 한반도 문제는 제1차적으로 남북한 국민과 그 지도자가 이론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환경에서의 동서독과 남북한의 차이는 2차대전후 독일분단후 역사적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히틀러의 독일은 1945년 5월 7-8일 연합국에 항복한다. 따라서 독일4분단을 가져온 국제회의

는 바로 독일항복 3개월앞서 열린 1945년 2월 4-11일의 알타회담과 항복후 두달만에 열린 포츠담회의(1945년 7월 17일-8월 2일)이다. 물론 독일분할문제는 앞서 1943년 11월 테헤란 연합국 정상회의에서도 거론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토의는 알타회담에서다. 알타회담의 3대기본의제는 ①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새정치질서 ② UN을 통한 자유세계의 구축 ③ 극동에서의 새정치질서 구축등이다. 1945년 8월 2일 작성 합의된 이른바 포츠담 의정서(Potsdam Protocol)는 독일영토 가운데 Oder-Neisse강을 따라 Danzig자유권을 포함한 영토를 폴란드 통치하에 둔다는 것이 골자가 된다. 또한 포츠담 의정서는 독일의 무장해제와 비군사화, 독일군수산업의 제거 및 통제, 전승국에의 배상, 나치당의 불법화, 민주주의에 기초한 독일정치생활의 재건설, 독일 전지역을 경제단위로 취급한다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독일중앙행정부의 창설도 결의한다. 이 중앙행 정부는 4개국 군사령관으로 구성된 통제위원회(Control Commission)를 돕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연합국에 의해 4분단된 독일과 4분할된 베를린은 연합국통제위원회의 통치·관할하에 들어간다. 그러나 1948년 3월 20일 소련군사령관이 연합군 통제위원회에서 퇴장, 사실상 프랑스, 미국, 영국 이른바 서방3개국 연합군과 소련군간에 관계로 이분화된다. 서방3개국이 그를 점령지역에서만 독일국가 창설을 제안하자 소련은 즉각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베를린시 봉수조치를 취한다(June, 1948 to May, 1949). 그러나 미군은 공군수송조치로 소련의 베를린 봉쇄에 맞선다. 이러한 미국의 강경대응은 결국 베를린에 대한 소련봉쇄의 유효성을 상실케 했다.

남북한은 38선을 남북으로 남엔 미군점령과 미군정(1945-48)이,

북엔 소련군점령하 소련후견 조선인민위원회 정치가 시작된다. 미소군 점령하에서 카이로회담, 모스크3상회담의 결과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나 15차례 협상끝에 결국 결렬된다. 미소간의 군사·안보·이념·정치대결이라는 국제적 냉전구조속에서 남한에서의 친미정부, 북한에서의 친소정부라는 미소의 정치목적이 상충한 상황에서 남북한 정치지도자들의 이념적 대결도 첨예화한다. 끝내는 1947년 UN결의에 의한 남한만의 (UN한국임시위원회의 자유총선 감시관할감독이 가능한 한반도지역) 이른바 「단독선거」가 1948년 5월 10일 실시되어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출범했다. 한달이 채못된 9월 9일 북에서도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출범했다. 따라서 한반도에 두개의 정체, 국체가 생기고 2년이 채못된 1950년 6월엔 북의 남침으로 한반도에서 전면전쟁이 시작되었다. 한국전쟁은 북에 소련 이외에 중국의 직접개입을초래했고 남엔 미국이외의 15개국 참전으로 UN화를 심화했다. 독일은 2차대전이라는 「외전」이 4개국 군사점령을 가져왔다면, 남북한은 동족상잔의 「내전」이 북한에 소련 간접개입 소련위장 개입과 중국의 직접개입을, 남한에는 미국을 주축으로 한 UN군 개입을 가져온 것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독일의 4분단이 「통일독일」의 새로운 위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연합국의 의도였다면 한반도 분단은 미소냉전 각축의 「부산물」이지 결코 「통일한국」이 미소등 주변국가의 군사적 위협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는 타율적 분단동기의 차이도 꼭 지적될 수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통일독일」은 아직도 유럽국가들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전쟁위협적 존재」라는 의구심을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한국」이 그러한 「위협적 존재」가 아님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웃 일본이 「통일한국」을 적어도

경제적차원에서 귀찮은 경쟁자로, 그리고 다른 3국—중국, 소련, 미국—이 한반도 분단현상유지를 한반도 통일에서 오는 안보·경제·정치차원에서의 불가예측성 때문에 대체로 선호하고 있으나 한국은 결코 2차대전외 전쟁주범이 아니며 또 그 결과로 연합국의 법적 틀에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남북한 국민과 지도자간의 진실한 의미에서의 통일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의견일치만 도출된다면 「한국문제의 한국화」가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독일이 국제차원(연합4개국 및 폴란드 등)의 통일 걸림돌과 국내차원—동서독간—의 통일장애물을 거의 동시에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다면 남북한은 일차적으로 남북한간의 통일장애물의 제거가 앞서고 부차적으로 북의 대소련, 대중국 동맹관계, 남의 대미, 대일본관계, 구체적으로 주한 미군문제 등이 따르게 된다는 큰 차이가 있다.

2. 기술적 차원

(1) 동서독 통합과정의 시사점

보다 구체적으로 동서독 통합과정을 크게 두가지 측면—변화의 근원과 변화의 주역과 주요목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섯단계를 거쳐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1단계; 1989년 5월에서 11월〉

제1단계는 1989년 5월 1일 독일이 아닌 헝가리 정부가 오스트리아 국경지대에 설치한 철조망장벽을 허물기로 결정, 2차대전 이후 최초로 유럽의 공산권—비공산권 국경선이 개방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 이는 동독인의 헝가리, 오스트리아를 통한 집단이민을 가져왔고 동독정치변화를 극적으로 가시화, 가속화하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신논단」(New Forum)이 동독에서 1989년 9월 10일 발족, “실증된 것은 간직하나 개조(Renewal)를 위해 공간을 찾자”는 슬로건으로, 즉 스탈린 사회는 지양하고 사회주의 발전(Socialist development)을 추구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동독공산정권에 새로운 이견집단(Dissident Group)으로 등장한다. 또 1989년 9월 12일에는 “민주주의는 지금”(Demokratie Jetzt)이 또하나의 이견집단으로 등장, “사회주의는 그의 진정한 민주적 형태를 찾아야 한다. 절대로 사회주의가 역사적으로 사라져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지금 위협받고 있는 인류는 서방 소비사회의 대안으로서 현존할 수 있는 진정한 사회주의를 갈구한다”

고 외쳤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들 이견집단이 주도한 인민들의 데모, 특히 Leipzig市를 선두로 한 인민봉기는 그 슬로건이 “우리는 인민이다”(We are the People)가 주요 골자로 인민의 명실상부한 주권의 회복을, 즉 민주적 평화적 혁명과 구질서의 붕괴를 외친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유선거, 여행의 자유, 인민생활의 개선, 사회주의의 개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따라서 제1단계에서는 동독주민의 동독내에서의 주권회복, 기본인권의 복원 등 민주화, 자유화, 개혁을 요구했지 아무도 서독과의 통합·통일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크게 주목된다.

따라서 Leipzig시의 데모는 동독전역으로 확산되었고 마침내 89년 10월 18일에는 동독 공산당수 Erich Honecker가 사임하고 그를 이어받은 Egon Krenz는 11월 9일 베를린장벽 철폐를 선언하기에 이른다.

〈제2단계; 1989년 12월에서 1990년 2월〉

제2단계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부터 1990년 3월 동독정권 출범후 최초의 자유총선이 있기 전까지이다. 이 기간의 두드러진 특징은 동독인민의 슬로건이 이제 “우리가 국민이다”는 주권·인권회복운동, 동독내 민주화, 자유화운동에서 “우리는 한 민족이다”(“We are one people”)라고 외치며 「통일」을 전면으로 앞세운 것이다. 또 서독정부와 동독의 모드로(Modrow) 정부간에 정치계획이 시작되는 기간이기도 하다. 이 기간을 이끈 주역들은 다음과 같다. 동독의 공산당(Socialist Unity Party, SED)은 우선 인기를 잃어버리고 낡은 공산당의 명칭을 바꾸는 작업부터 하게 된다. SED를 PDS(Party Democratic Socialism)로 바꾼다. 그러나 계속 「두 국가」정책을 고

수하며 민주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의 제3의 길을 강조, 집권공산당의 부분수정과 일부개혁만을 주장하고 나선다.

한편 이견집단들은 이른바 “원탁회의”(Round Table)을 조직한다. 새헌법, 새선거법, 동독비밀경찰(Stasi)의 정보자료등을 집중토론한다. 그러나 이들 원탁회의 이견집단들도 동서독 통일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고 새로운 동독정권의 창출이 그들의 초점이 된다.

서독정부는 이러한 동독내의 급변에 대응, 11월 28일 서독연방의회(Bundestag)에서 이른바 10개항 연방안을 콜수상이 제안한다. 주요골자는 3단계 점진적 연방통일방안이다. 1단계는 동독내에서의 자유총선, 제2단계는 동서독간의 새접촉, 연계기간을 갖는 것, 제3단계는 동독이 서독연방정부의 주(Lander)로 흡수, 병합하는 것이었다. 이 안은 미국, 프랑스, 영국정부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또 외상인 겐슈(Genscher)와도 사전 논의없이 발표된 것으로 알려졌다. 콜은 동서독통일은 통합된 유럽의 틀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12월 19일 Dresden에서 선언한다. 또 동독경제원조도 약속한다.

이러한 서독 콜수상의 10개항-3단계 연방통일방안에 상응한 동독인민들의 봉기가 Leipzig, Dresden, Berlin, Griefswald등 대부분의 도시들에서 일어나고 이제 슬로건이 “우리는 한 민족이다”라고 바뀌어 시민권회복과 통일까지를 요구함으로써 동독공산정권에의 압력이 훨씬 가중된다.

동독내의 이견반체제 집단들-Neues Forum, Demokratie Jetzt, Initiative Frieden und Menschenrecht은 3월 자유총선을 대비해서 “Bundnis 90”(90년 연합)을 결성한다. 이것은 전형적인 의미로서의 정당이 아니고 시민운동연합(Burgerbewegungen)이었다. 이 이견반체제운동을 이끈 동독작가 Stefen Heym, Christa Wolf등은 “독립

적 동독”(독립주권국가로서의 동독)을 요구 (Call for an Independent GDR)한 것이 주목된다. 이들은 이 선언에서 “우리는 서독정부에 사회주의적 대안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해서 서독에의 흡수병합식 통일에 정면 반대한다. 이에 맞서 서독 콜수상은 “맑스는 죽었다. -루드비히 에어하르트는 아직도 살아 있다.” (Marx is dead-Ludwig Erhard is alive)고 외쳤다. 그러나 동독인민들은 베를린장벽의 붕괴를 계기로 이전 서독과의 빠른 시일내의 독일민족통일(We are one people)을 요구한다. 따라서 역사의 아이러니가 생겨난 것이다. 동독공산당 호네커정권을 무너뜨리고 제1단계 개혁을 주도한 이견반체제 집단들-Bundnis 90-은 3월 자유총선에서 패자가 된다. 제1단계의 승자가 제2단계에서 패자가 되는 아이러니를 낳은 것이다.

제1단계, 제2단계 배경을 좀더 상세히 살펴보자면, 헝가리정부가 89년 5월 2일부터 점차적으로 오스트리아와의 국경 철조망을 제거하자 동독인들의 이주가 늘기 시작하여 8월에 이르면 일주일에 5,000명으로 늘어난다. 9월 10일 헝가리정부가 국경수비를 완화하자 72시간내에 동독난민이 12,000명에 이른다. 중요한 사실은 소련군이 이에 개입하지 않는다. 1989년 9월 25일에 Leipzig에서 반정부 데모가 일어나고 이를 계기로 반체제 반정부데모가 동독전역에 확산된다. (동독인 서독이민은 1989년 34만명이었고 1990년 1,2월에만도 12만에 달하였다)

한편 10월 7일 동독정부는 동독정권수립 40주년을 표면적으로는 성대히 치른다. 이 기념식에 참석차 온 소련공산당수 고르바초프는 동독공산당정치국회의에서 유명한 얘기를 한다. “뒤늦게 오는 자는 사형받게 된다.” (he who comes late gets punished by life)그러나 호네커는 고르비의 경고를 경청하지 않았다. 40주년기념 이틀뒤인 10

월 9일 Leipzig에서 다시 7만여 시민이 데모를 한다. 다시 그 두배가 넘는 시민이 10월 23일 데모를 한다. 새포럼(New Forum)이 이 봉기를 맨처음 이끌어 동독공산정권의 개혁과 민주화를 요구한다. 이에 동독공산당(SED)의 우당(Bloc parties)인 동독의 기민당과 자민당도 이 데모에 합세한다. 1946년 소련에 의해 SED와 강제로 통합된 SDP(사민당)도 SED로부터 분리를 선언하고 공산주의의 개혁이 아니고 다당제 민주주의를 내걸고 “환경중심의 사회주의 시장경제”(an ecology-oriented social market Economy)를 주장한다.

한편 동독공산당 정치국은 10월 18일 호네커를 사임시키고 호네커의 측근인 Egon Krenz를 임명한다. Egon Krenz는 자유총선을 약속하고 11월 9일엔 베를린 장벽철폐도 선언한다. 잠시나마 그는 SED의 권력을 쥐고 개혁을 주도할 가능성도 보였으나 11월 중순에 이르면 「통일」이슈가 최대관심사로 등장하고 호네커정권의 부패상이 뉴스를 주름잡자 그의 인기도 급강하한다. 1989년 12월 3일 그는 당서기직에서 물러난다. 동독수상 모드로(Hans Modrow)는 동독정부 붕괴를 막기위해 90년 5월 총선을 약속한다. (실제는 앞당겨서 3월 18일 실시됨)

〈제3단계, 1990년 2월부터 1990년 7월〉

제3단계는 동서독통일 템포의 주도권을 서독정부가 쥐고 그동안 최초로 3월 18일 동독에서 자유총선이 실현되고 7월 1일엔 화폐, 경제, 사회통합을 성공시킨 기간이다.

동독의 모드로 정부는 동독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시장경제체제로 여론의 전환을 꾀한다. 서독정부는 동독정부에 경제원조를 원칙적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나 몇가지 조건을 단다. 2월 모드로는

본을 방문, 서독정부에 당장 15billion DM의 원조를 요청하지만 콜 정부는 거절한다. 즉 3월 자유총선이 끝난뒤에 구체적 원조협의를 콜정부가 요구함으로써 긴급원조요청은 실현되지 못한다.

한편 콜 정부는 통일의 속도를 주도하기 시작한다. 원래의 1992년 말까지 화폐통합을 점진적으로 실현한다는 안을 포기하고, 동독이민, 난민들의 압력으로 통일속도의 가속화를 추진한다. 콜 정부는 기본법 23조에 의한 동독의 서독에의 흡수병합안을 채택한다. 그러나 서독 사민당등 반대당은 기본법 146조에 의한 점진적 통일접근 즉 새 동서독 거국 헌법제정에 의한 통일을 주장한다. 위에서도 지적한 바와같이 3월 총선에서 동독의 반체제 연합전선은 참패한다. 콜이 이끈 보수정당세력들 — 통일의 즉각 실현을 강령으로 채택한 — 이 승리한다. 1990년 11월 2일 모스크오에서의 콜, 겐셔와 고르바초프의 만남에서 소련은 동독의 자유총선과 독일국민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3월 18일 총선에서 콜수상이 주장하는 빠른 시일내의 독일 통일실현을 약속한 이른바 독일동맹(Alliannz Für Deutschland)이 대승함으로써 콜의 통일주도는 순탄대로를 질주하게 된다. 그 선거결과 개요는, 총의석 400석가운데 ① 독일동맹 48% (193석), (기민당 41%, 민주적개명당 1%, 독일사회연합 6%), ② 사민당22% (87석), ③ 자민당(21석), ④ 공산당(PDS/SED) 16% (65석), ⑤ 기타 9% (34석)이었다.

중요한 사실은 동독실현을 빠른 시일내에 이룩하겠다는 콜 수상과 연결된 동독의 독일동맹 그룹이 48%로 대승한 것과 동독공산정권붕괴에 앞장서서 데모를 주도한 이른바 “Round Table”그룹은 극히 미미한 지지밖에 못받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혁명 일반이론에서 지식인의 집권정부로부터의 불만, 일탈이 혁명초기의 조짐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즉, 동독지식인 문예인, 교인, 목사 등이 동독공산정부에 염증을 맨먼저 느끼고 이에 반기를 주도한 것은 사실이나 혁명과정에서 그들은 소수로 다시 전략하여 일반대중의 지지나 인기를 바로 잡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제4단계; 1990년 7월에서 1990년 10월〉

제4단계는 7월 1일 동서독 화폐, 경제, 사회통합이 실현되고 10월 3일 동독의 서독에의 흡수병합으로 (기본법 23조에 근거) 독일통일이 사실상 실현되는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통독과정의 내적외적 걸림돌을 제거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착실히 마련되는 기간이기도 하다. 7월1일 화폐, 경제, 사회통합을 가능케하는 Staatsvertrag (화폐, 경제, 사회통합) 협정이 5월 18일 이루어진다. 9월 12일에는 이른바 2+4협상과정을 거쳐 “독일에 관한 최종타결 조약” (Treaty on the Final Settlement With respect to Germany) 이 모스크바에서 조인된다. 또 동서독 통일조약이 서독 연방의회 (Bundestag) 와 동독인민회의 (Volkskammer) 에 의해 1990년 9월 20일 비준되고 다음날인 9월 21일 서독 상원인 Bundesrat가 승인하고 9월 23일 서독연방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45조와 1,000페이지가 되는 부칙을 가진 독일통일조약이 발효하게 된다.

5월 18일에 체결된 제1차 통합조약(경제통합, 사회통합)의 주요 내용은 먼저 경제통합은 서독연방공화국의 사회적시장경제 (Soziale Marktwirtschaft) 도입을 전제로 한다. 구체적으로 ① 사유재산제도 허락, ② 자유시장경제체제, ③ 경쟁원칙도입, ④ 상업자유제도입, ⑤ 상품, 자본, 노동의 자유이동, ⑥ 시장경제체제에 합당하는 조세, 재정, 예산제도 도입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화통합은 ① 서독도이치마르크(DM)을 유일한 통화로 한다. ② 서독연방은행(Deutsche Bundesbank)이 유일한 중앙은행이다. ③ 동독화폐의 서독화폐 태환율을 임금, 월급, 연금, 월세, 소작금, 장학금은 1:1로, 자연인의 저축금은 확정된 최고수준까지 1:1로, 모든 부채의 채권은 2:1로 한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5세미만은 1:1로 2,000동독마르크까지, 16세에서 60세는 4,000DM까지, 60세 이상은 6,000DM까지 태환한다. 이는 동독인의 개인 저축과 현금 총 180billion DM가운데 약 64billion DM에 해당한다. 동독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과 현금은 7월 1일 현재로 275billion DM으로 추산되었다. 따라서 개인소유의 저축과 현금의 경우는 1.5:1 정도이고, 전체 통화의 경우는 약 1.6:1로 태환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통합은 동독이 서독연방공화국의 사회제도에 상당하는 제도를 도입설치한다는 것으로 ① 연금보험, ② 건강보험, ③ 실업보험, ④ 사고보험, ⑤ 저소득자 부조제가 그것이다. 또, 동독은 서독을 모방하여 다음과 같은 사회보장 및 사회안정기금 보조제를 도입한다. ① 노사단체교섭자유성, ② 단체기관과의 단합, 연립의 자유, ③ 파업 권리, ④ 공동결정권, ⑤ 기업내 민주주의, ⑥ 해고방지법 등이다. 또, 사회통합실현과 동독에 산업불균형조정을 위해 “동독특별기금”(Sonderfonds Deutsche Einheit)에서 출발자금으로 115billion DM을 지원한다. 추가조항으로 또 토지구매자유를 포함하고 있다. 즉, 토지 및 생산수단 사유를 허용했다.

1990년 9월 12일 2+4조약인 전문10조의 “독일에 관한 최종 타결 조약”은 1990년 2월 캐나다의 Ottawa에서 협의를 시작, 체결된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독일이 폴란드에 대한 국경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 조약 제1조 1항은 “통일독일은 서독, 동독 그리고 전 베를린 지

역으로 된다. 통합된 독일국경의 규정적 성격은 유럽의 평화질서의 기본요소다"라고 못박고 있다. 또 제1조 3항에서는 "통일독일은 다른국가에 대해 현재 영토주장을 결코 하지 않고 앞으로도 어떤 그런 주장을 안할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2조는 "오직 평화만이 독일영토(토양)에서 일어난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제3조는 독일이 NATO의 정회원으로 남는 것을 허용하며 37만명 이상의 독일군을 둘수 없으며 원자, 화생방무기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제4조는 동독에 주둔하고 있는 37만 소련군과 23만 가족이 1994년까지 철수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소련군 철수에 따른 소련내 철수군 주택보조, 소련군 직업훈련지원 등의 명목으로 조약과는 별도로 서독이 소련에 13billion DM (7.5billion 달러) 지원약속을 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제5조 2항은 소련군의 독일주둔기간 동안에 프랑스군, 영국군과 북아일랜드군, 미군은 독일정부의 요청으로 (upon German request) 베를린에 주둔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약체결로 독일통일실현에 있어서 가장 큰 외적 걸림돌이 극복될 수 있었다.

또한 이 조약이 4국에 의해 비준되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동서독 통합일정이 10월 3일인 것을 감안, 10월 1일 연합 4국은 뉴욕에서 연합국의 독일 영토에서의 권리를 중지하는 조약을 체결, 일단 동서독의 10월 3일 통합이 가능토록 길을 열어 주었다.

역사적인 통독조약(Treaty betwee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on the Establishment of German Unity) 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한 문제는 ①재산권문제, ②낙태, ③기본법146조(통일을 위해 전 독일국민의 자유총선이 앞서야 하는가?), ④동독 비밀경찰(Staatssicherheit)

의 소득인 2백만을 포함한 6백만명 정보철 처리, ⑤수도, 의회, 정부의 소재지등이었다.

제1조는 기본법 23조에 의거하여 Brandenburg, Mecklenbur Western, Pomerania, Saxony, Saxony-Anhalt, Thuringia가 독일연방공화국의 “Lander”(주)로 편입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2조는 수도와 정부의 소재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 즉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이다. 의회와 정부의 소재지는 독일통일이 수립된 뒤에 결정될 것이다”라고 했다. 또 제4조는 독일기본법이 전 독일국민에 유효하다고 명문화했다. 제10조는 유럽공동체의 제반조약이 몇가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동독영토에까지도 유효함을 명시하고 있다.

동독관료의 신분문제(20조), 동독정부 및 공적자산 및 부채(21조), 재정자산(22조), 부채조정(23조), 외국과의 거래조정(24조) 등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노동 및 사회보장(30조), 방송(36조), 교육(17조), 과학 및 학술연구(38조), 스포츠(39조)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41조는 재산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주요골자는 1945과 1949년 사이에 몰수된 농업재산은 반환하지 않는다. 41조 2항은 재산이나 건물들이 긴박한 투자목적을 위해서는 반환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1990년 10월 13일까지 동독에 재산을 갖고 있는 서독인은 재산청구 신청을 내도록 되어 있다.

제42조는 잠재적으로 11차 서독연방의회에 144명만을 동독 Volks-Kammer가 선출, 파견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10월 3일 통독이후 소집된 통독의회에는 연방의원 519명과 동독공산당의원 24명을 포함한 동독의원 144명이 참석, 총663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낙태(abortion)문제는 큰 쟁점의 하나로 등장했다. 동독에서는 임신후 12주까지 여자의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된 반면, 서독에서는 의학적,

우생학적, 사회적 이유에 의한 예외를 둔 것 외에는 12주내 낙태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일헌법 31조 4항은 적어도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동독과 서독에 두개의 법이 적용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법적용을 낙태하는 장소(place of the crime)에 따라 다르게 할것인가 아니면 임신부의 주거지(place of Living)에 준거하느냐 하는 문제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146조 문제는 10월 3일 통합으로 사실상 23조파가 승리하고 146조파가 승복한 것으로 끝났다.

<제5단계; 1990년 10월부터—현재>

이 기간은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동서독의 경제, 사회, 교육제도의 통합과 변신, 정치통합등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 통일비용 등이 두드러지는 시기라고 볼수 있다.

제5단계는 아직 진행중이므로 이의 내용분석대신에 독일통일의 성공에서 나타난 몇가지 두드러진 사실과 배경설명으로 대체해 보자.

첫째로 동서독 정치지도자는 물론이고, 서방지식인들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독일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무도 예측 예상 못했다는 사실이다. 콜수상 자신도 사태진전과 더불어 「통일」의 고삐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밀물처럼 밀어닥치는 대세에 비전과 확신을 가진 동서독지도자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처음부터 예상, 예견하고 축적해온 법적제도적 장치와 그 발전 성숙이 오늘을 있게 한 것이다.

둘째로 위의 「대세」를 가속화한 것은 헝가리가 오스트리아 국경을 개방한 1989년 5월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개방뒤에는 헝가

리가 동구권 국가들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서방과의 접촉, 교류, 부분적 자본주의의 실험을 해온것을 상기시킬 수 있고 또 그러한 헝가리 개방·개혁정책이 소련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더욱 자리가 굳혀진 배경을 간과할 수 없겠다.

세째로 서독쪽에서 보면 빌리 브란트 수상의 Ostpolitik를 손꼽을 수 있고 그 구체적인 정지작업(결실)이 1970년 8월 12일 체결된 모스크조약과 1970년 12월 7일 체결된 폴란드·서독조약이라고 할수 있다. 이 두 조약의 요체는 폴란드와 그리고 동서독의 기타 나라들과의 현존 국경이 “침범될 수 없는 것”. (Unverletzlich)이라는 것이었다. 또 이와같은 맥락에서 독일기본법 전문에서 강조하는 독일통일은 전독일국민의 자유스러운 자결권(Free self-determination)에 근거해 이룩한다는 대목이 주목된다. 또, 1972년 12월 21일 서독이 동독과 체결한 기본조약(Basic Treaty)을 손꼽을 수 있다. 이 조약은 “두국가 하나의 민족”(Two states-one Nation)틀을 서로 인정했고 가족재결합, 여행등을 가속화했으며 1973년 9월 동서독이 UN에 동시 가입하는 틀을 마련한 것이다.

네째로 1975년 헬싱키에서 시작된 유럽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의 성과를 빼놓을 수 없다. 동서구 유럽의 상호 신뢰구축, 여행이주자유의 틀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990년 7월 1일 런던에서 열린 NATO정상회담뒤 발표된 이른바 London선언이 제시하는 바와같이 CSCE의 상대적 부상, 제도화와 NATO의 상대적 위상격화와 점진적인 재편이 이를 잘 입증해 주고 있다.

다섯째 동서독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분야의 경쟁에서 지난 40년간의 실적이 동독이 패배했다는 사실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예를들면 동독은 경제생산력이 서독의 40%수준(The Economist, 1990년 6월 30일, p. 11)이며 동독의 중앙집권화된 계획경제의 실패는 위에서 지적한 사회, 경제, 화폐통합의 과정에서 나타난 동서독 비교에서도 뚜렷이 들어났다. 즉 서독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동독의 「모델」이 된 것이다.

끝으로 동서독간의 대결, 대치상태를 깨고 Ostpolitik를 주도한 SPD의 브란트의 정책을 좀더 심층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브란트정부는 통독을 위해 3가지 기본입장(틀)에서 시작했다. ① 전 독일국민의 자결권, ② 유럽평화질서라는 틀속에서 국가 통일과 자유의 추구, ③ 전 독일과 베를린에서의 연합국의 권리와 책임의 인정이 그것이다. 이 3가지 기본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 첫단계로 소련 및 동구권국가들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는데 힘썼다.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1972년 8월 12일의 서독-소련조약은 2차대전뒤 동서독 유럽국경의 “Inviolability”를 그 핵심으로 하면서도 잠정적인 협약(a modus vivendi)인 것이 특징이었다. 따라서 이 조약 제3조는 “유럽의 자유는아무도 현존하는 국경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때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1970년 12월 7일 서독·폴란드와의 조약에서도 폴란드의 독일과의 현존국경의 “Inviolability”을 재확인하고 오직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방식만을 인정했다. 그러나 서독·소련 조약체결에서도 서독은 “이 조약이 유럽에서의 평화상태를 추구하고 또 그 틀속에서 자유자결권에 의한 독일민족의 통일회복이라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정치목적과 결코 상충하지 않는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요컨대 Ostpolitik는 현실주의(realism)과 정직성(사실성) (Aufrichtigkeic)에 바탕을 둔 통일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브란트 동방정책의 자문역

이었던 Egon Bahr는 이를 “접근에 의한 변화”(Wandel durch Annäherung)이라는 슬로건으로 표현했다.

브란트사민당의 Ostpolitik에 맞서 서독 CDU/CSU에는 두가지 접근방식이 쟁점을 이루었다. Frauz Josef Strauss, Baron Vonv und zu Gutten berg는 프랑스와 독일의 파트너로 서구연합체제 (a Confederated Western Europe)를 마련하여 그 틀속에서만 오직 동서독통일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위의 이른바 드콜파와는 달리 CDU/CSU내 이른바 대서양파 (Atlanticists)는 독일정치와 미국을 직결시켜 미국과 소련관계의 근본적인 변화속에서만 통독이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통일독일을 실현한 이 시점에서 보면 SPD와 CDU/CSU두파들의 통일접근방법들이 모두가 다 긍정적 건설적으로 기여했다는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미소 냉전체제의 화해 협력체제에로의 전환, 알타체제의 몰타체제에로의 대체, 프랑스, 독일중심의 구주공동체의 1992년 단일시장안의 진전, 브란트 동구정책의 성공, CSCE의 강화등 모두가 오늘의 독일통일실현의 필요한 주춧돌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동서독통일의 정지작업—외적내적 통일환경조성과 기반강화—을 살펴볼때 남북한은 많은 기대와 희망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강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더구나 동서독과 달리 외적사슬이 큰 걸림돌이 아닌 한반도의 경우는 내치가 관건이 아닐 수 없다. 남한의 국내정치—정치민주와 자유화의 착실한 달성, 경제성장과 사회보장제도의 견실한 실적—이 최대 급선무이다. 북한의 국내정치도 자유의 물결이 틈새로 스며들어 언젠가는 브란트가 그의 동방정책에 근거할 수 있었던 현실주의, 정직성이 북한에 싹틈으로서 남한의 대

북한정책도 하나하나 결실이 맺어지는 전기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2) 통일에 따르는 문제

가. 통일비용

서독이 동독을 흡수, 병합함으로써 사실상 독일통일은 실현되었으나 이를 전후한 통일비용은 계속될 전망이다 그 비용도 궁극적으로 알수가 없다. 「비용」개념을 확대해석해서 정신적, 심리적인 것 등 이른바 비금전적 비용과 금전적 비용을 포함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실령 금전적 비용만으로 범위를 좁혀서 보아도 “금전 통일 비용”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 차이가 엄청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공포된 비용만도 엄청난 숫자인 것은 사실이다. 서독정부가 1990년 예산에 책정한 동독지원 추가예산이 420억 DM이고 1991년엔 700억 DM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자본시장 차관액수만도 430억 DM으로 알려졌다. 한 추계에 의하면 앞으로 연방정부는 7,750억불을 5년간 쓰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하나 보기를 들면 서독연방정부의 동독에의 농업지원액은 6.2billion DM, 수출지원이 5billion DM, 의료지원이 2billion DM, 특별기금이 115billion DM으로 총합 126.4billion DM으로 공포된 바도 있다. 이는 또한 동독기업의 부채가 118billion DM이고 동독정부부채는 85billion DM으로 알려졌다으므로 어떤 형식으로든 이러한 동독정부 및 기업부채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다른 통계에 의하면 통독기금으로 600억불을 책정, 앞으로 5년간 동독 재정적자를 메꾸어주며, 6,000억불을 동독

기업 활성화에 쓸 것이며, 4,000억불에서 5,000억불을 사회공공지원(교통, 통신, 도로등)에 투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연방정부 통일비용에는 1994년까지 4년동안 단계적으로 철수하기로 합의한 동독내 소련군(37만과 가족23만)에 드는 비용이 별도인 것이다.

동독주재 소련군은 월 25마르크(13불 60센트)를 받고 있어 동독기준으로 봐도 「빈민」생활을 하고 있고 또 문제는 이들이 소련귀국을 원치않고 있다는 것도 주목된다. 이 비용은 이들 병력의 소련내 주택건설비용으로 7.6내지는 8.6billion 달러가 책정되고 또 이들의 직업훈련등을 위해 6억billion 달러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고 한다.

다른 소식통에 의하면 1994년까지 36,000Unit의 아파트 건설을 독일연방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연방정부는 10,000Unit정도 건설을 약속했고 그 비용은 60billion DM(3billion달러)로 추산되기도 한다. 별도로 연방정부는 소련에 30억불의 은행차관도 제공키로 약속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한편, 서 베를린시의 12,000명의 미, 영, 프랑스 연합군병력 가운데 미군 6,000명 가운데 700명 가량이 금년 3월 철수했고 소련군이 완전 철수하는 1994년까지는 연합군도 모두 철수할 계획이다. 요컨대 통일비용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통일에서 오는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손익계산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이 틀림없다. 더구나 이러한 통일비용의 엄청난 숫자와 불확실성은 연방독일국민등의 통일에의 환상과 환희(Euphoria)를 우려와 짐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10월 3일 통독실현 직전에 Der Spiegel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서독시민 29%가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이를 잘 시사하고 있다. 또 이 엄청난 통일비용을 연방정부의 정부부채로 감당할 것인가, 소득세, 특별소득세, 간

접세, 부가가치세로 바꿀것인가 등 큰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나. 동독 국영기업체와 실업자문제

동독에는 통일전 8,000개 이상의 국영기업체들이 있었고 이들 기업들의 경영자들의 대부분이 공산당원이거나 비밀경찰(Stasi)과 밀접히 동조·협력해 온 인물들이므로 경영인의 인사처리, 경영의 합리화, 채산성고양, 공장존폐 및 시설현대화, 새 경영철학과 경영원리 훈련등 수많은 난제가 앞에 닥쳐있다. 더구나 동독 노동인구는 970만으로 추정되며 이중 37%만이 취업하고 있으나 이들 취업자들도 절반정도가 실업자가 될 전망이다. 독일 농민의 경우 80만명 가운데 그 절반인 40만명이 실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동독군대 13만 5천 가운데 이제 10만정도가 잔류하나 그 가운데 5만정도가 독일연방정부군에 흡수된다는 보도다.

다. 동독 비밀경찰(Stasi)문제

동독 비밀경찰은 주로 서독과 NATO국에 침투시켜 통제해온 스파이가 4,000명정도, 85,000명 정도의 정식직원과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첩보원을 가진 방대한 조직으로 앞으로도 계속 큰 쟁점의 하나다.

Stasi와 서독정부의 첩보 스캔달문제도 골치거리의 하나다. 최근 47세인 뮌히 출신인 Gisela G. 는 연방정부 정보기구인 BND에서 1973년부터 근무해왔으나 그가 동독정부에 1968년부터 1989년까지 스파이역할을 해온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브란트수상 당시 Guillaume라는 개인비서 스캔달에 비해 훨씬 중차대한 사건으로 보고 있는 이

스캔달은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다. 이 여자는 서독정부의 최고 비밀정보를 접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최고급비밀을 서독 콜수상이 먼저 접했는지 Stasi의 책임자였던 Erich Mielke가 먼저 알고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이 여자의 첩보 2중간첩 활동이 중요시 되고 있다.

Gisela G. 의 체포와 함께 Klaus Kuron (54세) 과 Gabriele Gast (47세)도 곧바로 연루 체포되었는데 Klaus는 동독에 이중간첩자들 정보를 제공하고 Gabriele는 서독 수상이 받는 정보들을 동독에 건네준 것으로 알려졌다. Klaus는 1990년 2월까지도 첩보활동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정부 내무상, Wolfgang Schauble에 의하면 1989년 한해 검거체포된 23명 첩보스파이 가운데 11명이 동독정부에, 6명이 소련에, 3명이 루마니아에, 2명이 폴란드에,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정부에 첩보활동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1990년 상반기까지 59명이 첩보스파이 행위로 체포되었다고 밝혔다.

Stasi와 관련한 테러행위도 큰 골치덩어리의 하나다. 연방정부 보고에 의하면 극우조직도 28, 300명에서 35, 900명으로 1989년에 증강했으며 살인행위 1인을 포함해서 103개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더욱 위험한 존재로는 1970년대 초기의 이른바 Baader-Meinhof gang의 후계자인 적군파 (the Red Army Faction)은 56, 000명 회원에서 41, 000명으로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1989년 한해동안에 837건의 불법행동을 자행했으며 그 가운데는 독일은행총재살인, 폭탄공격 6건, 방화 685건, 인신침해 88건등이라는 것이다. 적군파의 주요 인물 살해사건만 보더라도 1974년 11월 베를린 판사 Gunter von Drenmann살해, 1977년 4월 연방검찰 총장 Siegfried Buback살해,

1977년 7월 트레스든어 은행총재 Jurgen Ponto살해, 1977년 9월 고용자협회장 Hanns-Martin Schleyer의 납치 및 한달뒤 살해, 1985년 2월 군수산업 사장 Ernst Zimmermann의 살해, 같은해 8월 미군기지 폭탄투척으로 사망 2명을 포함한 수십명 살상, 1986년 Siemens의 경영인 Karl Heinz Beckurts살해, 같은해 10월 외무성 고급관리 Gerold von Braunmuhl살해, 1988년 9월 경제성 고급관리(동서독 화폐 경제 통합협상 서독대표)인 Hans Tietmeyer의 암살시도, 1989년 11월 독일연방은행총재 Alfred Herrhausen살해등이 두드러진 사건들이다.

Stasi와 적군파의 연계 그리고 테러행위들의 직간접연루등도 앞으로 계속 밝혀져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다. 나아가서 Stasi와 KGB와의 연계나 동독이 국제 테러훈련장으로, 국제테러 두목들의 은익처로 제공되어온 사실도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보기를 들면 팔레슈타인 해방인민전선(PFLP) 책임자인 Georges Habash, 팔레슈타인 테러두목인 Abu Nidal, 1972년 뮌헨 올림픽때 이스라엘 올림픽팀을 집단살해한 테러두목 Abu Daoud등이 동베를린을 은식처로 삼아온 것이 좋은 보기다.

라. 동독내 외국인 노동자 문제

베트남, 쿠바,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파키스탄, 모잠비크, 기타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거의 10만명에 가까운 외국인 노동자들의 본국송환 및 이주취업문제가 있다. 베트남 노동자만해도 5만명이나 되며 이들 대부분이 본국송환을 꺼리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마. 공사재산권, 국가 및 기업부채문제

동독내 공사재산권 그리고 국가 및 기업부채문제등도 앞으로 계속 다루어야할 중요한 통일과제들이다.

바. 언어 이질성 회복문제

동서독간 43년간의 분단과 단절에 따르는 언어의 이질성 극복과 독일어의 회복을 위해 서독 Mannheim Bibliographisches Institut AG 와 동독 Leipzig 발행인간에 독일어 11만단어를 수록하는 전독일사전을 1992년까지 출판하기로 한것도 주목된다. 이러한 공동합작사전 출판은 1947년 서독의 Wiesbaden과 동독의 Leipzig가 출판한 전독일사전(Duden) 이래 첫 시도인 것이다.

사. 연방정부 기업들의 동독 투자

독일연방은행은 동독에 134개 지점의 설립을 위해 148.5Million DM (88.6Million달러)을 지불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동독국책은행인 독일신용은행(Deutsche Kreditbank)와의 공동 합작으로 49%를 독일연방은행이 차지하는 것으로 전독일 신용은행의 122개 지점이 이 합작운영에 들어간다. 독일신용은행은 47%를 소유하게 되고 나머지 4%는동독내 국영호텔연합, 소매상연합, 화학산업, 소비자 협동조합등이 소유하게 된다. 이 협의로 8,500명 독일신용은행직원을 재기용하고 독일연방은행이 800명을 추가 임용하기로 했다.

사기업으로는 Volkswagen이 동독의 Zwickau에 5billion DM을 들여 공장을 설립키로 했고, 그리고 Mosel에는 1995년까지 1.9billion 달러를 투자하여 1995년까지 자동차 25만대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Daimler Benzs는 2billion DM을 들여 Ludwigsfelde, Bertelemann에 트럭생산공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뮌히의 한 경제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1990년 10월 1일 현재 서독기업들의 59%가 동독에 이미 기업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러나 그 가운데 3%만이 동독내에서의 제조업에 직접개입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동독기업 특히 공기업(Treuhandenstalt)들의 회생 및 활성화를 위해 연방정부는 15billion DM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컨대 1990년 연방정부 적자를 66.8billion DM로, 그리고 공기업 부분 적자를 100billion DM으로 급증시키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아. 임금, 년금, 생활수준 재조정 문제

동서독 통일전 공식통계로 나타난 동서독의 경제력, 생활수준, 삶의 질보다는 실제로 통일후 들어다 본 동독은 훨씬 뒤떨어지고 가난하고, 삶의 질이 형편없는 것으로 속속 들어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하나의 보기를 들어보자.

찰스 디킨스가 프랑스 혁명당시를 묘사한 극히 대조적인 “두도시의 이야기”의 대상이 된 파리와 런던에 못지않게 동서독 통합으로 우리는 「같은 민족 두 국가의 이야기」, 또는 「한도시의 두 이야기」를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이 합쳐지면서 지난 43년간 꿇긴 베를린의 Adalbertstrasse이야기를 들어보자. 이시가 65번지와 75번지는 불과 100야드가 떨어져 있지만 두 번지에 사는 시민들의 생활의 골은 깊기만 하다. 동베를린쪽의 65번지는 아직도 석탄을 사용해서 집을 따뜻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검은 석탄덩이와 싸워야 한다. 그러나 75번지에 사는 서독시민은 집안 방

에 있는 온도기를 조절만 하면 된다. 65번지 거주자는 복도에 있는 화장실을 다른 가족들과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나 75번지 거주자는 12,000불을 들여 새로 치장한 개인용 화장실을 사용한다. 65번지의 노동자 아파트는 페인트가 낡아 벗겨진채 그대로 방치되고 아파트 계단의 전기불도 고장이 나서 작동하지 않으며 공동 TV룸도 굳게 닫힌채 사용할 수 없고 앞길도 쓰레기가 즐비하고 나무도 없다. 대조적으로 75번지 앞길엔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아파트 거주자들은 그들의 창문을 무지개빛 꽃들로 곱게 장식해 놓았다. 이는 통독후 Washington Post기자 Mars Fisher가 관찰한 동서독시민과 그들 생활의 단면이다. 필자가 지난 7월 잠시 베를린을 들렀을때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온 유학생이었던 젊은이가 운전하는 택시를 탄일이 있다. 이 택시 운전수는 동서독인을 자기는 곧바로 가려낼 수 있다고 했다. 입고 있는 옷의 저질, 움추러든 몸가짐과 자세, 그리고 피부색깔과 얼굴모습만 보면 그는 곧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43년이 넘는 각기 다른 생활양식, 식품, 식용생활 등이 동서독인을 이제 서로 「다른 얼굴」,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 다시 「같은 얼굴」, 「같은 사람」 만들기에 힘껏 노력과 정력을 쏟고 있다.

아직도 「다른 얼굴」, 「다른 사람」만들기에만 시간과 자산을 낭비하고 있는 남북한 우리 민족에겐 한없이 부럽고 「자괴」까지를 가져다 주는 독일민족의 장점이 아닐 수 없다. 언제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얼굴」, 「같은 사람」만들기에 함께 노력할 날이 올 것인가?

통일 독일과 한반도

1990년 12월 28일 인쇄

1990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처 통일원
(제1교류협력관실)

인쇄처 서라별인쇄주식회사
(732-1851)

비 매 품

10 20